



2면 · <만화사랑방> 2002 인권 10대 뉴스

3면 ·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부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19호 색인

/263

# 인권하루소식

2002년 7월

(제2125호 ~ 제2145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2일(화)

제 21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 법무부훈령으로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재소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쓴 편지를 교도소당국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중)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2000년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다른 출소자의 연락처를 문의하기 위해 모 언론사에 편지를 썼으나, 구치소측은 '억울한 일을 당해 청원과 고소등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문제수로 인식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편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편지의 발송을 불허했다.

또한 구치소측은 오 씨가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리기 위해 쓴 편지 역시 '교도소의 처우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며 발송을 불허, 폐기했다.

이에 오 씨는 같은 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러한 소송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이 기사를 삭제한 채 신문을 보도하도록 한 구치소측의 행위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내용도 소송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법원(서울지법 민사12단독 판사 정진수)은 언론사에 보내는 편지를 구치소측이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는 한편 나아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 폐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

라는 적극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 씨는 소송절차를 통해 피고의 서신발송불허행위 등을 다룰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구치소 당국이 오 씨의 중요한 집필 문서를 변호사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 뒤 폐기한 것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치소가 서신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집필제도 개선안'은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

하다며 "이를 근거로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소자 집필제도개선안(법무부 훈령)은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교도소 내 생활내용 등을 청원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알리는 서신 및 문서를 구치소측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소송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열람시키는 것이 구급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와 직접 관련된 정보인 위 신문기사를 삭제해 그 열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이상의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재소자와 변호인의 접견 및 서신을 통제해 온 교정기관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유해정]

## 장애인 이동권 집회 강제해산

### 피해장애인 포함 30여명 집단연행...다수 부상

"이제는 더 이상 대중교통인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치고 죽을 수 없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분명 정부의 책임이다. 그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공개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돌입한다." 1일 12시경 서울 광화문역 개찰구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등, 아래 이동권연대)는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1월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이동권연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즐기치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9월에 영등포구청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나더니, 올 5월에는 발산역에서 오이도역과 같은 추락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다. 이에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러한 장애인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듣기 전에는 한발도 움직일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곧이어 집회참가자들은 천막을 올리고 쇠사슬을 휠체어에 감는 등 농성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천막과 쇠사슬을 무자비하게 철거했다. 그리곤 연행을 무기로 해산을 강요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장애인들을 격리시킨 채 비장애인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끝으로 장애인 한명당 전경 대여섯명이 달려들어 장애인들마저 전경차로 연행했다. 휠체어 채로 옮겨지는 장애인들의 몸부림은 그야말로 처절했다.

결국 이날 장애인 집회는 시작 4시간만에 강제 해산되고, 무기한 천막농성은 무산됐다. 하지만 이날의 투쟁은 경찰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분노를 언제까지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던졌다. [범용]

○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

청소원은 아무 생각 말아라?

학교 사람들과 밤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 이것저것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나왔다. 나도 할 이야기가 많아서 두발규제나 체벌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학교로부터 탄압이 없었어?"였다.

내가 직접적으로 징계를 받은 기억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다. 90년대 중반 '학생복지회'가 만들어졌을 무렵, 많은 선배들이 교장실에 불려가 탈퇴를 종용당했던 일도 있었고, '중고등학생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부산, 광주 등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런 탄압이 부당한 것임은 틀림없지만 학교에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자기네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이고, 교칙상으로도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학교의 교칙에는 이런 학교에 저항하는 활동을 규제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 "학교장 허락 없이 외부활동 금지" "일체 정치활동 금지" 등의 조항이 있어, 학교장 허락이 없는 어떠한 활동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최대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외부활동'이나 '정치활동'이, 대체 어떠한 뚜렷한 기준이 있다는 것인가?

따지자면, 학교의 '외부'인 집에서 학교 흉을 보는 일이나, 집에서 아버지와 조선일보를 가지고 토론하는 행위도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기준이 애매 모호한 것을 떠나서 이런 조항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와 그 책임자인 정부는 청소년의 정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물론 내 경험상으로는 교칙에서 이런 조항 하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조항은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의 어떤 관점에 기인한 것이다. 문제는 학교가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최대한 효율적으로 통제를 해서 무사히 명문대학교에 보내는 것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만약 학교가 정말 학생들을 위한다거나, 나라를 위한다면 청소년들의 정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배려해줘서, 학생들을 높은 정치 수준을 가진 시민으로 양성하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학생들을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제와 유신 독재 시절의 습관이 그대로 배여 있다.

얼마 전 6. 13 지방선거가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채 끝났다. 그 배경에는 기존의 기성정치에 실망한 국민의 정서가 깔려있었지만, 적어도 청소년기부터 정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는 건 좀 지나친 욕심인 것 같다. 뭐,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육이은 : 중고등학생연합 전 대표)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1. 주한미군 문제 끝날 날 없어  
여중생 미군장갑차 사망사건 규탄 집회, 미2사단 기지 앞에서 열려→미군, '민중의소리' 기자 2명 연행, 플라스틱 밴드로 손 묶어 의정부 경찰서로 넘겨(6. 26)→숨진 여중생 유가족, 사고차량 운전병 등 미군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6. 27)→의정부지원, '민중의소리'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6. 29)

2.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말만 '자율'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새로 제정...학생회 권한 없고, 체벌 허용, 학생생활 세부까지 간섭하는 내용(6. 26)→교육부, 체벌규정 등에 대한 반발에 예시안은 강제규정 아니라며 해명(6. 28)/ 교육부, 학교내 성희롱사건의 신속처리 위해 교육청에 '성희롱사건 전담반' 신설 발표(6. 27)

3. 계약해지, 연행, 무임금... 그 다음은?  
하나로통신, 직접고용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노조 파업돌입하자 계약해지 통보(6. 25)/ 경찰,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등 2명 명동성당에서 연행(6. 25)/ 가톨릭의료원·경희의료원 등, 파업노동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6. 27)/ 민주노총·공무원노조, 구속노동자 석방과 공무원노조 인정 촉구(6. 27)

4. 51만원으로 살아 보라!  
전북일반노조·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경총 앞 천막농성(6. 25~28)/ 최저임금심의위, 월51만4150원으로 최저임금(2002. 9~2003. 8) 결정...노동계,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반발(6. 28)

5. 부시 말대로 하면 '독립국' 맞아?  
부시, 아라파트 의장을 권력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3년 이내 팔레스타인 독립국 창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중동평화안 발표(6. 24)→부시, '팔 자치정부 수반 교체되지 않을 경우 팔에 대한 간접지원도 중단하겠다' 경고(6. 26)

6. 기탁 : 의문사진상규명위, 83년 녹화사업 관련 고문당한 뒤 자살한 한희철 씨의 죽음에 대해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인정(6. 26)/ 백혈병환자·사회단체회원 등, 글리백 약값인하 요구하며 한국노바티스사 앞에서 항의 농성(6. 27)/ 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에서 공식 출범(7. 1)

○ 주요 판결  
미 연방항소법원,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부시 대통령과 의회 강한 반발(6. 26)/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결정(6. 2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3일(수)

제 21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신성한' 법원에서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엄연한 사업장인 법원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체계 정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파업 중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명호총합기술개발 소속)은 2일 아침 법원 출입을 통제당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통신·전기·기계·방재·영선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명호개발지부 나용근 사무장은 "대법원 총무과장이 '당신들의 사업장이 아니니까 들어오지 못한다'며 출입을 저지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유족들, 7개월만에 장례 치르기로

지난해 11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 이모 경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발생 7개월, 검찰 송치 5개월만의 일이다. '진주총기사건'은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깨 후배를 다치게 한 권모 씨를 이 경사가 집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본지 01년 12월 8일자, 20일자, 02년 1월 19일자 참조>

당시 경찰 측은 △권씨의 부인 정모 씨로부터 '남편이 집에서 아들을 갈로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고 △권씨가 출동한 경찰들과 5분간 몸싸움을 벌이다 김모 경장의 권총을 빼앗으려 하자 이 경사가 총을 쏘았으며, 사건을 '흉기난동에 따른 정당방위'로 몰고 갔다. 반면 유족 측은 부인 정씨의 신고내용은 사실무근이며 5분간 몸싸움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다며, 사건조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결국 창원지검 진주지청(검사 김남우)은 '피의자가 불과 1미터 내외의 사거리에서 권씨의 대퇴부 이하를 맞추지 못하고 동인의 복부에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총기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경사를 기소했다. 이후 유족과의 면담과정에서는 담당 검사로부터 문제가 됐던 '인질난동'이나 '총기탈취' 등의 행동이 없었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죽은 권씨의 형 경헌 씨는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사실은 이 경사에게 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라고 평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죽은 권씨의 장례식을 오는 7일 노제 형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한편 유족과 사회단체, 죽은 권씨의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경찰 총기 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한영수 등)는 사건 당시 부인 정씨로부터 '인질난동' 사실을 접수받았다고 했던 진주 상대파출소 김모 씨, 사건의 조작·은폐에 가담했던 진주경찰서 수사과장, 당시 수사의 총책임자였던 진주경찰서장 등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 (범용)

원 지회장 등 3명을 서초경찰서로 연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난감해하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법원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쟁의행위를 해선 안 되고, 법원은 집회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란 노동쟁의전담부서인 고등법원 특별11부의 소견을 근거로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곳은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공간이기도 하다"라며, "전체 법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들이 법원에 모여 파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견해"라고 말했다. 또 강 변호사는 "파업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집시법보다 상위에 있다"라며, 노동자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저임금에 뒤죽박죽 임금체계 한편, 명호개발 측은 노조의 요구엔 귀를 막고 있어 파업의 조기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조는 △직급별 기본급 상향조정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상여금, 월차·연차 수당 책정 △일·숙직근무 시 1회당 1만5천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사측이 노동자별로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을 정한 후, 급여명세서 상에 이것의 50%를 기본급으로 하고 일관된 기준 없이 10여가지 항목의 수당의 합이 나머지 50%가 되도록 나눠 적는 식이다. 이 때문에 한달도 채 일하지 않은 노동자의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가 하면, 여러 날 당직근무를 한 사람보다 당직근무일이 적은 (⇒ 2면으로 이어짐)

# 국제형사재판소 '역사적' 출발

##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 규정'이 공식 발효되자, 세계는 았다 튀 '역사적 순간'을 환영했다. "최근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인권기구"로 찬사를 받는 이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2일 국제인권법학회와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ICC의 역할과 국내 수용의 문제를 살펴본다.

### ● 국제형사재판소(ICC)란?

ICC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기구다. 90년대 유고전법재판과 르완다전법재판 등 유사한 형사재판이 있었으나, 이들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한시적이고 사후적인 처리기구였던 데 반해, ICC는 미래의 중대인권범죄들을 처리하기 위한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98년 로마에서 열린 회의에서 찬성 120개국, 반대 7개국의 표결에 따라 ICC규정(로마규정)이 채택됐고, 올해 4월까지 66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케 됐다. 올 9월 1차 당사국회의를 갖는 ICC는 내년 1월 재판관을 선임하고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창립회의를 갖는다.

### ● 무엇을 다루나? - 대상범죄

ICC규정 제5-8조에 따르면,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다루게 된다.

여기서 '반인도적 범죄'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규정되며, △살해 △질멸(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하는 등 고의적으로 생활조건에 고통을 가하는 것) △노예화 △고문 △성범죄 등을 포함한다.

다만, ICC는 규정발효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즉 2002년 7월 1일 이전의 범죄에 대해선 처리권한이 없다. ICC규정

에 새로 가입하는 국가의 경우, ICC 관할권은 그 국가의 가입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처럼 소급적용을 금지한 것은 좀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 이유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태현 교수(한양대)는 "소급적용금지 ICC규정 발효일 이전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발효일 이전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선 국내 법원이나 다른 국제재판소에서 처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 ● 관할권 문제

ICC는 당사국에서 해당 범죄를 처벌할 의사가 없거나 혹은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건을 회부한 경우와 비당사국이면서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엔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관할권을 적용할 수 있다.

규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관할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국가동의가 필요인가'라는 문제가 주요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미국은 ICC 관할권 행사의 조건으로서 관련국의 동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논란 끝에 "ICC규정의 당사국이 되면 자동적으로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 ● ICC 국내수용을 위한 과제

ICC규정을 국내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조항이나 공소시효 문제와 같이 ICC규정과 상충될 수 있는 국내법 규정들을 정비하는 작업이 뒤따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관련법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국 교수(서울대)는 "ICC규정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피의자 인권보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법이 ICC규정 수준으로 피의자권을 규정하지 못한다면, ICC의 관할을 받는

가장 극악한 범죄인보다 국내법원의 관할을 받는 경범죄자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한국정부의 태도

한국정부는 2000년 3월 ICC규정에 서명했으나, 2년여 동안 국회비준서 제출을 미뤘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조약과의 남남표 심의관은 "올해 안 국회 비준 및 관련법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남 심의관은 "새로운 제도를 우리 법체계에 접목시키는 것인 만큼, 국내법 정비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4과의 백기봉 검사도 "헌법과 상충되는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1일 성명을 내 "정부는 하루 빨리 ICC로마규정의 국내비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로마규정 상의 범죄를 국내에서도 처벌할 수 있고, 공소시효불인정 등의 원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조)

### (⇒ 1면 '법원' 기사에서 이어짐)

사람의 당사수당액이 더 많은 것으로 적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측은 "임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진다"라며, 노조측이 제시한 급여체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대업 노조지부장은 "이번에 노조가 낸 임금인상 요구안은 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2002년 공시한 단가의 50% 선이고,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이라며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말했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직급의 경우 매달 99만원, 높은 직급의 경우 1백38만원 선의 임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낮은 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이 평균 6개월 정도 일하다 그만 둘 정도로 이직율이 높았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4일(목)

제 21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군 측의 발표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진상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금껏 조사한 결과, 미군측이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무부는 주한미군사령부에 1

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군에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은 올 5일까지다. 조사에 참여한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달 19일 미군측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의문점을 제시했다. 미군측은 사고 차량의 특성상 오른쪽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운전병은 피

해자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근접한 거리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나, 굽은 길을 돌아선 30m 전방에서는 시야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차량을 동원해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당시 사고지점은 오른쪽으로 굽은 길을 돌아 오르막이 시작된 부분에서 약 35m 떨어진 지점이었다.

또한 미군측은 오른쪽에 타고 있던 선임탑승자가 운전병에게 보행자가 있다고 사전에 무선 교신을 했는데, 차량소음 때문에 운전병이 이를 들 수 없었다고 지난 달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이 의정부경찰서에 남긴 사고진술서엔 "사고 당시 중대장, 지휘부와 무선교신을 하고 있었다"라고 운전병의 진술이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 어느 경우든 미군측 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전투상황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무선교신을 하고 운전병은 선임탑승자의 지휘에 따르게 돼 있는데, 차량소음 때문에 혹은 다른 차량과의 무선교신 때문에 못 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선도차량 등 앞서 가던 두 대의 차량이 사고차량에 미리 경고를 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군용차량들보다 폭이 좁아, 선도차량이 보행자를 보고도 뒤 차량에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작전지휘체계의 과실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보상, 배상 이전에 한국 수사기관이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야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대위의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6월 27일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라고 법무부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4일 법무부장관을 면담해 다시금 우리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맞는 아이, 때리는 아이!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주최로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렸다.

학교폭력의 형태는 학생들간의 신체적 폭력, 심리적인 폭력인 '왕따', 주종관계, 상남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보통 한 사례에서도 이런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최근 학교폭력은 구타를 넘어서 항문에 샤프심을 넣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가 뺨을 때려 깨운다든지 그 정도가 고문을 방불케 한다. 올해들어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 1명이 자살을 택했으며 집단폭행에 대한 복수로 가해학생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고려대 김준호 사회학과 교수는 "적어도 약 40-70%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부모나 학교측에 폭력사실을 알려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거나 오히려 사건만 커진다고 생각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경쟁중심의 학벌사회, 퇴폐향락문화와 폭력 문화 등을 꼽으며 "우리사회의 정치·사회풍토가 정의를 바꿀 수 없는 한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부회장은 "청소년 비행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체제와 빈곤이고 학교폭력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학교폭력 근절방안으로 △빈곤과 위기가정의 청소년 보호와 지원대책 △학교폭력 전담교사 △피해자 구호를 위한 공공기금 조성 등을 주장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최종에 부장은 "피해 학생의 경우 외부상처에 대한 치료와 정신적인 쇼크에 대한 상담과 학교 행정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을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성수여중 피해자 어머니) 회장은 "가해자 부모든 피해자 부모든 폭력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난감하다"며 "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보영)

# 이달의 인권 (2002년 6월)

## 흐름과 쟁점

### 1. 월드컵 열기에 외면당한 생존권·기본권

5월은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면서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외면당한 한 달이었다. 대우자동차판매노조는 임금체계 개악반대 등을 알리기 위해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등 전국 67곳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모두 불허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6) 미국 선수단이 머물던 서울 메리어트 호텔 정문 앞에서는 1인 시위까지 가로막혔다. (6.3) 파주공장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며 3백일이 넘게 파업을 진행해 온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은 노사정위까지 접거하며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월드컵 열기에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농성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6.10~21) 또 월드컵 4강 전담에는 경찰병력 1천명 정도가 경희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에 투입돼 병원파업 노조 간부를 기습적으로 연행하려 했다. (6.24)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와 파업결의대회 등은 월드컵 경기일을 피해 행사일정을 연기해야 했다 (6.25).

### 2.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미군범죄의 끝은 어디에?

지난해 7월 미군 제2사단 공병여단 인근 교압선에 감전된 전동록 씨가 사고 발생 11개월만에 끝내 사망했다. (6.6) 장례위원회는 미 대사관 앞에서 노제를 지내려 했으나 전경에 의해 가로막혔고, 할 수 없이 전씨의 집과 미군 제2사단 앞을 거쳐 벽체 화장터로 향했다. (6.10) 앞서 서울지법은 치료비 2천만원 지급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6.1)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부대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13) 미군 제2사단은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6.19) '미군전차 사망 여중생 대책위'는 미군의 발표내용이 의문투성이라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한국법정에서의 재판권을 요구하는 규탄대회 (6.20) 및 제1차 범국민대회 (6.26)를 열었다. 사망 여중생 유족들은 미군 책임자를 의정부지청에 형사고소 하는 한편, 대책위와 함께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6.27)

### 3. 행자부, 지문날인 거부자에 참정권 사실상 박탈

주민등록증이 없어 투표를 할 수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들! 이들이 6·13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동사무소에 신원증명을 요구하며 '참정권 운동'을 벌였다. (6.10~13) 물론 각 동사무소에서는 '대체신분증 발급근거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공문을 근거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신원증명을 거부했다. 이들은 또 일용직 노동자, 장애인, 재소자, 재외국민, 18~19세 청소년 등 투표배제 계층과 함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6.11) 하지만 정부의 묵묵부답으로 대체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들 대부분은 투표를 할 수 없었다. (6.13) 현재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참정권이 가로막힌 사례를 수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 4. 병원감염, 에이즈검사비, 글리벡... 건강권도 인권!

서울 양천구 0병원 7102호가 환자들의 집단감염으로 폐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자들은 대부분의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된 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퇴원압박까지 받고 있었다. (6.8) 또한 에이즈 검사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중단된 데 대해 에이즈 감염인과 보건의료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국립보건원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6.20) 한편, 백혈병 환자들은 노바티스를 항의 방문해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라며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 인하를 요구했다. (6.27) 건강권도 인권이라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다.

## 논평

-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6.1)
- 불평등한 과거청산 (6.8)
-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6.15)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 (6.22)
-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6.29)

## 인권이야기

-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6.4/육이은)
- 창해와 일남이 (6.11/이우갑)
-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6.18/권두섭)
- 한 젊은 검사의 항변 (6.25/이창조)

## 인권정보자료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모음 (6.5)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메뉴얼
-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6.19)
-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6.26)

## 기자의 눈

-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효과검증 안된 채 대책논의 없어 (6.6/김보영)
-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6.13/김영원)
-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 '규제나, 완화나' 논란 속, 실종된 검열문제 (6.18/범용)

## 입장

-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6.20)
- <논평>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처 (6.27)

## 해외소식

-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6.22)

## 중요 결정

- 국가인권위, 대입시 연소자순 합격여리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6.17) / 의문사위, 83년 의문사한 고 한희철 씨 사인을 자살로 판단하면서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 (6.26) / 헌법재판소, "불온통신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불온통신 조항' 위헌 판결 (6.2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5일(금)

제 21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

"오늘 이 증언대회가 우리 역사에 진실을 밝혀내고 서러운 한들이 풀려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 이혜동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로 4일 '2002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아래 증언대회)는 시작됐다. 이날 증언대회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피학살 사례들이 새롭게 증언돼 눈길을 끌었다.

거창에서 올라온 신용은 씨는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눈물로 증언했다. 정부는 신씨의 아버지를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으며, 어느 날 경찰서로 부른 후 다른 보도연맹원들과 함께 학살했다. 당시 5세였던 신씨는 자신에게 깨엇을 주면서 "내 빨리 갔다 올게"라고 한 후 집을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생생히 기억했다.

거창에서 온 서철안 씨는 경찰이 7백50명 정도의 보도연맹원들을 50년 7월 25일부터 열흘간 매일 70여명씩 수장시킨 사실을 고발했다. 당시 서씨의 둘째 형도 보도연맹에 억지로 가입돼 죽임을 당했다. 서씨의 둘째 형은, 죽기 전 큰 형과 면회할 때, '어제 밤에 옆 방에 있던 사람들의 구두발자국 소리가 났고 이후 뱃소리가 들렸다'며 '나도 오늘 죽을 것 같으니 앞으로 면회하지 마라'고 자신의 죽음을 미리 전했다고 한다. 서씨는 "큰 형에게 그 말을 듣고 나도 막 죽고 싶었다"라며, "재판도 없이 물에 빠뜨리는 게 사람으로 할 일이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완도지역 김보희 씨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인민군 복장을 하고 들어와

환영하는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증언했다. 그때 완도 전역에서 학살된 수만 해도 1천여 명. 남원의 김덕초 씨는 "나는 인민군이나 빨치산이 양민을 학살하는 것은 못 봤지만 국군이 학살하는 것은 직접 봤다"고 말했다.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50년 11월 17일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17~35세 청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후 40분 정도 뒤에 총성이 울렸다고 한다. 그 외 나주 봉황면 철야마을 학살, 단양 괴개굴 미군폭격에 의한 학살 등이 새롭게 증언됐다.

증언대회에서는 노근리 사건의 최근 상황이 소개되기도 했다. 노근리 사건 대책위의 정구도 씨는 "미국 정부는 주모비를 건립해 주겠다고 하면서 한

국전 당시 미군에 의한 희생자 전체에 대한 추모비를 건립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이는 노근리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건까지 덮어버리겠다는 의도"라며, 대책위가 추모비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19명의 유족 증언이 이어졌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인민군에 의한 학살만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살의 90% 이상이 한국군이나 경찰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민간인 학살 문제는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범국민위 김동춘 사무처장은 "전쟁상황은 '적과 아'라는 이분법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인권개념이 없는 국가공권력은 전쟁시 적에게 동조할 우려 때문에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다"고 밝혔다. "예곡된 역사를 꼭 바로잡아달라는 것 밖에 할 말이 없다"는 유족들의 통한은 50년간 강요당한 침묵을 조금씩 깨고 있었다. (범용)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해소송 판결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묵인·방치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백만원, 포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윤락업소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되어 여성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포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주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공무원이 포주와 유착, 성매매 업소에서 인권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

업주들은 업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받거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1층의 철제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 출입을 봉쇄"했고 "분전반 합선으로 윤락녀들이 사망하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산시는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 군산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날 제안된 입법안의 골자다.

이날 공청회에선 병역법 개정안과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다른 피해 여성들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국가는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성매매 업소를 조사하고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그러나 군산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 "오늘의 판결로 인해 향후 국가는 성매매 범죄에 대해 계속 외면할 수 없게 됐다"라며 "앞으로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대체복무요원관정절차법안(아래 대체복무법)이 발표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관정받은 사람을 사회복지시설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36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대체복무법은 우선 대체복무자 관정과 징계, 징책결정 기능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신청사유는 '포괄적으로 양심적 이유'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미 복무중인 현역병은 입영 후 1년 이내에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엔 치엔 대만 전 입법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치엔 씨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침략할 수 있는 대만의 상황은 결코 한반도보다 안전하지 않다"며, "현대전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국방부에게 거듭 설득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공청회 토론내용을 반영한 입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이창조]

##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4일 리은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3일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두 여학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등 2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미군 측은 이를 완화하고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군 측이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유족과 사회단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공동집행위원장이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군 측은 우리 정부에게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이 가능한 시한을 11일까지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4일 법무부는 다음주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6일(토)

제 21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10기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검찰이 지난 달 24일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를 기소하면서, 올해 출범한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꼬리표를 붙였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직접선거로 뽑히는 대의원들에 의해 해마다 새로 구성되는 한총련에 대해 지난 5년 간 계속 '이적단체'란 족쇄를 채워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도 그 족쇄는 풀리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공소장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0기 한총련'에 가입"했다며,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4월 제10기 한총련 의장에 당선된 김 씨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는 지난 5월 28일 충북 청주 서원대 부근에서 보안수사대에 연행됐다.

광주지검은 공소장에서 "북한의 대남 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적극 수용하여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연방제 조국통일투쟁'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전남대 총학생회 문건, 제10기 한총련 문건 내지 유인물, 북한 로동신문의 글 등을 모두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한총련 법률지원 공동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상갑 변호사는 우선 '남북관계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 상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이스라엘군의 탱크에 맞서 죽어가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한다. 독립을 하기까지 인도네시아군의 총에 무수히 학살당한 동티모르 민중들을 기억한다. 2차 대전에서 유대인과 집시 등을 말살하려 했던 나치를 증오한다. 하지만 정작 50년 전 한국전쟁전후 바로 이 땅에서 학살됐던 민간인들은 여전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다.

최근 잇따른 피학살자 유족들의 증언이 우리의 무감각을 일깨우고 있다. 파주, 속초, 단양, 대전, 남원, 진도, 여수, 거제, 함안, 포항, 제주 등 전국에 걸쳐 학살현장이 발굴되고 있다. 여기서 학살된 원혼들은 유골이 되어 당시의 참상을 고발한다. 이승만 정권에 반대했기 때문에 형무소에 수감된 이들은 정권안보 차원에서 죽어야 했다. 사상전향을 목적으로 강제 가입됐던 보도연맹원들도 무조건 죽임을 당했다. 공비 몇 명을 색출하기 위해 일가족 및 마을주민 모두가 무차별 학살당한 예도 허다했다. 이들은 죽어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단 한 차례의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승을 떠나야 했다.

이렇게 학살된 수가 1백13만으로 당시 남한인구의 20분의 1이다. 학살의 90% 정도가 한국 군·경과 우익단체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정부가 인민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보복으로 좌익을 죽였다'는 기존의 상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다. 엄청난 피해규모는 학살이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극적인 사실은, 다 알다시피, 당시 학살의 주범들이 지배권력의 중심에서 파리를 틀고 이 나라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왔다는 점이다. 70년대 베트남학살, 80년 광주학살로 이어지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땀겨리며 한국 현대사를 학살자의 관점으로 정당화했고, 이에 따라 유족들은 언제 '빨갱이'로 몰릴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해 왔다.

감감한 침묵을 접고 시작된 피해유족들의 증언이 정의의 물꼬를 트고, 역사적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권력이 반인권적 과거를 청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게 하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운동이 필수적이다. 학살자의 오만으로 점철된 역사를 다시 쓰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몫이다.

#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영 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들로 이뤄진 보험개발원을 말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181조 10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건강보험관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넘겨받은 정보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 현재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이를 토대로 특정한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킬 지 여부,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받을 지를 결정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보험회사들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줄

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다.

건강연대 조흥준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질병정보가 꼭 나오고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라며 "또한 이런 정보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다른 곳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의 성대규 사무관은 "개인이 동의할 때만 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제181조 10항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할 때는 질병보험계약을 청약한 자 또는 피보험자가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조 정책위원장은 "아무리 법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해도, 가입자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혹은 보험회사가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조 정책위원장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공공보험(현 건강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은 개인의 질병발생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것이 원리"라며, "일반적으로 질병율이 더 높은 저소득층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 달 22일까지다. (이주영)

### (=1면에서 이어짐)

이밖에도 이 변호사는 "검찰이 '이적 표현물'이라고 거론한 것 중엔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지나치다 싶은 것들이 있고, 나아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까지 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내심적으로 형성할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에 반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의 강위원 씨는 "각 대학에서 투표를 통해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하면, 투표에 참여한 모든 대학생들까지 문제가 되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은 8월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주영)

##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지난 1일부터 발효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의 취지를 훼손시키려는 미국의 억지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건을 시작으로 자국에서 파병한 평화유지군에 대한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줄곧 주장해 왔다. 급기야 지난달 30일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안보리에서 보스니아평화유지활동 기간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안보리는 6월 30일로 끝나는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을 7월 3일까지, 다시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연장하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 조기종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면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은 올해 말까지 연장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였다.

현 ICC 규정 16조에 따르면 유엔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또는 기소'를 1년 간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을 위해서는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안보리의 기간 연장이 자동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는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조사 또는 기소' 보류로서 사실상의 면책을 의미한다.

집단학살과 반인도범죄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보스니아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로 미국이 ICC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각국 인권단체 및 세계 주요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전여 개 이상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연맹(CICC)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이번 요청에 따른 경우, 병력 제공 국가가 극악한 범죄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을 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라며 "안보리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부시행정부의 실력자들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너무나 지배적이어서 더 이상 국제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공은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9일(화)

제 21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다. 9일 군대 입영 대신 병역거부의 길을 가게 되는 유호근 씨는 지금까지 다른 이들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우리사회에서 현재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거의 전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며, 지난 해 12월 17일 오태양 씨가 최초로 불자로서 '불살생'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국군 장교가 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는 유 씨는 95년 대학에 입학한 이후 "군인아저씨"에 대한 동경이 전쟁에 대한 혐오 앞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갔다"라고 말했다.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동이리 활동을 했던 유 씨는 한국현대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전쟁의 참상과 더불어 전쟁이란 것이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는지를 알게 됐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다.

또한 유 씨는 학교에서 96-97년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돕기 운동, 99년 남북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북한은 대립하고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기 이전에 함께 돕고 살아야 할 한민족'이란 굳은 믿음을 갖게 됐다.

유 씨는 "그런데 병역의 이행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나 또한 동족을 향해 총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병역의 의무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품게 됐다"라고 밝혔다. 98년부터 유 씨는 병역 문제를 고민하

며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지난해 초부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소속 단체 중 하나인 평화인권연대에 연락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유 씨는 약 한 달 전 7월 9일자로 마지막 입영통지서를 받기까지도,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결심을 완전히 굳힐 수 없었다.

병역거부를 하면 현실적으로 감옥에 가야하고, 단지 그 하나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을 평생의 굴레로 씌어지게 될 것이란 사실도 적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결국 유 씨는 병역 거부를 선택했다. "총을 들고 다른 이를 죽이는 연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유 씨는 말한다. 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어 병역특례업체에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 역시 4주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

인 해답이 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이런 생각은 결코 군인들의 희생을 부정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택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연대회의는 지난 4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오늘 아침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 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유 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 병역거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이주영)

## 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자 검찰 출두 안 시켜

8일, 미2사단은 미군 장갑차 사고와 관련해 의정부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차량 운전병 등 두 명을 검찰에 출두시키지 않았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마크 병장 등 2명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출석하지 않았다"며 "미군은 한국 검찰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조사받을 수 있지만, 장소는 미군부대 영내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 <알림>

##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때 : 7월 11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발전노조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타 사업장에서의 유사 인권침해 사례 (노항대 공공연맹 연사국장)
- '파업권'에 대해-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공익적 파업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이명 박사)
- 노동쟁의에 대한 가압류 및 서약서/개별감사 등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권영국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 인권단체 공동조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대응방향 (오영경 새사회연대 기획부장)

[문의 : 인권실천시민연대 749-9004]

### ○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 그들은 알고 있을까?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 있다. 그리움이 뻗어 오려던 사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건네 받은 귀퉁이 헤어졌던 엽서 한 장, 방황의 시간이 묻어 있는 일기장. 그런 소중한 것은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담배 이음으로만 남은 은하수, 꿈 같은 기억으로만 반짝이는 반딧불이, 시리도록 찬 물 속의 발 빠른 가재. 함께 살아가던 무심하다 막상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 사라진 아름다움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했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하물며 그 소중한 것이 눈이나 귀로 느끼는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 삶의 가치를 되새겨 주고 희망을 불러 주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리라.

수녀님. 간간이 거리를 지나다 만나는 수녀님들을 보면 종교의 같고 다름을 떠나 기분이 좋아지고 한편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하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그들이 지니는 맑은 미소, 혹은 많이 드러나진 않아도 숨어서 건네는 따뜻한 사랑의 손결.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저렇게 깊고 맑게 살 수 있구나 하는 부러움이 한 권으로 스며든다. 우리 시대의 많지 않은 소중한 중 하나다. 그런 소중한 덕분에 그 이전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신부들이나 스님을 연행하고 구속하는 일은 있었어도 수녀님들을 검문하거나 연행하는 일은 없었다. 그들이 지닌 미소는, 그들이 사는 희생은, 그들이 꿈꾸는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독재자들에게조차 소중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4일, 평화집회에 참여한 두 분의 수녀님이 다른 17명과 함께 종로 경찰서에 연행돼 수모를 겪었다. 수녀님들은 29시간 이상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었다. 단지 평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고된 집회에 참석한 일 외에 그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다. 사지를 들러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수녀라고 신분을 밝히고 특별 대우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요구했음에도 경찰은 웃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자해 위험이 있다며 그들 목에 걸려 있던 십자가를 벗겨 냈다.

참담한 마음이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애써 지켜온 소중한 가치를 또 한차례 잃어버린 부끄러운 일이다. 수녀님들이 힘이 세서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은 아니다. 수녀님들이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눈웃음을 보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가장 약해져서 약한 자와 함께 살기에, 스스로 낮아져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기에 그들은 우리에게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아름답고 소중한 이들이었다.

약하다고, 대항할 힘이 없다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 수녀님들을 연행하고 억박지르고 유치장에 가둬놓은 경찰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이 알까? 그들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아름다움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그들이 수녀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찢어지도록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이우갑 : 고한성당 주임신부)

### 주간인권호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1. 묻혀진 진실이 세상밖으로  
'2002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나주 철야 마을 학살, 단양 괴개굴 미군폭격에 의한 학살 등 새 증언(7.4)/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암매장지, '희생자 위령제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특별법 제정 결의대회'(7.8)

2. 전쟁 선동은 안 된다  
미 국무부, 서해교전과 관련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전면 재검토(7.1)/ 서해교전 당시 우리쪽 꽃게잡이 어선 여러척이 연평도 주변 어업통제선·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사실 드러나(7.1~)/ 합동참모본부, 5단계로 돼 있는 현 교전규칙 개정(7.2)/ 북한, "북남 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성명 발표(7.3)

3. 한국법정 세우기, 정말 힘드네  
민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군측 조사내용 의문점 제기...법무부에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촉구(7.3)/ 미군 군사법원, 사고 관련자 2명 기소(7.3)/ 주한미군사령관, "미 육군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 법무부, 미군 운전병 등 2명 8일 의정부지청에서 조사하기로/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주민 2백여명, 재판관할권 이양·미군 훈련장 폐쇄 등 요구(7.4)/ 미2사단, 의정부지청에서 조사받기로 돼있는 사고관련자를 검찰에 출두 안 시켜(7.8)

4. 무늬만 노동3권 보장  
대법원·고등법원 시설관리노동자(명호개발), 파업한다고 법원 출입 통제당해(7.2)/ 민주노총, 사용자 쪽이 노조나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액수가 39개 사업장에서 1264억원에 이른다고(7.5)

5. 기탁 : 경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 참가자 30여명 집단연행(7.1)/ 재경부, '개인정보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7.2)/ 미국,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형사재판소의 평화유지군 조사 거부 방안 내(7.2)→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국 반대로 미국 안 거부(7.3)/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7.4)/ 진주 총기사고 사망자 고 권중현 씨 유족, 사고 발생 7개월만에 장례식(7.7)

○ 주요 통계 및 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 97년 사망한 김준배 씨 사건 수사지휘 검사로서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정윤기 검사 등 2명에 과태료 부과(7.2)/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2000년 군산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관련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당한 여성들을 방치한 국가의 책임 인정(7.4)/ 통계청, 2001년 현재 여성 임금은 남성의 64.3% 수준(7.5)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10일(수)

제 21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위원회)는 9일 97년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제5기부터 올해 제10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적단체의 족쇄에 묶여 있는 한총련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이적규정의 잣대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 논의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97년 9월 16일 한총련 간부로 수배 중이던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사망했다. 위원회는 주락으로 인한 사고사라는 당시 경찰 수사결과와 달리, "주락과 경찰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추락 직후 경찰이 김 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한데다 일본 법의학자 역시 추락 이후 별도의 충격이 있었을 거라는 감정 소견을 낸 데 따른 것.

또한 위원회는 김 씨가 "97년 당시 사회쟁점이었던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규탄, 대선자금 공개, 한보비리 진상규명 운동 등을 했다"라며, "이같은 활동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므로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총련 간부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김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은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이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행

위는 '실정법'에 저촉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며 "실정법 위반 여부가 곧 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본다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이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상범 위원장은 "군사독재 정권 아래 만들어진 법령, 판결, 행정 조치, 관행 등이 그대로 현행 법질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라며 "구시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 형식적 법질서와 정의가 충돌할 때 위원회는 실

질적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후속조치로서 김 씨를 폭행한 경찰관 이영진 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는 애초 김 씨 사건을 처리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자체 감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작성의 부검 기록 중 상당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사건을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는 당시에 구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끝까지 목격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씨의 유족을 비롯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10일 아침 11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주영)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백서」

펴낸이 : 이금연 등 / 펴낸곳 : 이주·여성인권연대 / 143쪽 / 2002년

이주노동자들 중 가장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현황과 인권실태를 고발한 백서가 나왔다.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등 전국 6개 상담소로 구성된 이주·여성인권연대는 상담 사례 자료를 모아 인권백서를 발간했다.

일반적으로 산업연수생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송출기관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과는 달리,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한국기업이 해외에 투자, 합작한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들이 한국에 들어 온지 12년째가 되지만, 연수업체는 외부와의 접촉을 갖지 못하도록 연수생들을 철저히 통제해 이들의 인권실태는 이제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백서는 현지법인 연수생들이 당하는 극심한 노동력 착취 실태를 보여준다. 2001년 12월말 현재 2만5천830명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3만원~26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서 받는 적은 임금조차 회사측은 1년 내지 2년 동안 압류하곤 한다. 또한 외출이나 면회를 금지하고, 기숙사 문을 밖에서 잠그는 등 사실상 감금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이 없는 상태다.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행 연수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들이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최은아)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1)

## 단일장소 최대 학살지, '대전 산내 골령골'

"사격개시!" 그러면 사수들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그대로 방아쇠를 당기는 거지요. 보통 대각선으로 뒤통수를 쏘게 되는데 사격을 하면 골이 튀어나와 사수의 온몸에 튀겨요. 직통으로 쏘면 머리가 박살나지요. ... 사수가 몰려나면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단총으로 다시 확인사살을 하고...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지휘자가 또 다시 확인을 합니다. ... 그 다음엔 뒤에 대기하고 있던 소방대원들이 우루루 몰려와 시체의 두 다리를 번쩍 들어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어요. 그 후 기관단총 사수가 다시 두 번을 왔다갔다하며 구덩이 속을 향해 2차 확인사살을 합니다." (92년 2월 월간 「말」 지 '대전형무소 학살사건' 기사 중 발췌·인용)

대전 동구 남월동 산내초등학교 앞에서 옥천방향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산기슭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52년 전 한국군에 의해 7천여 명이 집단학살된 산내 골령골이 나온다. 대전 '산내학살 사건'은 92년 2월 월간 「말」 지에 의해 '대전형무소 학살사건'으로 공론화된 후 오랜 기간 또 다시 침묵해야 했다.

이후 99년 12월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던 산내학살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서 지역사회단체의 진상조사와 유족들의 증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비밀해제된 문건은 '50년 7월초 3일간 대전형무소 정치범 1천8백명이 처형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단체들은 △목적자들이 '당시 열흘이 넘게 학살이 진행됐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유족들에 의한 제사가 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학살현장이 3곳으로 그 규모가 크다는 점 등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소 3천명이 학살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올 4월 발췌된 영국 일간신문 <데일리 위커>지의 한국전쟁 당시 종군기자였던 워닝턴의 증언록은 학살의 규모를 7천명으로 명시했다. 증언록은 학살의 마지막 순간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7월 16일 인민군이 미군의 금강전선을 돌파하자, 7월 17일 새벽 남아있는 정치범들에 대한 학살이 (또 다시) 시작됐다. 이날 무수한 여자들을 포함해 적어도 각각 1백명씩 37대 트럭분, 3천7백여 명이 죽

었다."

결국 한국전쟁 발발 직후 6월 27일 대전으로 내려온 한국정부는 '폭동을 일으키고 적을 도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학살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7월초 3일간은 대전형무소 정치범 1천8백여 명이 집중 처형됐으며, 그 외 1천2백여 명이 7월 1일부터 보름에 걸쳐 대대적으로 총살당했다. 또한 금강전선이 무너지고 한국정부가 대구로 이전한 다음날인 7월 17일 새벽에 3천7백여 명이 마지막으로 학살됐다.

산내학살 진상규명 활동 초기부터 결합했던 심규상 씨는 "정치범보다는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이 학살된 규모가 더 크다"라며, "골령골은 좌익정치범들에 대한 처형지가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살육장소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살의 기준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모호해졌다"라며, "나중에는 여성과 10대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하여 심씨는 골령골을 '죽음의 골짜기' 혹은 '유골밭'이라고 불렀다.

**학살지에서의 세 번째 위령제**  
8일 오전 10시부터 골령골에서는 '대전 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다. 유족과 지역사회단체들은 '보름간의 학살 기간 중 8일 가장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다'며, 벌써 3년째 같은 날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이날은 먼저 '영산 천도대법회'가 열렸다. 법패, 바라춤 등이 이어지면서 1시간 정도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로했다. 이후 추도식에서 향토사학자 이규희

씨는 "후손들이 후손답게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죄가 우리 어깨 위에 있습니다. 송구스러움에 할복자살이라도 해야겠지만, 이 일을 매듭짓고 그때 가서 위로의 말씀과 명예회복 등을 하겠습니다"라며, 집단 학살된 혼령들 앞에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전유족회 송영길 대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몇 명이 끌려왔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유족도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 싶습니다"라고 개탄했다.

추도식이 끝날 무렵 유족 및 참석자 4백여 명이 헌화를 하며 죽은 넋을 달랬고, 곧바로 시작된 상여행진의 뒤를 따랐다. 상여는 2차선 도로 좌우로 흩어진 3곳의 학살현장을 모두 돈 후 이날 위령제를 마무리했다. 송 대표에 따르면, 이곳에 2차선 도로를 만들 때 포크레인 기사가 무수히 바뀌었다고 한다. 하도 유골이 나와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 또 전쟁 직후 보따리 장사라도 하기 위해 이 길을 다녀야 했던 주민들은 흙 밖으로 빠져나온 손과 발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위령제 이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장재완 간사는 "내년에는 통합특별법에 의해 위령사업이 이루어지고 진상조사도 제대로 돼야 한다"라며, 통합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통합특별법은 한국전쟁전후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골자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되어 있다. (범용)

<편집자주> 최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유족 증언과 진상규명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일주일에 한번 비정기적으로 전국에 걸쳐있는 민간인학살 현장을 방문해 학살의 진상과 규명운동의 현황을 다룬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11일(목)  
제 21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략

###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사실상 '일용직 수준'으로 전략하고 있는 대학강사들의 현실에 대해 교육부가 침묵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전국비정규직대 학교수노조(위원장 임성윤, 아래 비정규 교수노조)는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올해 초에도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장관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대학지원국장만을 5분 정도 만난 바 있다.

임성윤 위원장은 비정규 교수노조의 요구사항을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계약직 교수로의 전환'으로 요약했다. 임 위원장은 "강의 전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 (학교가 우리에게) 강의를 주면 고용되는 거고 강의를 안 주면 해고되는 거다"라며, 대학강사의 심각한 고용불안 현실을 고발했다. 쉽게 말해 제대로 된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나마 강의를 맡게 된 대학강사라 하더라도 전임교수의 1/10 정도의 강사료만 지급받는다. 현재 강사료는 시간당 1만5천원에서 3만7천원까지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며, 월 평균 수입이 1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대학강사들은 교통비, 식비, 교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의가 없는 방학 중에는 수입이 전혀 없다. 의료보험, 퇴직금 등 사회보장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고려대 강사협의회 김경수 회장은 "강사료만으로는 먹고살지 못해 번역, 논술, 학원강사 등을 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공부도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김 회장은 "대학강사를 독립된 연구자, 학자로 봐야 하"고 "다른 것 안 하고 강사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정규 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월 기본급 11만원 지급 △시간당 강사료 5천원 인상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1학기 성적입력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파업을 진행 중이다. 영남대의 경우 현재 강사료는 2만9천원이다. 따

## "정윤기 감사의 사건 은폐 규탄한다"

### 계승연대, 김준배 사건 검·경 책임 추궁하기로

10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대표 오종렬 등, 아래 계승연대)는 김준배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97년 당시 사건을 은폐한 검찰을 규탄했다.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인 김준배 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했음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본지 10일자 참조>

계승연대는 "위원회는 김준배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등 소신있는 결정을 했다"며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김준배에게 구타를 가한 경찰 1인만 고발하고, 당시 무리한 검거작전을 지휘한 경찰 수뇌부와 사건을 은폐한 정윤기 감사에 대해 고소고발하지 않기로 한 점은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검거작전을 수행한 경찰의 수뇌부와 정윤기 감사도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승연대는 "당시 담당검사 정윤기(현 영월지청장)는 김준배에 대한 경찰의 구타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목격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고, 당시 김준배가 떨어진 높이가 3~4층 정도라 확인됐음에도 10층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추락사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계승연대는 "경찰은 한총련 수배자 검거에 특진까지 걸고, 어떤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김준배에 대한 무리한 검거작전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계승연대는 앞으로 유가족과 추모사업회 등이 정윤기 감사와 경찰 책임자를 형사고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들은 신체적인 성이 이미 전라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새로 바뀐 성이 인정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이 많이 받고 있다. 이에 김홍신 의원은 호적상의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10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할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을 중심으로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례법안은 "성전환증 환자들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호적상의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홍신 의원은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이 "남들에게는 10만분의 1의 문제지만 본인에게는 100%의 문제"이므로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김주덕 변호사는 "모든 법체계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 문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며 입법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영률 목사도 창조질서의 훼손, 성역색채 불변, 성 정체성 및 사회질서 혼란 등을 이유로 호적 변경에 반대한다면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힘을 못쓰는 것은 세계적 현상 아닌가?"라며 "최종적 결정은 절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유석 판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는 "의학적으로 성은 유전적 성(성염색체), 성선(性腺) 성(내부생식기), 표현형 성(외부 생기 및 외모 등 2차적 성징), 심리적 성의 4가지 요소에 의하여 성이 결정된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이 4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 변경 문제는 어디까지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소수의 경우에 그 성별을 확정하는 법적 처우의 문제일 뿐, 성문란이나 성

도덕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회 일각에서 염려하는 '성별 선택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례법안에는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성전환증 환자일 것, 계속하여 생식능력이 없을 것, 혼인관계에 있지 않을 것 등의 7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각각의 요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태 변호사는 법 자체에 과도한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폈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은기 법제이사의 경우는 성전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성전환증 환자', '정상적인' 등의 용어를 '성전환자' '일상적인'이라고 변경하자는 제안도 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성전환자인 김비씨는 "우리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주고 있다는 점이 고맙고 어서 빨리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며, 상수리 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이고, 더불어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홍신 의원의실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하여 법안을 수정하여 늦어도 8월초에는 의원 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공은나)

##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걸치레 검찰 출두

법무부는 10일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주한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수사기관에 의한 미군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법적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공무중 발생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측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차 28일, 2차 14일 이내에 우리 정부에 재판 관할권 포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법무부에 재판 관할권 포기 요청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중이던 사람들은 오후 3시 30분경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모두 일제히 환호를 하며 기뻐했다. 함께 있던 고 신효순 양의 아버지는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 요청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잘됐다"라며 "이젠 미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김현희 씨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법무부가 재판 관할권의 포기를 요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의 최근호 상황실장은 "법무부의 이번 요청은 주권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미국의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조속한 피해배상 △사건의 책임부대인 캠프하우스, 양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의 애초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범대위는 11일 낮 12시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사고차량의 운전사 '마크 워크' 병장과 선임탑승자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10일 오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사전예고 없이 전격 출석했으나 기자들의 사진 촬영 등을 문제삼으며 조사를 받지 않고 1시간여 만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12일(금)

제 21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녹화사업 실체규명, 7·8월 달군다

### 의문사위, 전두환 씨도 소환불사...피해자 동참 절실

의문사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80년대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전두환 씨 등의 소환까지 불사하는 '7·8월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오는 9월 16일로 끝나는 데다, 김두환 씨 등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5건이 모두 기무사 등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녹화사업이란 80년대 초 군사정권이 이른바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집한 후 실시한 특별정훈 교육으로, △강제적인 사상개조 △'관제' 프락치 강요 △사건 관련자 불법연행 및 강압수사 모두를 포함한다.

의문사위는 11일 오전 10시 의문사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제징집자·녹화사업 피해자 조사대책'을 발표했다. 의문사위는 오는 17~20일 나흘간 83년 3~8월 녹화사업 관련 사망사건이 집중된 시기의 녹화사업 피해자 93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담회를 실시해 당시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한다. 또 22일에는, 80년대 초 학생운동 탄압과정에서 운동권 학생들이 대규모 구속·징집된 '무림·학림 사건'의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초기 녹화사업의 도입과정을 파악한다.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해기관과 관련자들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현재, 녹화사업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길은 피해자의 증언 하나하나를 모아 모자이크 식으로 짜

맞추는 일이다. 그렇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을 때만이 가해기관 스스로가 녹화사업의 실체를 자백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의문사위는 △강제징집·녹화사업의 객관적 피해를 규명하고 △권력의 부도덕성을 입증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녹화사업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의문사위는 당시 5공권력의 핵심부로서 강제징집 정책의 입안자와 시행 및 강제징집·녹화사업 시스템의 운용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박래군 조사3과장은 "녹화사업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정치적 배경 아래, 어떤 운영 시스템으로 시행됐는지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며, "이는 김두환 씨 등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그 사회적 배경을 밝히는데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이 "5공권력 핵심부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포함되나"라고 질문하자, 의문사위는 "그렇다"고 답했다.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당시 보안사령부 고위간부가 청와대 최고위층과의 식사 자리에서 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시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82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 만찬에서 입대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최경조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에게 "뭐하는 거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동안에도 의문사위는 당시 문교부 정책입안자들을 소환 조사중이었다. 앞으로는 당시 병무청 관계자, 검찰 관계자 등도 출몰이 소환할 예정이다. 또 전두환 씨는 늦어도 8월말까지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범용)

### 만화사랑방

이동수



#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새사회연대 등 12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단'(아래 조사단)은 지난 5월부터 두 달여간 5개 발전처와 본사, 산업자원을 방문조사 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전노조 파업종료 후 회사에 복귀한 조합원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현황이 보고됐고, 유사 사례에서 벗어나는 파업참가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이 집중 논의됐다.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파업종료 후 인권단체와 노동조합에는 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가 계속 있어왔다"라며, "조사단은 회사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 입장에서 밝혀내고자 했다"라고 조사활동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월 25일부터 38일간 진행된 발전노조의 파업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전력산업의 해외매각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노동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파업을 끝내고 회사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서약서, 성향분류, 개별감사, 해고, 가압류였다.

이날 발표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문서로 검증하고자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굴욕감과 심리적 자괴감을 주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준법투쟁을 결코 하지 않겠다'라든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이의없이 배상하겠다'는 서약서 내용이 바로 그것.

파업종료 이후부터 회사측은 조합원의 성향을 '온건/중간/강성/구제불능' 등 4단계로 분류하고, 회사방침에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A, B, C로 매일 행동기록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보

고서는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억누르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원 개인에게 진행된 개별감사의 문답에는 △파업수첩을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누구의 권유로 근무지를 이탈했는가? △앞으로도 집회에 참여할 생각인가? △민주노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이 역시 노동자를 심리적으로 위축하고 향후 노동조합 활동에 부담을 갖도록 한다"고 평했다.

이 밖에 △3백18명 해고 △3천1백49명에 대한 2백11억 가압류(6월 24일 4백27명 가압류 해제) △노조 및 노동자들의 회합 방해 △노조 홈페이지 차단 등의 사실도 지적됐다.

토론회에 나선 노랑대 공공연맹 연대사업국장은 "데이콤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농업기반공사노조의 파업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합법적인 파업일

지라도 회사로비에서 구호나 노래를 부르고, 회사관계자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이 업무방해 죄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라며, "회사측과 정부는 업무방해, 손해배상, 가압류 등 새로운 형태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고발했다. 이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내야 하는 노동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이나 회사측에서는 파업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어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범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파업을 합법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노동조합, 노동자 대한 회사측의 업무방해와 가압류 형태의 탄압에 맞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와 선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 정부와 회사가 노동자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하는 전술에 대응해 법적 근거를 개발하고 이후 유사사태에서 노동조합과 인권·사회단체 간에 연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근예]

#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1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준) 신동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적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질병정보조차 그 누출과 악용을 막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사생활 보호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재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산재환자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신 집행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기구에 제공하게 되면 그 피해의 범위는 견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혐오질병 병력이나 장애의 소유자들은 취업이나 결혼에서 각종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신 집행위원장은 우려했다.

이어 참가단체들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보험업법 개정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촉구했다. 또한 공보험 강화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18일 여의도 보험개발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19일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향의 방문해, 개인질병정보 유출 반대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공은나]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13일(토)

제 21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12일 대우조선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점식)은 회사측이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조기에 퇴원하도록 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비디오 테이프에는 통영의 한 정형외과에서 요양 중인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의 상황들이 담겨져 있다. 또한 두 명의 촬영자는 산재 환자의 사진을 갖고다니며, 누군가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것도 그들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달 18일 노조가 회사측 직원에게서 압수한 비디오 테이프의 일부다. 당시도 회사측 직원은 출근 투쟁하는 노조원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노조는 12일 간담회를 열어 "몰래카메라 촬영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사생활마저도 철저히 파괴되어 약점을 포착해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비판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몰래 카메라'를 통해 환자의 꼬투리를 잡아내고 '피병 환자'로 몰아, 병원을 조기 퇴원하거나 회사를 그만 두게 하고 있다"라며 "이는 산업재해의 규모를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우조선 노동자 중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사람의 숫자는 5백8십 여명이고, 또 지난해에만 8명의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노조의 이의식 산업안전실장은 "비디오 물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회사는 그 전부터 산재 환자를 불러 몰래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퇴원해 일을 하든지, 회사를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종용해왔다"라고 말했다. 회사측도 비디오 촬영 사실을 부인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회사 관계자는 "성실히 치료 않고 무단이탈하는 노동자를 확인해, 그걸 토대로 노동자에게 산재요양을 종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며 할 일을 했다는 듯한 반

#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무엇인가. 폭압정권에 대항하다 희생당한 생명들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곳이다. 국가권력이 같은 짓을 되풀이 못하도록 역사적 증거와 교훈을 기록하는 곳이다.

그러나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과거를 지배했던 자들이 현재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원회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오는 9월 16일이면 그 활동이 끝나는 위원회를 팔짱끼고 바라보며 시간끌기를 즐기고 있는 관계기관들의 형편이다. 더 나아가 위원회에 대한 도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 정윤기 영월지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위법행위'라 비난하고 나섰다. 8개월 동안이나 출두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던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출두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사람이, 사건을 은폐한 장본인이 해야 할 처신이 결코 아니다. 정 검사의 처신은 위원회에 대한 관계기관의 불복과 무시와 조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특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헌법의 주장대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철저히 조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헌법은 이런 주장을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감싸기 위해 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정치적 타협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을 때 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나? 전 한총련 투쟁국장 고 김준배씨의 죽음을 위원회가 '의문사'로 결정할 때 반발하여 '지금'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헌법이 국가권력에 의한 모든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위원회의 '한계적' 활동이냐마 적극 지지하고, 진상규명의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서라.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을 겪은 어느 나라에서나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은 큰 과제로 부각됐다. 그 경험의 차이를 떠나 확인된 교훈은 한가지다. 진실 없이는 화해도 없고, 정의의 구현 없이는 똑같은 역사적 순환을 반복할 위험을 안고 불안한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지구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대에 국적 여부를 떠나 인간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노동총비상대책위 백순환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밀입국자를 포함해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77%가 미등록 불법체류 상태다.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선포하며 열띤 토론을 만들어 갔다.

먼저 민주노동총 이상화 정책국장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저임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에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송출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신분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비롯한 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제도적 미비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진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인원, 대상국 등 인력도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대표로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여기서는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인력도입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노동허가의 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1년씩 3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이후 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5년간의 ‘특별노동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나 현지 재외공관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고용희망 인원, 근로조건, 내국인에 대해 고용의무를 다했다는 소명자료 등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 고용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 모든 노동관계법령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다. 부처에서는 현 불법체류자를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제도를 폐지할 것을 명시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노동부 정중수 고용정책심의관이 토론에 나섰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고용 기회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허용하되,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우리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 심의관은 “노동허가절차에서 그 기준의 구체성이 없”고, “국내 노동시장 교란 우려 때문에 직장이동에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장상환 교수는 이주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되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안된 법률(안)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 미등록 노동자를 사면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환영했다. 또 “송출과 유입의 주체가 (이주)노동자 개인과 한국 정부라는 점에서 크게 진일보했다”며, “이는 송출비리의 근절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했다. (범용)

###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4기 비상임연구원 모집

4기는 연구소 상임연구원들의 논문학기이므로, 세미나가 2개만 개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inst.sarangbang.or.kr>를 참조하세요.

#### □ 비상임연구원 참가요령

- 제출서류 : 이름, 나이, 연락처, 현재 하는 일, 참가 세미나명, 참가 동기, 인권운동경력(단체활동가의 경우)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
- 마감: 7/20(토) · 제출 : [ihrm@sarangbang.or.kr](mailto:ihrm@sarangbang.or.kr) / 팩스(02-741-5364)
- 문의 : T. 02-3675-5363/ 017-679-3550 (배경내 연구원)

#### □ 제4기(2002년 하반기) 커리큘럼

- 1) 「자본론 제3권」 독해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1월까지)
- 개강일 : 7월 25일(목) · 도움 강사 : 강성윤(한노정연, 경제학 박사과정)
- 2) 한국 근현대 사회와 인권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총10회)
- ①개화기 자생적 권리사상의 등장과 서구 권리담론의 수용 과정
- ②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이 우리 인권현실에 미친 영향
- ③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 ④냉전, 탈냉전 시대 미국의 한반도 구상과 인권
- ⑤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인권(노동(운동), 한국정치 등에 미친 영향)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16일(화)

제 21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에바다 민주 이사진, 농아원 진입

### 옛 재단쪽 직원과 원생, 폭력 행사 되풀이

합법적 이사진이 에바다 농아원에 들어가는 것이 왜 이리 힘든가?

15일 오후 3시 윤규성 이사장 등 민주적 이사진과 김지원 교장, 윤희찬 농아원장,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에바다 연대회의)’ 관계자 약 50여 명이 에바다 파행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농아원에 들어갔다. 윤 원장은 “옛 재단 쪽 인사들이 농아원을 불법 장악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농아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들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옛 재단 측 직원들과 원생들에 의한 폭력이 되풀이돼, 합법적인 이사진과 원장, 교장이 학교 건물에 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양봉에 씨 등 옛 비리재단 쪽 직원들은 이사회 결정에 불복하고 학교를 파행으로 이끌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해임됐고, 법원에 의해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도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농아원에 출입하면서 이사진들과 교장 등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아학생들의 학교 수업 역시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원장에 따르면, ‘해아래집’에서 생활하는 농아 아동들은 학교가 아닌, 해아래집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윤 원장은 “학교 안에서 수업을 받는 농아 아동들은 수업시간 중에도 평택시청, 청와대, 국회로 현재의 민주적 이사진들을 비방하는 집회에 동원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이사진이 농아원에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옛 재단 쪽 직원들과 농아원생들이 몰려 나와, 이사진과 학생들을 폭행해 부상자가 속출했

다. ‘전국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의 이지는 씨는 “직원과 농아원생들이 주먹과 발을 휘둘러, 특히 세 명 가량은 눈 아래가 찢어지거나 뇌진탕 증세를 일으키는 등 많이 다쳐 중앙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전했다.

약 3시 40분 경 출동한 경찰은 양쪽을 막아서고만 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밤 11시 반 현재, 농아원 안에서 이사진과 ‘에바다 연대회의’ 활동가 등 50여명은 경찰을 사이에 두고 옛 재단 쪽 직원 및 농아

원생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이 와중에도 농아원생들은 각목을 휘두르고 종이에 석유를 부어 불을 붙이고 음식 찌꺼기를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경찰측에 30여명 비리재단 쪽 직원들을 농아원생들과 분리시킬 것 △교장과 이사장 등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신변을 보호할 것 △옛 재단 쪽 인사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 등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윤 원장은 “시청 사회과 과장과 계장 등 직원들은 양봉에 씨 등 농아원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들 쪽에서 있을 뿐,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 민주노동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사쪽이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경찰병력이 투입될 때까지 파업을 장기화하는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총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 5백여 명은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 대강당에 모여, 노조탄압 중단과 입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만약 정부가 경찰병력을 동원해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대회에서 민주노동총 비대위 백순환 위원장은 “자본과 정권은 월드컵의 장막이 걷히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으로 정리”하려 한다며, “사회적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부터 공권력 투입을 자행하기 시작”했다고 분노했다. 전날 새벽, 파업 54일째를 맞는 충남 아산 세원테크 노조에는 경찰병력이 투입된 바 있다.

최근 사쪽의 노조탄압은 ‘불성실 교섭→파업장기화→고소·고발→수배·구속→손배소송→가압류’ 등으로 정형화되고 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단병호 민주노동총 위원장 등 구속자 55명, 차수권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수배자 70명이며, 출석요구서는 1백여 명에게 발부됐다. 또한 민주노동총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두 1천2백64여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기업주와 사용자 단체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들은 전경련 앞까지 거리행진을 한 후 ‘정경유착 노동탄압 전경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경련 건물에 걸린 「“축구 4강”에서 “경제4강”으로 이제는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라는 플래카드는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었다. (범용)

○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어떨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노동자들이 있다. 1999년 겨울 재능교사 노조 설립 투쟁은 비정규직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후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조를 비롯해 이후 레미콘 기사의 건설운송노조, 보험모집인 노조, 학습지산업노조 등이 속속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이같은 특수고용 형태는 서비스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윤증대를 위한 사용자들의 경영방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 여야만 적용을 받게 되며 법원은 노동자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엄격한 사용자종속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용자종속관계 내지 경제적·인적 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사용자들은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두고 자신들이 져야 할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돼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역시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노조가 본격적으로 설립되면서 생기는 사용자와의 법적 분쟁의 결과로 ‘노동자성’에 관한 노동위나 법원의 판단이 상당수 나오게 됐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엄격한 사용자종속성의 기준과 적용에서 벗어나 ‘근로관계’의 변화나 사용자의 의도를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최근 판결들은 그러한 기대가 오산이었음을 드러내 준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내용인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 못 만든다’고 하였으며, 이 판결의 논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레미콘 기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최근의 흐름은 과거 판례의 태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더욱 공고하게 노동자성 부정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그간의 생산적 논란이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됐고 엄격한 사용자종속성을 고집하는 판결이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에만 신경이 쓰이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보지 않는 현재의 법원 구조아래에서는 변경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고용계약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라는 방식으로 노동자 개념을 추가하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 (권두섭 : 민주노총 법률원)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1. 의문사 전상규명, 역류 뚫고 간다  
의문사전상규명위, 한총련 전 간부 김준배 씨 사망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폐지 권고(7.9)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김준배 사건을 은폐한 정윤기 검사 등 규탄 기자회견 열어(7.10) / 의문사전상규명위, ‘강제징집자·녹화사업 피해자 조사대책’ 발표...가해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특단의 대책(7.11)

2. 이쯤되면 재판권 포기해야지!  
‘여중생 치사’ 미군, 검찰소환 불응(7.8) / 법무부, 미군 쪽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서 보내(7.10) / 미군 운전병 등, 의정부지청에 출두했다 초상권 침해 등 이유로 조사 받지 않고 돌아가(7.10) / 의정부 미 2사단 앞 4천여명 시위, “미군은 재판권 포기하라”(7.14)

3. 국회는 멧었지만, 할 일은 해야죠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열려(7.10) / 민변과 민주노총 등,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열려(7.12)

4. 노동현장, ‘물레 카메라’까지 등장  
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 위해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7.10) /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 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열려(7.11) / 대우조선 노조, 회사측이 요양 중인 산재환자의 행적을 몰래 찍은 비디오 공개(7.12)

5.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규정까지 야금야금  
14차 국제에이즈 회의 개막. 개발도상국의 에이즈 확산 방지책 논의...에이즈 퇴치 운동가들, 싼 값에 약 공급 촉구(7.7) → 시위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연설 중 미국의 에이즈 대처 무관심 항의하며 회의장 단상 점거(7.9) / 유엔안보리, 평화유지군 참여 국가의 전현직 관리나 요원의 경우 조사·기소를 1년간 면제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7.12)

6. 기타 : 유호근 씨, 종교적 이유 아닌 반전 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 선언(7.9) /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개인정보유출 등 인권침해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7.11)

○중요 통계 및 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 철도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내려(7.9) /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유통 서비스와 서버사용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 내려(7.1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17일(수)

제 21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97년 의문사한 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가 당시 프락치 전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은닉죄를 적용, 구속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의문사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16일 오전 11시 정레브리핑 자리에서 “전00가 프락치 역할을 한 것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 서 만약 전00가 밖에 나가면 학생들에게 납치될 것 같아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윤기 검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여 전00를 구속”했다는 당시 담당 형사의 진술을 공개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프락치 전씨는 담당 형사와 함께 정 검사를 찾아가 자신의 프락치 활동을 직접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전씨는 수배 중이던 선배 김준배 씨를 추석 연휴동안 자신의 자취방인 광주 북구 소재 청암아파트 1308호에 머물게 한 후 경찰에 제보를 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1개 소대 병력을 동원해 김씨의 검거를 시도했고,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진 후 경찰의 구타로 사망했다. 사건 후 전씨는 사람들 사이에서 프락치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범인은닉죄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문사위는 “범죄자를 제보하고 경찰과 약속대로 김준배와 함께 있었다면 범인은닉죄의 고의가 없어서 그러한 죄로 의율(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던 정윤기 검사는 신변보호를 위해 전00를 설득하여 구속해야 한다는 경

찰간부의 건의를 수용해 법원을 기망하여(그럴 듯하게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 9일 김준배 사건 발표 당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좀더 분명하게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정레브리핑 취지를 밝혔다. 사건 발표 직후 정 검사가 각 언론사에 팩스를 보내 “김준배 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며 김씨의 사인은 추락사 명백하다”라며 의문사위의 결정을 반박한데 따른 것이다. 황 사무국장은 “이는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문사위 김준곤 상임위원도 “김준배 사건 발표 후 검찰 스스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랬지만, “정윤기 검사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위원회가 마치 법에도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며 정 검사를 꾸짖었다. 의문사위는 정 검사를 고발하지 않고 수사기관인 검찰 자체의 감찰과 그에 따른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당시 전씨가 프락치였다 는 의혹이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라며, “검찰은 사건을 은폐·축소·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윤기를 파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 김준배 씨 유가족 및 추모단체들은 15~16일 정 검사가 지청장으로 있는 영월지청 앞에서 규탄투쟁을 벌이며 정 검사와의 면담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 검사는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용)

클릭 인권정보자료

“삼성,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삼성제벌 노동자탄압백서」

삼성해고자 김성환, 이정미 엮음 / 민주노총·한국노총 펴냄 / 312쪽 / 2002년

삼성계열사 해고노동자가 거대제벌 삼성에 맞서 싸우는 생생한 투쟁 기록을 모은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애초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할 목적으로 투쟁 사례를 정리하다가 내친김에 삼성의 무노조 신화 속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낱알이 고발하지는 취지로 엮어낸 ‘삼성제벌 노동자탄압백서’. 이 자료집에는 삼성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조합 결성권을 얼마나 철저히 짓밟아 왔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삼성을 어떻게 보호해왔는지 보여준다.

삼성은 우선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회유·납치·감금·협박하고,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악용해 미리 유령 노동조합설립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 가운데 행정관청과 삼성제벌의 결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삼성은 IMF 구조조정을 빌미로 98년 한해동안 삼성계열사 노동자 4만여 명을 자의적으로 해고해 노동의 권리를 박탈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건물에 대사관을 유치해 노동자들의 항의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일췌이다.

해고 된 후 6년 동안 삼성해복투에서 일했던 김성환 씨는 “삼성의 무노조·즉벌세습 경영으로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려내고 싶었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한다. (최은아)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2)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익산역 폭격'

지난 11일 낮 뜨거운 햇볕으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리는 전북 익산역 철로를 허리가 구부러진 '교부람' 할머니, 최요지 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위태롭게 가로지른다. 최 씨가 멈춰선 곳은 익산역 철로 건너편 귀퉁이에 있는 비석 앞. 이 비석은 한국전쟁 중이던 52년 전 7월 11일 미군의 익산역(당시 이리역) 폭격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최 씨 역시 당시 익산역에서 일하던 남편을 미군의 폭격으로 잃었다.

1950년 7월 11일 당시 익산은 접전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남성중학교와 이리여중에 다니던 학생들은 한 국회의원의 시국강연에 동원돼 이리극장을 배웠고, 평화동 변전소 부근에선 우시장이 열려 전주·김제·만경·임피·오산 등지에서 온 사람들로 분주했다. 징병 소집 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위해 익산역으로 모여 들고 있었고, 익산역 직원들은 전시 상황이라 비상 대기 중이었다.

이날 오후 2시 40분 경 미공군 폭격기 'B-29' 2대가 익산역 위에 나타났을 때 기관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미군기를 환영했다. 그러나 그 순간 미군 폭격기는 익산역과 주변의 송화동 민가에 수십 발의 폭격을 가했다. 익산역 일대는 화염과 폭음에 휩싸였다. 이윽고 미군 폭격기는 폭격에 놀란 사람들과 시국강연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달아나던 변전소와 전라선 철길 주변을 향해 폭격을 퍼부었다.

또 나흘 후인 7월 15일 미공군 소속 전투기 4대가 익산역 상공에 나타나 민간인들을 향해 30~40분 간 로켓포를 쏘고 기총소사를 가해 또다시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죽었다.

이는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당시 16살이었던 익산폭격 희생자 유족회의 이창근 회장은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었다. 이 회장은 "팡"하는 소리를 듣고 학교에서 뛰어나가 송화동 쪽으로 가 보니, 집은 형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역에서 근무 중이던 아버지의 시신을 철도역 구내에서 수많은 시체들 가운데 겨우 확인

익산역 앞 광장에 익산폭격 민간인 희생자 모두를 추모하는 위령비가 세워진 것은 2000년 10월이었다. 익산역·철도청·건설교통부와 오랜 실랑이 끝에 부지가 확정됐고 익산시의회를 점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엔 익산시와 시민단체 공동의 작품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어 2000년 5월 30일 이창근 유족회 회장은 주한 미부대사를 만나게 된다. 당시 미부대사는 '익산폭격은 한국전에 처음 참전한 미공군 조종사가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판한 것'이란 요지의 말을 했다. 이에 이 회장은 '어떻게 한 차례도 아니고 세차례나 오판을 할 수 있느냐'라며 '진정 오판이었다면 그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유가족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1월 한국의 국방군사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공문 역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2001년 9월엔 익산시의회가 '익산역 폭격사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영환, 아태 특별위원회)'를 구성, 민간인 학살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국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자료 수집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과 철도청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한국전쟁 당시 익산역 폭격사건 청원심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정부나 한국정부 그 누구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있다"라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나아가 특별위원회는 국회와 각 정당 등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입법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정부, 미국정부, 국회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응답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주영]

할 수 있었다"라고 당시를 기억했다. 강제주 할머니는 당시 남동생 셋을 잃었다. 이리극장에 간 두 동생은 폭격을 피해 도망가다 죽고, 막내 동생은 역에 나가 놀다 죽었다고 했다. 익산시의회가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아 2001년 말까지 파악한 익산폭격 사건의 희생자 수는 철도청 직원 54명, 민간인 40명으로 모두 94명이다. 그러나 이는 가족에 의해 신고된 희생자의 숫자일 뿐, 익산시의회 보고서는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 정부와 철도청의 공식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망자는 신원미상을 포함해 약 3백5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다. 또 이 회장은 익산역 구내에서만 80여 구의 시신을 봤고, 송화동 주민 50여명, 철도관사 주민 30여명, 시국강연에 동원됐던 학생 30여명, 또 군 입대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 2백여 명 가량이 죽었다고 보면 실제 희생자 수는 4백여 명에 이를 거라고 추정했다.

그나마 익산에선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했다는 점이 다른 민간인 학살 현장과 달리 두드러지는 성과다.

오랜 침묵 끝에 지난 99년 10월 11일 송현섭 국회의원이 철도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익산역 폭격 사건에 대해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익산역 폭격사건 진상규명 운동에 불이 붙었다. 이 회장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좌경 세력으로 몰리니까, 50년 동안은 입 다물고 살아왔다"라고 말한다.

99년 10월 26일 구성된 '익산폭격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와 희생자 유족회는 미군의 익산폭격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청와대·미대사관·국회·익산시의회 등을 찾아다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19일(금)

제 21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산업연수생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송출기관에 거액의 뇌물을 줘야한다. 이렇게 거액의 뇌물 지고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보장이 안돼 감금, 폭행 등 각종 인권유린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해 보다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필연이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언제나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다. 신분노출이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이들 불법체류자는 또 다시 임금체불, 비인간적 처우 등의 인권유린을 묵묵히 참으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불법체류 상태인 이주노동자는 현재 26만6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논평할 가치도 없다." 평등노동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의 첫 마디는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아래 개선안)의 긍정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허황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지난 15일 각 언론사에 배포된 개선안은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국내취업을 확대하고 △불법취업자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거창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수생의 정원을 현 12만7천여 명에서 14만5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불법이탈자를 모두 합해 허용된 총정원 내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산업연수(D3) 1년 후 연수취업(B8) 2년'이라는 현행 산업연수제는

그대로 온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윤주 지부장은 "(개선안의) 필요성이고 뭐고를 떠나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반인권적인 제도를 확대·강화시켰다는 것이 개선대책인가"라고 반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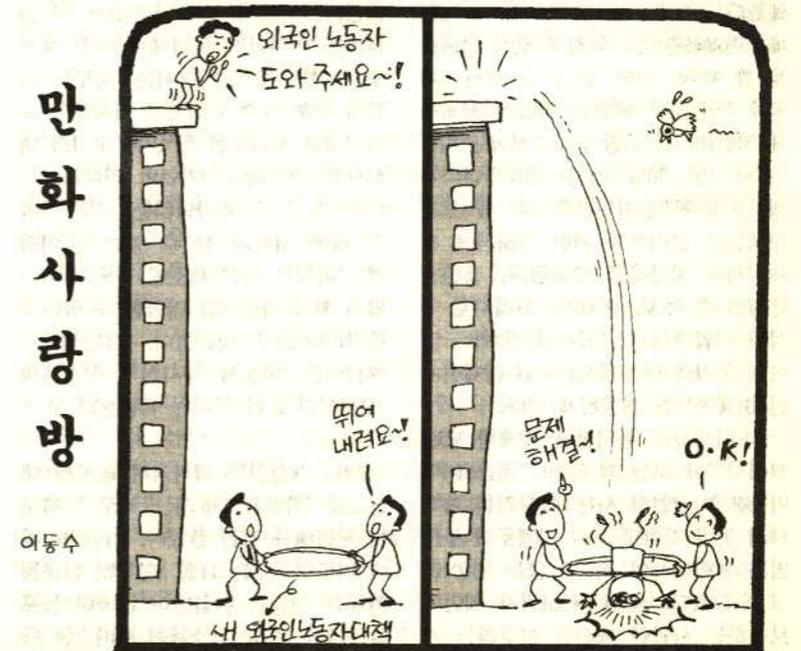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에서 "(산업연수제에 의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노동착취,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자 급증, 송출 및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라며 "산업연수생 제도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지금까지의 비판을 상기시켰다.

노동·인권단체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안이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복지노동심의관실 정하영 과장은

개선안에 대해 "산업연수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외국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주장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없애는 해결책은 문제의 원인인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였다. 결국 개선안은 산업연수제의 온존과 대대적인 단속강화를 본질로 하고 있다. 단속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현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진다. 개선안은 내년 3월 31일까지 불법체류자 전원에 대해 출국조치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범법자인 불법체류자는 법대로 해야 한다"라면서, "(사면을 하게 되면) 앞으로 체류질서가 엉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2면에서 계속)



〈글리백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18일 오후 2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글리백 공공성 확대 공동대책위 (아래 공대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제정'으로 표현된 강제실시권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독점적 가격책정 및 배타적 판매권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가격이 너무 높거나 생산자가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않는 등 특허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리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는 지난해 한국에서의 글리백 약값을 2만5천원대로 책정했다. 환자들과 보건의료 단체들은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약값이 원료비(845원)의 30배에 이른다고 약값의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올 6월에 2만3045원으로 약값을 소폭 인하했을 뿐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 7개국을 기준으로 책정한 약값을 전세계에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단체들은 글리백과 관련 특허청에 강제실시권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은 7월 중 학자, 변호사, 변리사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강제실시권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바티스는 특허청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청구는... '공공의 이익' 및 '비상업적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여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권자 개인이 보유하는 사권인 재산권 보호라는 가

치 역시 무시되어서는 아니되는바... 노바티스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들인 다대한 노력과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중의료연합 공공의학센터 권미란씨는 "신약의 연구개발에 공적부분의 역할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공공의 노력에 의해 개발된 의약품이 제약자본의 사적소유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글리백은 1960년대부터 30여년간 연구된 백혈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노바티스가 미국 오레곤 암재단과 공동연구로 개발한 약이다. 이 과정에서 노바티스의 투자비용은 전체비용의 10%였으며, 임상실험을 하는 동안에는 희귀의약품지정을 받아 소요 비용의 50%만큼 세금공제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실시권 청구가 글리백을 계기로 최초로 제기되었으나

(⇒1면에서 기사 이어짐)

김해성 목사는 이러한 전원추방 정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이들이 모두 추방됐을 때 발생하는 인력공백 문제에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것. 김 목사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자진신고한 사람들을 첫 번째 허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기업의 인력공백도 막을 수 있고 추방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어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며, "이들은 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기 전의 과도기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개선안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김 목사는 혹평했다.

한편, 개선안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관리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취업관리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방문동거(FI)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동포들은 음식점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 청구는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캐나다의 경우 1981-1991년 사이에만도 4백21건이 청구되어 그 중 68%인 2백88건이 허가를 받았다.

오병일 진보넷 사무국장은 "선진국에서는 여러차례 강제실시가 실행됐는데도, 제3세계에서는 선진국 정부 및 기업들의 압력으로 거의 강제실시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은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위해 노력했으나 선진국의 무역억복 또는 통상압력으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국장은 "글리백 문제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불평등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공동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의련 공공정책팀 김동숙씨는 "자본의 세계화가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사적소유와 이윤추적의 장으로 변모시켰는데, 의약품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없이는 앞으로 계속 들어올 특허신약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공은나)

에서도 최장 2년간의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그 혜택의 대상을 △국내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있거나 △대한민국 호적등재자 및 그 직계 존비속으로 40세 이상인 동포로 한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문제가 제기됐다.

주로 재중동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취업관리제에 대해 동북아신문 우성영 편집장은 "조선족 동포들이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어 마치 노예처럼 묶일 수 있다"라며, "산업연수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우 편집장은 "송출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 부담으로 동포들이 다칠 수밖에 없다"며 "(개선안) 조선족 관련 단체에서 얘기해 왔던 입국비리, 송출비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개선안은 노동·인권단체는 물론 재외동포 관련 단체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었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20일(토)

제 21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합법화투쟁 본격화

한총련 대의원들이 경찰의 소환에 응해 경찰청에 집단 출두하려 하자, 경찰이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낮 12시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⑦번 출구에서는 경찰청에 출두하겠다는 한총련 대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전경들 사이에서 1시간 가량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이날 한총련 대의원 등 한총련 소속 대학생 1백50여 명은 서대문역을 나오지도 못하고 해산해야 했다.

현장에 있던 서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은 "다중이 모이면 집회고 저건 불법 집회"라며 한총련 대의원들을 가로막는 이유를 밝혔다.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정보과장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신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며 출두 자체를 못미더워했다. 정보과장의 답변에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함이 역력했다.

'서울지역 서부지구 총학생회 연합' 이재희 의장은 "우리가 얼마나 당연한가를 몸으로 알리기 위해 공개출두투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희대 법과대학 박종범 학생회장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하겠다"라고 결의를 드러냈다.

경찰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전국 지청과 경찰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 1백5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송했다. 또 다음달 3일까지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서는 수배·구속한다는 방침이다. 한총련 김형주 의장은 지난달 24일 이적규정이 적용돼 이미 기소된 상태다.

공개출두투쟁에 앞서 아침 10시에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전국 민중연대(준),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주축로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생들의 대규모 구속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라는 대학생 자치조직에 달라붙은 '이적단체' 프리포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기 한총련 의장이 이미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얼마 전 검찰은 전국의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며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한다.

검찰은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현 정권을 '친미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한다는 점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 △주한미군철수, 미국전쟁책동 분쇄, 북미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투쟁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한총련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동일하다는 점을 한총련의 이적성을 드러내는 근거로 제시한다.

안타깝게도 사법부의 시각 역시 공안당국과 다르지 않다. 한달여 전 9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제2부(주심 김신욱)는 '한총련의 연방제 통일 강령이 6·15남북공동선언통일 강령으로 수정되고, 한총련의 불법폭력 시위 사례가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회사의 사주를 받은 미국의 압력으로 보건정책이 좌우되고, 여중생 등을 장갑차로 잡아뭉겐 미군을 정의롭게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는 나라를 놓고 '식민지나 '사대매국정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분석의 과학성 여부를 떠나 너무도 자연스럽다.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철폐 주장 역시 자유민주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든 제기할 수 있는 요구다. 이를 두고 '이적(利敵)'이라 낙인찍었다면, 양심있는 이들은 기꺼이 이적을 할 것이다.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조리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사실 외에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어도 구속·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적 사냥은 공안검사와 수구적 재판관들의 관념이 지배하는 게임일 뿐이다. 97년 5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후 벌써 6년, 이미 수백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는 낙인을 받은 채 감옥에서 씨었다. 공안당국이며, 아직도 배가 고프는가?

#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 “평택경찰, 폭력방조 중단하라”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옛날처럼 지금 농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사이 좋게 지내고 싶다.” 옛 재단의 비리와 폭력에 질려 농아원을 떠나 97년부터 '헤아래집'이란 이름으로 보금자리를 튼 청각장애 학생들의 소원이다. 이들은 지난 겨울 옛 재단 쪽 직원들과 농아원생들이 현 이사진과 원장, 교장 등의 농아원 출입을 가로막고 헤아래 집까지 들이닥치는 등 폭력의 한계선을 넘자, 에바다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헤아래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5일 윤귀성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과 교장, 원장,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소속 대학생들은 굳게 잠긴 문을 열고 에바다 농아학교에 들어갔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농아원과 학교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옛 비리재단 쪽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폭력의 온상처럼 돼버린 농아원을 청각장애학생들의 참교육의 터로 만드는 일.

그러나 16일 새벽 경찰은 오히려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이사진과 대학생들을 농아원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농아원생과 직원들은 에바다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이사진들에게 수차례의 폭력을 가했다. 심지어는 전경과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주먹으로 때리고 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다고 한다. 그 동안 다쳐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만도 연대회의 6명, 경찰 3명이나 된다.

이사 중 한명인 남구현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과)는 “그처럼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 처음 봤다”라며, “지역 주민들까지도 농아원생들의 폭력이 공포스럽다고 말하더라”라고 혀를 내둘렀다. 헤아래집의 김선옥 교사는 “농아원생들 중엔 처음에 같이 농성했던 애들도 많은데, 옛 재단 쪽에서 금전적으로 유혹하면서 교사들과 헤아래집 아이들을 미워하게 하고 나중엔 폭력에 물들게 만들어 버렸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폭력을 방지

하고, 오히려 18일 윤 이사장과 남정수 사무국장을 연행하려고 하는 등 편파적인 행동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남 교수는 “평택경찰과 시가 폭력을 방치하면서, 농아원생들의 폭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아이들이 처음엔 미안해했는데, 농아원에선 아무리 폭행해도 처벌받는 일이 없다보니 폭력을 아예 몸에 익혀버린 것 같다”라고 답답해했다. 급기야 18일 새벽엔 농아원 인근 주민들까지 나와 경찰 관계자에게 왜 폭력을 방조하냐고 따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 단체에선 농아원생들의 폭력을 유발시켰다고 현 이사진들과 연대회의를 비난하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폭력사태의 근원을 없애야지, 정상화시키겠다고 나서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교사는 “해결책은 폭력과 파행운영의 장본인들인 옛 비리재단 쪽 직원들을 법원 결정대로 출입금지시키고, 원생들의 폭력 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오후 3시 이사진들과 연대회의 등은 에바다 농아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폭력사태를 방관하는 평택경찰을 규탄하는 동시에 에바다 정상화를 앞당기자는 결의를 다짐 예정이었다. [이주영]

###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범대위)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소의 매각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한국전력은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급전안전성 △수익성 △성장잠재력 등이 가장 우수한 한국남동발전을 첫 번째 매각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발전회사의 매각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전력은 한국남동발전을 포함해 2개사를 먼저 매각하고, 2005년부터 나머지 3개사를 매각할 예정이다. 현재 발전소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으로는 엘파소, 미란트 등 해외기업과 포스코, 에스케이 등의 국내기업이 있다.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백순환 위원장은 “정부의 발표를 접하고 경악과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한국남동발전은 매년 2천억원대 순익을 올리며 부채비율이 98%에 불과한 우량기업”이라며, “무슨 이유로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를 매각하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의문을 던졌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천억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발전노조 신종승 위원장 직무대행은 “발전소 매각은 전력요금의 폭등, 국부 유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특히 전력 대란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발전소 매각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0년과 2001년 전력난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월 평균 55달러인 일반소비자들의 전기사용료는 민영화 이후 6백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전노조, 민주노총, 범대위는 발전소 매각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을 조직하여 8월 중 전력산업 민영화 관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발전노조는 22일 중앙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재파업을 포함한 매각저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발전노조는 지난 2월 24일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후,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공론화하며 38일간의 파업을 이끈 바 있다. [이공은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23일(화)

제 21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기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기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일반접견을 준용해 이를 불허했다”며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법상 미결수는 아무 제한없이 자유롭게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교도관의 입회 하에서 접견이 이뤄지거나, 일반접견에 의거해 접견횟수가 제한되거나 불허되는 등 사실상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돼왔다.

김씨는 소장에서 “수형자가 교도소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구금상대라는 제약과 자신의 직속 통제기관과 쟁송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거의 절대적”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교도소 측이 일반접견조항을 적용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고, 시간과 장소 역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전주교도소 수감 당시 전복의 한 인권단체에 서신을 발송하려고 했으나 전주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하자 소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감 직후 김 씨는 안양교도소측으로부터 집필허가를 받지 않고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금지

징벌 처분을 받게 됐으며, 징벌이 끝난 후 가족을 통해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게 했다. 이에 변호인이 김씨를 접견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으나 안양교도소 측은 일반인 접견에 의거해 김 씨가 이미 접견횟수를 채웠다고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

소송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수용자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한 접견권은 규정돼 있는 반면 민사재판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기결수들의 변호인 접견권이 변변히 침해되고 있다”며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

우 기결수와 변호인의 접견은 민·형사의 구분 없이 보장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은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에서 김 씨는 “금치 기간 중 제3자와의 접견 및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운동을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을 함께 요청했다. 행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지 기간 중에는 징벌실 수용은 물론 일체의 접견과 서신, 운동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외부교통의 차단은 징벌과정에서 발생한 교도소 측의 불법행위 등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금지 자체만으로도 수용자에게 치명적인 육체적, 정신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운동시간마저 제한한 것 역시 수용자의 건강과 안생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도적 처사라는 반박이 끊이지 않았다. [유해정]

###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무기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산업연수생 총 정원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5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종교·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올바른 인력제도 수립을 요구했다.

최서연 원불교 교부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 양산, 송출과 강제적립금 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을 기존 8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리는 등 연수생 제도를 확대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로 놀라운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투쟁본부는 “정부는 내년 3월 31일까지 25만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내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단속과 추방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천웅 투쟁본부장은 앞으로 정부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회할 때까지 명동성당에서 무기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공은나]

#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소리바다와 관련한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 사이트나 MP3 음악 파일의 이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향후에 인터넷 상의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그 파급력은 엄청나며,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물론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일 뿐이지만, 본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음반사 측은 마치 저작권을 일반 물건의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저작권을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작권은 '문화의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지식의 확산이나 이용자의 권리 역시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한다. 즉, 저작권자의 권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일정정도 '제한'을 받게 된다. 소리바다와 관련한 쟁점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은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서로 책이나 음반을 돌려보는 것과 같은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까지 저작권으로 제한돼야 하는가 이다. 저작권법 27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인터넷은 축복이면서 굴레가 될 가능성도 높다. 과거에 저작권법의 주 단속 대상은 상업적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거의 비용이 없이, 원본과 동일한 복제물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해 규제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우선 과거에는 허용됐던 친구에게 책을 빌려주거나 복사해주는 행위가 인터넷에서는 금지된다면 (디지털이기 때문에 금지한다?), 디지털화와 인터넷이 가져다 준 정보 유통에 있어서의 혁명적 가능성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만일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다면, 메신저나 메일을 통한 파일 교환 역시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에게 규제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ISP들은 이용자의 메신저나 메일 등 개인적인 영역까지 감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이자 중대한 통제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진정한 음악인이라면 자신의 노래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인터넷은 창작자와 수용자가 음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이 필요한 때다.

(‘인권이 이야기’는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새 필자들의 글로 찾아갑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1. 쇠귀에 경읽기인가? 연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내년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 (7.17) /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산업연수생제 확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방침에 반발 (7.17~18)
  - 2. 한총련 합법화하라!**  
경찰, 한총련 대의원들이 집단 출두하는 것도 가로막아 /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7.19) /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1254, 한총련을 자유케하라' (7.20)
  - 3. 비리의 커넥션, 끊기가 힘들다**  
에바다 민주적 이사진 등, 농아원에 들어가려 했으나 옛 비리재단 쪽 농아원생과 직원들에 폭력 당해 ... 평택 경찰과 시청, 폭력 방조해 비난 사 (7.15~20)
  - 4. 경·검 합동작전, 프락치를 보호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 97년 의문사한 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가 당시 프락치 전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은닉죄로 구속했던 사실 공식 확인 (7.16) / 고 김준배 씨 유가족 등, 정 검사가 있는 영월지청 앞에서 규탄투쟁 벌여 (7.15~16)
  - 5. '계란들'이 모여 바위를 친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살인미군 한국법정 처벌 시민특별수사대' 발족 (7.15) →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소과개정 등 요구 (7.16) / 국가배상심의회, 여중생 2명에 대해 각각 1억9천5백여 만원의 배상금 산정 (7.19)
  - 6. 기탁 :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들, 노조탄압 중단과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 열어 (7.15) / 정부, 체세포 복제에 의한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법률안 가다 잡아 시민단체 반발 (7.18) / 「글리백 공공성 확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열어 (7.18)**
- ◎ **중요 판결 및 통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게 안전상 필요 이상의 '알몸 수색'을 하는 것은 위헌 결정...관계법령 재정비 권고 (7.18) / 서울 고법 민사9부,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노총등이 월간 <한국노동단>과 발행인 이도형 씨를 상대로 낸 손해소송에서 모두 1천5백만원 배상 및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 (7.21)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24일(수)

제 21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판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인 윤현식 씨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년 6월 7일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도록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화양동장의 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당시 윤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듣고 화양동사무소에 이를 요청했으나, 동사무소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윤 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본지 5월 14일, 6월 4일, 6월 15일 참조> 이에 지문날인제도에 거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윤 씨는 결국 지난 6·13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다른 신분증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소장에서 "화양동장의 처분은 단순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의 선거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헌법소송의 대리인인 이은우 변호사는 선거에서의 본인확인 절차가 주민등록제도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으며 지나치게 까다롭고 행정

편의적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무는 다 부과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참정권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 시 신분 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운영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참정권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나라

대부분 국가신분등록 체계가 없기 때문에 선거인 신분 확인 절차가 훨씬 간편하다"라며 "미국의 경우, 선거인 명부에 서명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수가 많고 증명서를 요구한다 해도 신용카드, 전기나 가스 등의 요금 청구서 등을 증명서로 인정하는 수도 많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일본에서도 투표 동지표만 보이고도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지문날인 제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참정권까지 박탈당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앞으로 대선 때까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신분 증명 책임을 방기한 행정자치부 앞 화요일 1인 시위와 '신분증명제도 국민기본권' 토론회 등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클릭! 인권정보자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허혜영 (연세대학교원 유럽전공,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2002/ 73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와 더불어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그간 선연적인 수준의 권리로 취급돼왔다. 그러나 필자는 사회권의 실현을 강제할 수단이 결여된 현실은 사회권의 본질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권이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유지를 위해 지배세력의 인권체계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왜곡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사회권을 침해당한 개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중 하나로서 사법적 보호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필자는 국가가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관점 아래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권의 개별 권리를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의 진보적인 판례들을 검토했다. 이들 판례들은 '최소핵심임무의 즉각적인 이행, 차별금지, 가용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후퇴조치 금지' 등을 국가가 지켰는지 여부가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최은아)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곧바로 여수를 접수하고, 20일에는 순천을 점령한 후 구례, 곡성, 보성 방면으로 흩어져, 21일 이후 지리산으로 입산했다. 한편 여수에 남아있던 14연대 병사들 일부는 정부군에 맞서 싸우다 24일 백운산과 벌교 방면으로 퇴각해 역시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14연대 주력이 떠난 여수는 27일 정부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됐고, 이후 정부군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로 국가 기강을 세워갔다. 이른바 '반란치하'의 민간인들은 반란이 진압되자 평화 대신 학살을 선물받은 것이다.

구례유족회 박찬근 회장은 48년 11월 18일 헌병들에게 연행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여순사건 발발 후 꼭 한 달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박 회장은 동네에서 놀다가 아버지를 찾은 헌병들을 집까지 안내했다. 헌병들은 1주일 정도 집에서 기거를 하던 아버지 친구의 집 보따리에서 책 몇 권을 발견하더니, '친구분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아버지를 구례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바로 그날 밤 구례경찰서는 빨치산의 습격을 받았다. 몇 시간의 교전 끝에 빨치산은 물러갔지만, 경찰들의 분은 가시지 않았다. 이때 유치장이 간혀있던 민간인 72명이 경찰의 화풀이 대상이 됐다. 경찰서 마당으로 끌려나와 그 자리에서 총살당한 것. 이들 중에는 단지 통금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빨치산 습격과 아무 관련이 없었으며, 조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박 회장의 아버지도 이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총살 후 경찰들은 이들의 시신을 경찰서 뒤쪽에 있는 봉성산 자락에 암매장했다. 박 회장은 이듬해 봄 암매장지를 찾았지만, 이미 시신들이 부패한 상태로 뒤엉켜 있어 수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회장은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에 대해 이후 제대로 된 항변 한마디 못했다. 처절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 중 박 회장을 짓눌렀던 것. 그런 와중에 암매장지에는 아까시 나무들이 자라 어지러이 뒤엉켜 있었고, 짐작을 강요당했던 50여 년의 역사와 잊혀지고 있는

학살의 기억 또한 뒤엉켜 있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여순사건조사연구팀장은 "14연대의 '반란'은 10월 27일 끝나지만 여순(학살)사건은 이후 시작된다"라며,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보성 등의 지역에서 "학살은 국군이 파견된 '면 단위'로 광범하게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95년부터 각 마을을 돌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증언을 기록해 왔다.

구례경찰서 학살사건을 포함,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추정하는 여순사건 관련 사망자 수는 현재 1만 명에 이른다. 이는 당시 사건 관련 지역 인구의 1/8에 해당된다. 이들 중 여순사건 봉기 당시 14연대에 의해 학살된 수는 3백 명 정도다. 나머지 95% 정도가 국군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다.

국군과 경찰은 진입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군'이나 '부역자'를 색출해 그 자리에서 혹은 이후에 처형을 단행했다. 여수유족회 김상태 회장의 증언은 이들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잘 드러내 준다.

김 회장의 큰 아버지는 여순사건 진압 직후 진압군에 의해서 붙잡혔다. 14연대가 봉기에 성공한 후 여수 시내에서 인민재판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는 이유다. 좌익이 아니고서야 인민재판 모습을 찍을 리 없다는 것. 김 회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구교도소에서 큰 아버지가 처형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여순사건 당시 부산으로 도망갔다가 몇 달 후 돌아온 김 회장의 아버

지도 여순사건의 희생자였다. 경찰은 김 회장의 아버지에게 '왜 도망갔냐'고 추궁하다가, 좌익인사의 사상전향을 위해 만들어진 보도연맹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어, 김 회장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초기 여수 앞바다 에기섬 부근에서 수장당했다. 당시 에기섬에선 1백50명 정도의 보도연맹원들이 집단학살 당했다고 한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개월이 막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봉기로, 대응 여부에 따라 신생정부의 국가운영 능력을 인정받고 국제사회로부터 독립된 나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에 대한 진압명령의 정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14연대의 봉기는 '반란'으로 규정되고 신속히 진압됐다. 이때 계엄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령이 발동되는 위법행위도 동반됐다.

진압 후 좌익과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국민들은 모두 색출돼 학살당해야 했다. 당시 좌익과의 관련성은 객관적 기준도 없이 국군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됐고, 좌익이란 꼬리표 앞에는 어떠한 변론도 소용이 없었다. 따라서 좌익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좌익으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국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다. 이런 와중에서 실제 좌익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가치없이 죽어갔고, 많은 경우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좌익으로 몰려 희생을 당했다.

게다가 여순사건을 계기로 그해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합법성까지 부여하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이후 슬한 인권유린을 낳으며, 독재체제를 강화해 갔다. '대~한민국'은 여순사건을 학살로 진압하며 세워졌고, 사상사비를 통해 '훌륭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25일(목)

제 21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판사 김재형)는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1심 판결문에 준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한두 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바가 있지만 국가 존립 자체를 흔든다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으며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94년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과 박흥 당시 서강대 총장의 '대학가 주사파' 발언 등

###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24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재판권의 이양이 어렵다'는 미군의 입장을 두둔한 국방부의 발언을 규탄했다. 지난 22일 이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한미주둔군

공안몰이 가운데 탄생한 것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공안당국의 폭거라는 지탄을 받았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재판에 소감을 말했다. 그러나 결국 무죄 판결은 내려졌지만, 이번 사건이 정 교수 등과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 교수는 "이번 사건 때문에 어떤 글을 쓰더라도 자기검열을 하게 됐고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단지 사건에 관련된 우리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효과를 계속 발휘하고 있다"라며 "그 효과는 '유죄' 판결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지위협정(SOFA)은 태생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며, 공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미군 측이 재판권을 이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소파의 태생적 불평등성" 운운하며 한국 사법당국의 재판권 행사를 미리 포기해 버리려는 국방부의 작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범대위는 "국방부의 망언은 지난 10일 미군에게 형사재판권 포기를 정식으로 요청한 법무부에 대한 명백한 월권이고 부당한 간섭행위"라며, "형사재판권을 이양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적당히 은폐, 무마하려는 주한미군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국방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서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형사재판권의 이양이 어렵다'는 국방부 대변인의 망언 및 그 연장선 위에 있는 29일 기자회견의 즉각적인 취소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대변인의 파면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송영)

###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19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한기택)은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1호, 제3항, 제4항, 제5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제청된 조항은 청소년보호회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법원은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자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킴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주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명예형인 자격정지... 못지 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동일한 범죄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범용]

#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편집자주〉 청소년에게 노동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나', '교육적이나 비교육적이나'는 논의만으로는 청소년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청소년들이 왜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밝힘으로써, 정작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하고자 한다. 가톨릭대학생연합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작년 11월부터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왔다.

청소년들 중 30%가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는커녕, 나이가 어리고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때이고 온갖 모욕과 성추행을 당하는 등 이들에 대한 부당 대우는 심각하기만 하다.

### 불법적인 근로계약

일을 시작하기 전 일하는 청소년들은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중에 고용주와 청소년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처음 근로계약을 했냐'는 질문에 "말씀을 확실하게 안 하셨어요. 저도 그 때는 처음 일하는 거라서, 어떻게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임금, 노동시간 등)는 잘 못 물어봤어요"라는 정00(음식점 서빙, 18살) 양의 대답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은커녕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기도 한다.

심지어 근로계약 내용에 '중간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단 한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 불법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고용주들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22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계약내용으로 인해 일하는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으며, 실제 임금을 때었던 김00(음식점 서빙, 17살) 양처럼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약속 어긴 거니까 달라고 하지도 못했어요"라며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고용주가 임의대로 근로계약을 하거나 불법적인 계약내용으로 인해 일하는 청소년들은 일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고용주가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아무 말도 못한 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 과도한 노동시간

"쉬는 시간은 따로 없었어요. 밥 먹을 때도 점심식사는 대충하는 날이 많았고 저녁에는 밥을 먹는 테이블까지 손님들이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작년 말에 한 달 동안 분식집에서 서빙을 했던 이00(17살) 양의 말이지만 특별한 경험은 아니다. 휴식 시간 뿐 아니라 밥 먹을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과도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은 이미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더러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김00(건설현장 보조, 19살) 군처럼 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김 군은 "거기서 거의 일하는 시간이 11시간, 12시간 돼요. 설 수는 있는데 눈치가 보이죠. 누군 쉬고 누군 일하고 있으니... 근데 일하는 동안 잠깐 쉬는 게 간부 눈에 걸리면 또 욕을 먹어요"라며 정해진 휴식시간마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노동 중에 취하는 휴식은 일하면서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식사나 기타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 53조는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하는 청소년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있는 것이다.

### 저임금과 차등임금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받게되는 부당한 대우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때로는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른 노동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로, 음식점 서빙을 했던 권00(음식점 서빙, 18살) 양은 "한달 포박 일해서 20만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시급이 1천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열 받아요. 주말에는 토요일 만원, 일요일 만오천원 받구... 어른들이랑 똑같이 일했는데 돈도 조금 받고,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김00(패스트푸드, 18살) 양도 "한 달 동안 일요일 빼고 하루에 4시간씩 일했는데 9만원 받았어요.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했더니 니가 일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달은 조금 이라며... 일은 다 시켜먹고... 같이 일한 친구들도 6개월 지나야 20만원에서 30만원 가까이 받고 그랬어요"라며 자신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실망스러워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2천1백원(적용기간 2001.9 ~ 2002.8)이지만 청소년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에 따른 저임금 뿐 아니라 청소년들은 파트타임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차등임금을 받기도 한다. 작년엔 수능이 끝나고 잠시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일했던 김00(20살) 양은 "월급으로 받는데 다 달랐어요. 아르바이트생은 지각 5분만 해도 팍팍 깎고... 또 아르바이트는 (텔레마케팅) 한 건당 1만원이구요, 직원은 2만원이예요"라며 관행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 차등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의아해 했다.

결국 고용주들은 청소년의 노동력을 값싸고 쉽게 사용할 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불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26일(금)

제 21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 택시파업 63일, 총력투쟁 결의...“법을 지켜달라”

택시파업 63일째인 25일,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제 철폐에 대한 사족과 행정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승규, 아래 민택노련) 소속 조합원 4천여 명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시청 앞에서 '파업승리 및 약덕사업주 구속 관철을 위한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어, 향후 전국차량 상경, 고속도로 점거 등 강도높은 차량시위를 선언했다.

결의대회에서 강승규 위원장은 "택시노동자도 사람같이 살고 싶다"는 목적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해 왔다"라며, "택시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사느냐, 사업주에 무너져 노예처럼 사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강 위원장 등 파업지도부 30여 명은 지난 15일부터 단식에 돌입, 죽기를 각오하고 파업을 이끌고 있었다.

사납금제 철폐! 사실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는 법에 규정된 대로 임금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택시노동자(개인택시 제외)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의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른바 '운송수입 전액관리제'는, 법대로라면, 이미 97년 9월에 시행됐어야 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택시노동자들은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채워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진다. 따라서 △과속, 신호위반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과도한 승차거부 등 택시서비스의 질 하락 등 사납금제 아래에서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②

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 대우와 인권침해는 과도한 노동이나 저임금 뿐 아니라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부터 시작해 일하는 동안, 그리고 그만두기까지 고용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임금 미지급

2년 전에 집을 나와 봉천동에 위치한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김OO(신문 배달, 17살)군은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집을 나와 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김군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도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김군은 "불행했어요. 처음에 50만원 준다고 했는데 24만원 밖에 안 주고... 원래 신문 1부 돌리면 천백원이었는데 안보는 사람한테 돌리는 건 안 쳐드려요"라며 씁쓸해했다. 결국 청소년의 동의 없이 고용주가 정한 방식대로 임금을 계산하다보니 청소년들이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곤 해 처음 약속했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고용주가 임금의 일부를 그만둘 때 주겠다고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했던 유OO(20살)양도 마찬가지로 "10일 더 일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만 둘 때 준다"며 고용주가 제때에 주지 않아 결국 일을 그만 둔 후에도 몇 번이나 찾아가서야 겨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배제

2000년 7월 1일부터,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해 청소년의 경우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했던 한OO(18살)양은 "같이 일한 애들 중에 기름에 데고, 청소하다가 손이 베이기도 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다친 거

니까 그냥 자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치료비 같은 건 없었어요"라고 말해 청소년들이 이런 권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치료는 물론 치료비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OO(17살)양은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안전장치가 없어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다. "제가 (손님 머리틀) 말리고 있었어요. 근데 콘센트가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과열돼서 몇 번이나 그랬어요. 거기다 전기랑 물을 같이 쓰잖아요"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산재보험의 적용 뿐만 아니라 일하는 청소년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만들고 안전 교육도 실시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성추행 및 성차별

일하는 청소년들 중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성추행이나 성차별을 당하는 일도 있는데 주유소에서 일을 했던 김OO(18살)양은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하고 뛰어나가야 하는데.. 어색해 하면서 앉아있으니까 오빠들이 다음 번에 내가 안 나가면 가둬놓고 기습 만진다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바로 그만뒀어요"라며 말하는 내내 난처해했다. 고용주에 의해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같이 일하는 동료 남자들에 의해 성추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이야기도 할 수 없어 일을 하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이중 삼중의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일을 구할 때 일의 특성에 맞는 조건보다는 외모를 중심으로 모집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도 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불편한 사항을 체크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했던 한OO(18살)양은 "점장이 추천해서 하는데요. 아 일을 하려면 성실하고 착하고 예뻐야 한다고 했어요"라며 선발조건을 얘기했다. 그러나 착해야한다거나 외모 같은 것은 언뜻 들어

도 그 일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들로 엄연한 차별이며 여자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욕설 등 인격 모독

"조금만 실수도 엄청 욕을 먹었어요. 미친년 이런 것 하나도 못한다고... 주문 받을 때도 잘 못 들으면 니가 개야? 사람 말을 한번에 못 알아들어? 이런 말을 반복했어요"

3개월 동안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면서 김(18살)양이 당한 모욕이다. 하지만 김 양은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고용주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대하기 쉬운 상대로 보고 무시하는데, 청소년들도 나이에서 오는 위압감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의적인 해고

근로기준법 3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일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고용주의 임의대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김OO(음식점 서빙, 18살)양은 고용주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김 양은 "일요일에는 일을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일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나오라고,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나오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안 갔죠. 근데 나중에 (전화기)음성에 녹음돼 있는 거 들으니까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고.. 이따위로 할거면 차라리 그만 두라고 그러면서 심하게 화를 냈어요"라며 억울해했다.

결국 일하는 청소년들은 일하는 내내 온갖 부당 대우와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많은 경우 참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또 다른 사업장을 찾는 수밖에 없어, 열악하고 불평등한 노동환경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있는 셈이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27일(토)

제 21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장애시설 미비로 교육권을 침해당한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지법 민사43단독 박세운 판사는 피고 숭실대학교가 △장애인용 책상의 설치 △강의실 지중 배려 노력 △장애인 도우미 등 프로그램의 도입 △급수대 앞의 턱 제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 박지주 씨에 대한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2백5십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장애인인 원고가 좀더 편리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라며, "원고가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있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장애학생들에게 학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숭실대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장애인용 화장실과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고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준비중인 점을 고려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원고가 바라는 기간 내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만으로는 피고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배려의무의 인정범위에 대해 제한을 가했다.

이에 대해 소송당사자인 박지주 씨는 "지난 5년간의 피해보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학교시설을 스스로 이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이 미비하다"라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 98년 숭실대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한 후,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난해 3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범용]

<논평>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에 부처

기약 없이 연장되는 징벌방 수용, 가혹행위, 치료의 손길에 속이 타는 구금시설의 실태가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 24일 '유엔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올해 말 유엔총회를 거쳐 2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1984년 채택된 유엔고문방지조약이 고문방지를 위한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의 선택의정서는 그 실효적 방법으로서 구금장소에 대한 전 세계적 감시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어느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이든지 공적기관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라면 국제기구가 사전통고 없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으로써 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조건을 개선하고 고문행위에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에게 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택의정서의 채택과정에서 반대와 기권과 찬성표를 끌고루(?) 던지는 일관성 없는 자세를 보인대서 드러나듯 국가주권의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과 그 이행을 위한 조치는 인권이 국가주권보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의에 기초하고 있고, 진정한 주권의 행사는 국제기구의 방문을 꾀할지라도 여기는 회피와 버티기가 아니라,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거리낄 것 없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있다. 실제로 국제기구의 방문조사는 결코 위반사실에 대한 비난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침해나 월권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방문조사에 있어 비밀유지의 원칙과 협력의 원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문방지를 위한 법적·행정적 구조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구조개선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에 조인을 줄 수 있는 국제기구에 개방적으로 협력하는 일은 선택의정서가 있고 없음을 떠나 취해야 할 조치이다.

국내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강화하고, 국제기구가 방문하고, 또 민간단체가 찾아갈 수 있을 때, 그렇게 감시의 눈과 발이 자주 드러날수록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및 처벌이 파리를 틀여지는 사라질 것이다. 정부가 선택의정서에 던진 '찬성'표의 의미를 살리는 후속노력에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

###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저임금과 차별, 과도한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 일하는 청소년 보호규정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인 점과 교육기회의 박탈을 우려하여 근로조건에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보호규정에 따르면 18살 미만인 자는 △일을 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근로기준법 64조)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67조)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야간노동(68조)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갭내 등 위험한 노동에 대해서도 금지(70조)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보호규정은 일하는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하기엔 미흡하다. 결국 그 취지와는 달리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고용주가 자의로 임금을 깎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반드시 문서로 작성·교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도 임금 뿐 아니라 휴식시간, 야간 및 연장근로 수당, 보험 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 시간제 노동에 대한 균등 대우

청소년들은 대부분 숙련기술이 요구

되지 않는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분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이 청소년을 주요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파트타임 청소년으로 채우고 있다. 그러나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거나 쉽게 해고당하는 등 파트타임 청소년에 대한 차별대우는 심각하기만 하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은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제노동기구가 94년 채택한 '시간제 노동에 대한 협약(제175조)'과 '시간제 노동에 대한 권고(제182조)'에는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간의 시간당 기본급을 동일 수준으로 하거나, △고용과 직장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동일 보호와 균등 대우'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 차별적인 특례규정 삭제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은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노동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에 시간급 1/10 감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의 경우 대다수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굳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이라고 제시할 수 없다. 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생계비가 더 낮거나 노동의 가치가 더 낮다는 근거도 없다. 하지만 법에서조차 이들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 조항은 청소년 노동을 값싸게 사용하려는 고용주들의 잇속만

챙겨주고 있는 꼴이다. 또한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청소년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어 저임금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따라서 나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항의 삭제가 요구된다. (김영원)

###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

사회단체와 연대하며 동성애자 운동을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자 '동성애자단체 연합조직'이 발족했다. 부산경남여성인권모임 <안전지대>,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등 4개 동성애자 단체들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국동성애자연합'(아래 한동연)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동연은 95년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98년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에 이어 동성애자 단체들 사이의 세 번째 연합조직으로, 발족선언문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무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운동의 방향 설정에 있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발전의 거울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단체들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참가단체 수를 늘리기보다는, 운영위원회, 사무국, 자원활동단 등 실무집행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한동연 상근간사 김영석 <<친구사이>> 공동대표)씨는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의 인권운동들조차도 우리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동성애자 인권운동도 사회단체들과 연대하면서 함께 운동해나갈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동의하는 사람들이 결합하면서(동성애자 단체들을 대표하는) 한국동성애자연합의 위상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덧붙였다.

한동연은 국제연대 강화, 인권뉴스지 발행,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대위 결합, 엑스존 행정소송 지지와 연대, 호주제 폐지 등 현행 가족법 개정 등의 활동을 한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30일(화)

제 21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혼신과 잠음이 계속되던 어느 날 문득 걸려온 전화에서 경찰의 비상소집 명령이 들린다? 지난 10일 밤 성남에 사는 이미선 씨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자신의 집에 걸려온 전화기에서 "전 직원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서 직원은 경찰서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비상소집 명령이 흘러나온 것. 특히 그때는 전화기에서 혼신과 잠음이 3일간 계속되던 중이었다.

그제서야 이씨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됐다. 감청 장치의 오류로 경찰의 비상소집 명령이 자신의 집 전화로 걸려왔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처음엔 솔직히 전화를 받고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씨는 혹시 지난 6·13 지자체 선거 때 민주노동당 도의원 후보 성남시 제2선거구 사무장을 한 것 때문일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신을 상대로 경찰이 감청을 했다면 그건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이씨는 다음날 아침 전화국을 찾아가 발신지가 어디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당 간부가 아닌 나도 감청을 당하는데 나 말고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감청될 것 아니냐"라며, "또 이렇게 누구나 감청될 거라고 생각하니 발신번호를 알아내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감청피해에 대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감청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조차 현행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했다. 한국통신 측은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신청하기 이전에 (고

객에게) 발신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없다"라고 잘라 말해, 이번 사건이 경우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이용제도과 관계자는 "그런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결국 이미선 씨는 20일경 성남남부 경찰서에 발신지 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발신지를 확인해 주더라도, 이것 자체가 감청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후 대응은 난망해 보인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는 검사 또는 경찰이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청사실을 통보받더라도 이는 이미 감청이 이루어진 이후여서, 감청피해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없다. 또한 경찰이 감청사실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감청대상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위법한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피해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대처할 길이 사실상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범용)

#### <알림>

매주 화요일자 '인권이야기'는 이번 주부터 정귀순(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대표), 진영중(성공회대 영문과 교수), 윤현식(지unan인민대연대 활동가),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활동가) 씨가 맡습니다.

### 서울시장 면담, "장애인 추락참사 책임 인정하라"

#### 서울시 반응, 현 시장은 책임 없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9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나 지난 5월 19일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사망건에 대해 서울시와 관계당국의 책임인정 및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유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 △계단없는 버스(저상버스) 운영 등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개사과를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라며 일간지를 통한 공개사과 요구는 제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음성식 교통관리실장은 "(발산역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며 지금 시장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뻔뻔스런 태도를 보였다.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 정책의 문제"이고 공개사과는 "그 책임의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일간지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면 450만 장애인들이 알 수 있는 다른 공개사과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이 올 때까지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날 밤 9시 30분 현재 계속 서울시청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공은나)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6년 전 이주노동자 인권상담을 시작하면서 플라스틱 상자를 만드는 필리핀노동자의 어두컴컴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 한겨울 전기장판이 깔린 곳을 제외하면 방안에서도 열음이 일던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컨테이너 숙소를 방문했을 때, 나는 20년 전 잔업과 철야에 찌들어 누렇게 뜬 얼굴이 마치 봄날 낙동강 강둑에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꽃 같다고 생각했던 신발공장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그토록 바꾸려고 몸부림쳤던 열악했던 노동현장과 비인간적인 삶들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만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옮겨져 있었다.

처음 상담할 때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당신이 뭔데 나서냐", "불법체류자라고 봐주었더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집으로 보내 버리겠다"며 오히려 길길이 날뛰는 사장들이 이제는 레퍼토리를 바꾸어 "내가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 아느냐, 뺑도 사주고 양말도 사줬는데"라며 자신이 악덕업주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보며 한국사회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1991년 이후 두 명의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수많은 장관들이 교체되었지만, 늘 '사람'보다는 돈과 표를 쫓는 정치권에게 돈이 없어 정치자금도 낼 수 없고 투표권이 없어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가 찬밥 신세임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15일 정부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부족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며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이란 것을 발표해서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 산업연수제도의 유지·확대, ·서비스업 분야에 제외동포 취업허용, ·2003년 3월까지 현재 체류중인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원추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의 원인이자 입국비리의 창구로 활용되어 온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개선 안의 내용과 실시 시기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 오던 상황에서, 갑자기 산업연수제도를 유지 오히려 확대한다는 발표에서 "아, 또 선거구냐"라고 깨닫는다.

이미 고학력·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한국사회에는 현재 40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취업 중이며, 3D업종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서 외국인력의 고용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소수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산업연수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와 노동시장구조를 보다 악화시키게 된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사회 시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는 경제·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정귀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1. 구금시설 인권침해 조사엔 국경 없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반대 불구 국제조사단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켜 (7. 24)
  - 2.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 위해 존재하나?  
농민 3천여명, 농민대회 열어 한-중 마늘협상을 다시 할 것을 요구 (7. 22) / 국방부, 미국의 재판관 이양은 "공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란 입장 밝혀 (7. 22) → '여중생 범대위', 미군 두둔하는 국방부 규탄 (7. 24) / 불평등한소과개정국민행동, 소파협정 중 △재판관 행사 △공무수행 판단 △신병인도 관련 등 개정 촉구 (7. 26)
  - 3. 폭격으로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고위간부의 집을 폭격해 어린이 9명 포함 적어도 15명 사망→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제법 위반한 무모한 살인 행위" (7. 23) / 미 존스홉킨스대, 팔레스타인 5살 미만 어린이 두명 중 한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7. 26)
  - 4. 사납금제 철폐, 이렇게 어려워져야  
인천택시, 파업 65일 만에 사납금과 사납금제 철폐·월급제 시행에 합의 (7. 27)
  - 5. 인간복제 무법지대인가?  
인간 복제 천명만 미 회사 클로네이드가 우리나라에서 복제인간 출산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7. 24)
  - 6. 기탁 : 새 인권고등판무관에 데 벨루 동티모르 유엔 행정관 임명 (7. 22) / 외노협,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 요구 명동성당 농성 (7. 22~) / '지문날인거부자',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7. 23) / 여야 의원 74명, '성매매 방지법' 발의 (7. 25) /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 (7. 26)
- 중요 판결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청소년 성매매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 공개할 수 있게 한 청소년 성보호법 조항 위헌제청 (7. 23) / 부산지법 민사7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50명에 국가보상판결... "삼청교육 보상 청구권 2004년 6월까지 유효" / 서울지법 민사합소9부,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폭행사실 인정해 국가배상판결 / 부산고법 형사2부, <한국사회의 이해> 무죄선고 (7. 24) / 대법원 제1부, 근속수당은 근기법상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 /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총기강도 누명 쓴 전직군인들 구타에 의해 거짓자백 한 점 인정해 무죄선고 (7. 25) / 서울지법 민사 43단독,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학의 손배 책임 인정 (7. 2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7월 31일(수)

제 21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이던 한 회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5일 밤 9시경 김모 씨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퇴근 후 집에서 연행됐다. 김씨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를 면회한 문미정 씨에 따르면, 김씨는 서해교전 당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www.kdlp.org) 실명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때 김씨는 △53년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된 북방한계선에 대해 비판하고 △이번 서해교전에서 한국군이 선제 공격했을 수도 있다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등을 옮겨왔다. 김씨는 또 9·11 테러 당시 여성문화인 '살류주'(www.salluju.or.kr)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김씨는 한국군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한다. 그 밖에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기타자료실(지난 5월말 폐쇄)에 연동시킨 웹진 '백두산'도 문제가 되고 있다. 29일 김씨를 접견한 김정진 변호사는 경찰이 문제삼는 게시물에 대해 김씨는 자신이 올린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접견 당시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사건을 조직사건으로 확대하려는 것 같다는 우려를 했으나, 김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증거가 부족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건강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당당하게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주체사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씨는 "김씨가 조직생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김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체사상을 △북한에 대해서선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남한과 북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등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주장을 소신있게 펼치기 위해 북한 쪽 관련 자료를 옮기고 연동시켰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사상 문제를 들추어낸 식이 됐다. 이에 대해 문씨는 "그 사람이 주체사상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그가 그런 말을 토론하면서 할 수 있는 양심·사상·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라며, "이는 한 사람의 온전한 양심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보통신부장은 "이번 사건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상 토론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위협을 깊이 있게 고민해 구속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비판했다. 문 정보통신부장은 또 "국가 수사기관이 일상적으로 우리 당과 진보 사이트를 사찰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범용]

클릭 인권정보자료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펴낸 곳 : 발전노조 인권실태 인권단체 공동조사단/ 2002/ 92쪽

지난 4월 3일 40여일 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발전노조가 파업을 끝낸 후, 작업장에 복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개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같은 인권침해는 널리 알려진 반면,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권리침해는 제대로 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보고서는 파업이 끝난 후, 사측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지, 노동자의 정체성과 연대성을 파괴하는지 보여준다. 인권단체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에 기초하여, 인권침해 양상을 기술하고, 이것을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분석했다. 보고서는 크게 파업참가 노동자들이 당한 권리침해를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통한 양심의 자유 침해 △자의적인 대량해고로 인한 노동권 침해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생존권 침해 △작업장 감시를 통해 자유로운 노동조합결성권 침해 △노조홈페이지 차단 등 통신상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5월부터 두달에 걸쳐 직접 청영양수, 삼천포화력 등 5개 발전회사의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을 면담하는 등의 조사활동을 거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정부나 사측이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는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 자료실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최은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4)

#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경북 경산시 평산2동 산중턱에 위치한 코발트 폐광. 2001년 3월 11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취재팀을 비롯한 합동 유골발굴팀은 수평갱도의 콘크리트 외벽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뒤, 폐광의 내부로 들어갔다. 그 암흑의 공간 속에서 발견된 것은 50여 년을 진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유골 수십 여 점. 그러나 아직도 3천여 구 이상의 유골이 폐광의 수직갱도 내에 방치돼 있다. 1950년 발생한 '경산코발트광산 학살사건'은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전선이 낙동강까지 내려왔던 1950년 7월 하순, 경산 지역 일대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일제히 군·경에 의해 소집되거나 연행되기 시작했다. 국군특무대(일명 CIC) 혹은 경찰에 의해 지사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호출을 받은 뒤 자진해서 출두한 사람도 있었다. 경위야 어찌됐건 일단 지사로 끌려간 사람들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운 좋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곤...

"팔공산 쪽에서 대포 소리가 막 나던 무렵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마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더니 광산 창고에 갇혀 있던 아버지에게 날라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쯤 도시락을 날라줬는데, (군경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밥을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음력 7월 보름이었습니다"(유족 이정우). 공무원으로 일했던 이정우(59) 씨는 69년경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직책으로 옮기려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신원조회 기록이 '부역 및 행방불명'으로 돼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 총살 후 수직갱도에 매장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학살된 인원은 3천5백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경산 지역 최대의 학살현장이다. 당시 경산 지역의 보도연맹원 약 4-5백명을 비롯해 청도, 대구, 영천 등지의 보도연맹원, 그리고 대구형무소에서 인계된 사상범들이 모두 포함된다. 각지에서 폐광산으로 이송된 사람들은 깊이 100미터가 넘는 수직갱도 입구에 8명씩 세워져 총살된 후 바로 수직갱도 아래로 매장됐다. 2001년 3월 수습된 유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두개골에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하게 불

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 사망자의 연령은 15세에서 60대까지 걸쳐 있으나,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라고 한다.

과연 보도연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것처럼 잔인하게 희생되었을까? 경산학살사건을 꾸준히 추적해온 경산향토신문의 최승호 기자는 "희생자 대부분이 사상과는 무관한 농민들이었고, 좌익활동자는 10%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보도연맹에 가입한 계기도 '좌익에 대한 부역 혐의'는 극소수뿐이고, '비료를 더 준다'거나 '모내기를 도와준다'는 식의 감언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라고 한다. 유족 이정우 씨는 "마을 구장(지금의 이장)이 주민들에게 보도연맹 가입을 적극 권유했고, 주민들의 도장을 다 보관하고 있던 구장이 마음대로 보도연맹에 가입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도연맹원 대량학살은 전쟁 발발 후 계속 전선에서 밀리던 이승만 정권의 위기 의식과 무관치 않다. 즉 전선 후방에 산재해 있던 보도연맹원들이 대거 인민군에 가담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대구형무소의 사상범들을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빨갱이 콤플렉스'의 망령

2000년 3월 경산유족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이 진상규명활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힘에 겨운 실정이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52년째 버려져 있는 유골부터 수습하는 일. 그러나 수역원에 달하는 발굴비용을 감안할 때, 유족들은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 경산시나 경상북도 역시 예산 문제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경산향토신문의 최승호 기자는 "국회 차원의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체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무엇보다도 50년간 내면화된 '빨갱이 콤플렉스'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최승호 기자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보도연맹=좌익'이라는 시각에서 못 벗어나 있다. 지역민들도 희생자에 대한 측은지심은 있지만, '좌익'에 대한 명예회복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유족들이 한사코 '순수한 양민'이었음을 입증하려 애쓰는 것도 그러한 무의식의 발로"라며 "결국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사상적 복권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좌익사상 역시 사상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돼야 한다는 진단인 것.

"우리는 빨갱이 아들이라, 연좌제라, 면서기도 하나 문 하고, 군대 가도 요직은 못 하는가. 그런 식으로 입 닫고 죽을랑가 싶었는데... 인자 마 때가 왔다. 그 때 이때까지 설움 받았는데 우리도 할말은 하자해서 유족들이 뜻을 모아 하는데, 아직까지도 유족들이 겁을 먹어 같이 해보자 캐도 안 나오는가. 진상조사 해 가지고 이제는 정부가 해결 좀 해 주시오. 정부 책임이라."(유족 태윤희(68) 씨) (이창조)

### <보도연맹 사건>

48년 국가보안법의 제정, 49년 5월 군대 내 좌익 총살조치 등 이승만 정권의 좌익탄압이 극에 달하던 49년 6월, 이 정권은 이른바 '좌익 경력자'들을 강제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킨다.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절대지지, 북괴정권 절대반대" 등의 강령을 가진 관제반공단체로서 1년 만에 전국에서 33만여명을 가입시키게 됐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발발 직후 약 2개월 사이, 대전·경산 등지를 비롯해 38선 이남 전역에서 최소 20만명에 달하는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 2002년 8월

### (제2146호 ~ 제2166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2002년 8월 1일(목)

제 21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제5공화국 초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규명위)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조사 착수를 검토 중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31일 “녹화사업 진상규명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할 때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3일 회의에서 조사의 실시 여부부터 조사 내용과 범위, 방법 등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청교육은 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삼청5호 계획’이란 이름 아래 진행됐다. 이때 검거된 사람은 모두 6만 명이 넘었고, 그 중 3만9천7백86명이 25개 군부대에 분산 수용돼 이른바 ‘순화교육’을 받았다. 또한 불법 체포와 구금, 강제노역과 구타, 살인 등 극심한 인권침해로 부대 내 사망자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백97명, 정신장애 등의 피해를 겪는 피해자가 2천6백78명(국방부 공식발표)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대해 88년 국방부에서 피해신고를 접수받았을 뿐,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지금껏 이뤄진 적이 없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조사에 착수한다면,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전 전 대통령에 삼청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지시하고 실행했는지 등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 전 대통령이 과연

조사에 응할 지 여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반약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전 전 대통령이 당시 삼청교육이란 잔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국민에게 공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문사규명위는 현재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한 피해자 중 전정배 씨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정배 씨는 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육군 5사단 36연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81년 6월 20일 갑오생 집단 소요 당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의문사규

명위 관계자는 “앞으로 자료 및 관련자 조사를 해 왜 전 씨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등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청교육대에 대한 전반적 배경조사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시간적 한계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조사가 진척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의 조사 시한은 9월 16일까지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씨는 “진작에 국가가 삼청교육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라며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주어진 시간과 권한상의 한계로 충분한 조사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족함이 있더라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삼청교육의 진상을 규명하는 출발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 서울시청의 버티기, ‘공개사과 못한다’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건 관련 공개사과 요구 농성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는 31일, 서울 시청신문뿐만 아니라 서울시청홈페이지 및 3개 장애인관련 신문에도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건 관련 공개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동권연대는 지난 29일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지하철 장애인 추락사건에 대해 일간지를 통해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시장은 일간지 공개사과는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권연대가 시청측에서 공개사과방식을 제안하라고 요구하며 시청구내식당에서 농성에 돌입하자, 30일 음성직 서울시청 교통관리실장은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와의 통화에서 시청신문을 통한 방식을 제안하며 농성 중단을 조건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음 교통관리실장은 31일 인터뷰에서 “농성을 해산하면 시청신문에 장애인 정책을 밝히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로 하겠다는 거였지 공개사과를 한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아침에 해산을 하면 시장님한테도 말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아침까지 해산을 안 했고 지금 다시 와서 농성하고 있으니까 이젠 그 제안자체가 없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 박 대표는 “이게 상거래 흥정도 아니고 사람이 죽은 문제인데 농성하고 안하고에 따라 공개사과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원인을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서울시가 공개사과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시청구내식당을 나온 이동권연대는 매달 말에 있는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운동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시청을 다시 방문하려 했으나 덕수궁 앞에서 전경 2백여명에 둘러싸여 지지당했다. [이공은나]

#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흐름과 쟁점

### 1. 한총련...이적의 올라가미, 합법화 투쟁으로 맞선다

검찰이 10기 한총련에 대해 탄압의 고비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광주지검이 지난달 24일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을 기소하며,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6) 또 검찰은 전국지청과 경찰을 통해 10기 한총련 대의원 1백5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7.8) 이에 서울지역 한총련 대의원 30여명은 소환장을 들고 경찰청에 집단 출두투쟁을 벌였으나,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해 출두를 가로막았다. (7.19)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천인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선언에 동참했고(7.19), 경기지역 각계인사 1천2백명도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7.30) 또한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1254, 한총련을 자유케하라'가 열리기도 했다. (7.20) 1254는 지금까지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사법처리된 학생수다.

### 2. 국보법 개폐 권고, 전두환 소환계획...의문사 규명활동에 힘을!

의문사위는 97년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사망한 김준배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7.9) 당시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이에 유가족, 한총련 등은 당시 담당검사였던 정윤기 검사 규탄집회를 열었다. (7.15~16) 또 의문사위는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담회를 실시했다. (7.17~22) 전두환 전 대통령 소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7.11) 이는 기무사 등 의문사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한 의문사위의 '특단의 대책'이었다. 한편, 의문사위는 정윤기 검사가 김준배 씨 사건의 프락치였던 전모 씨를 직접 지휘하고 전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 후 일부러 구속한 사실을 폭로했다. (7.16) 이는 정 검사가 '김준배 씨의 사망은 단순추락사가 분명하다'라며 의문사위의 결정을 반박한데 따른 것이다. (7.9) 9월 16일 조사활동이 끝나는 의문사위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야 할 때다.

### 3. 거부할 수 없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이 잇따르며, 병역거부의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호근 씨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했다. (7.9) 유씨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보다 "총을 들고 다른 이를 죽이는 연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라고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부산 동아대 재학생인 임치윤 씨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7.30) 임씨의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나 사회운동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어서 병역거부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앞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7.4)

### 4.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시민들 분노 계속된다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2명을 기소했고(7.3)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체 진상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미군 측은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7.3) 사망 여중생 동네주민 2백여 명은 미군에 재판관할권 이양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을 요구했다. (7.4) 사회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주한미군 쪽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7.10) '여중생사망 대책위'는 7월 한달 내내 '미군은 재판권을 포기하라'며 계속해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벌였고, 서울 시청 부근에서 시민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망 여중생 49제가 치러졌다. (7.31)

## 논평

-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7.6)
-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7.13)
-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7.20)
-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에 부처 (7.27)

## 인권이야기

-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7.2/육이은)
- 그들은 알고 있을까? (7.9/이우갑)
-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7.16/권두섭)
-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7.30/정귀순)

## 인권정보자료

- 「해위투자기업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백서」 (7.10)
- 「벼랑 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 - 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 (7.17)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7.24)
- 「발전노조 안전실태 조사보고서」 (7.31)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록

- (1) 단일정소 최대학살지, '대전 산내 골령굴' (7.10)
- (2)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년 미군의 '역산역 폭격' (7.17)
-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7.24)
- (4)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7.31)

## 기획-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7.25)
- ② 부당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7.26)
- ③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7.27)

## 중요 판결 및 결정

- 서울지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관련 국가에 손해배상 판결 (7.4) / 수원지법 성남지원,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유통 서비스와 서버사용 중단" 가처분 결정 (7.11) /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알몸 수색'은 위헌 결정 (7.18) / <한국사회의 이해> 향소심 무죄 판결 (7.24) /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 판결 (7.26)

## 헌법소원 및 위헌제정

-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 헌법소원 (7.19) / 서울행정법원, 성매매자 신상공개 제도 위헌제정 (7.19) / 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7.2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2일(금)

제 21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의문사위, 국정원 첫 실지조사 방침

### 국정원의 비협조에 실망...국정원, "우린 적극 협조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국가정보원(원장 신건, 아래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드러냈다. 1일 아침 11시 의문사위는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아침 10시 국정원 자료보존실을 실지조사해, 관련자료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에 대한 의문사위의 첫 실지조사다.

지금까지 의문사위가 국정원에 요청한 자료 중 이번 실지조사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10여 건이 된다. 여기에는 장준하 사건(진정 14호) 관련 '3국 존안자료', 이내창 사건(진정 20호) 관련 '임수경 방북 내사자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국정원은 자료가 없거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문사위의 자료요청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진술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관련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실지조사를 통해 (관련자료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자료가 관련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자료목록을 직접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문사위 김준근 상임위원은 지난 4월 29일 한상범 위원장과 함께 신건 국정원장을 면담한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신 국정원장은 "(의문사는)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협조해야죠"라며, 그 자리에서 수사국장에 전화를 걸어 '의문사위의 조사를 위해 별도의 방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리하여 5월 중으로 장준하 사건 등 5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약속했으나, 실지조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6월 하순경에는 의문사위 조남관 조사1과장이 국정원의 협조 아래 장준하 사건 인사기록 카드 등을 열람하다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의 목록검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추후 다시 방문해 관련 자료의 목록검색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됐다. 김 상임위원은 "국정원장 말을 신뢰하다 보니 시간만 지났다"라며, 국정원의 비협조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공보관실 김영진 직원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국정원은 (의문사위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왔다"라고 답변했다.

또 의문사위의 실지조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통보받은 것이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라며, "하지만 통보가 오면 적극 검토한다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의문사위의 실지조사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80년대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집담회 결과 및 추후 조사계획이 보고됐다. 지난달 6회에 걸쳐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집담회에 따르면, 녹화사업은 '특별정훈교육'이 아니라 강압적인 학생운동 탄압공작임이 드러났다. 82년 1월 5일 강제징집된 정모 씨는 승용차로 눈을 가린 상태에서 과천분실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혀대를 풀고 무수한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전반적인 체계를 규명하기 위해 전두환 씨 뿐만 아니라 노태우 씨까지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전씨와 노씨는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범용)

## 만화사랑방

이동수



#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노동자 감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동자 감시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늘고 있는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사측의 노동자 감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조희주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을 이유로 정당한 항변 기회도 없이 징계당하고 해고당하고 있다"라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위생노조 박동선 위원장은 회사측이 임금급속 중 일방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노조사무실의 출입상황을 감시해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이 줄어들었고, 파업시 집회현장을 촬영해 노조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측이 관리직 직원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노조원의 작업현장을 권고대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광명성에병원의 경우, 임금급속을 하고 있던 지난 6월 병동, 병원로비, 간호실과 강당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들을 24시간 감시했다. 이에 간호사 등 병원직원들은 불쾌감, 당혹스러움, 구속당하고 있다는 느낌 등을 호소하며 감시카메라의 철거를 요청했다.

진주늘빛정신병원의 경우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난동'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녹화하고 있다. 노조측이 수차례에 걸쳐 감시카메라 철거와 각도조절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무시했다.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감시카메라 등의 설치를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감시의 영역, 목적, 시간, 책임자 등을 밝히고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연대모임에 상담 의뢰를 한 사업장들의 경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노조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촬영함으로써 노조활동의 위축, 노동자 및 환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생활침해를 불러왔다.

연대모임은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자 감시를 규제할 마땅한 법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노동자 감시 근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또한 연대모임은 노동자감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자감시 대응을 위한 교재를 제작·배포하며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대모임은 '직장의 감시카메라에 대한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감시 카메라에 대한 조사, 철거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이공은나)

## <자료> 현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실는다.

· 사건 2000헌마327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  
· 청구인 박모 씨 등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 / 청구 대리인 : 변호사 권두섭  
· 피청구인 : 성남 남부경찰서장

· 주문 : 피청구인이 2000. 3. 20. 13:30 경 청구인들을 성남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거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해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 · 이유 (중략)

헌법 제10조는 (중략)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2조는 (중략)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 행정법 제68조 등에 근거해 경찰서 유치장 내의 수용자에 대한 정밀 신체검사의 실시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중략)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음 유치장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를 통해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해 그러한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며 (중략 : 청구인들이 변호인 접견 후) 유치장에 재수용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할 가능성도 극히 낮았다.

특히 청구인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방법의 이 사건 신체수색은 그 자체로서 청구인들의 명예와 자존심 등을 심하게 손상하는 점 등을 함께 보태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해 실시한 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조치로서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후략)

7. 18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주선희  
주심재판관 송인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3일(토)

제 21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정보통신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음란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 △기타 법률이 금지하는 내용 등 10개 항목을 '불법통신 항목'으로 열거했다. (제53조 1항)

그리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내용의 불법 여부를 판단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 존속시켰다. 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만 추가했을 뿐이다. (제53조 2항)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킹센터의 장영경 씨는 "불법행위에 대해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가 여전히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기중 변호사 역시 "통신 내용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위헌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규제가 이루어지고 △형식

상시적인, 자체 검열을 받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이용정지·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그 의견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 역시 정보통신부 소관이어서 사실상 의견제출권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53조 3항)

이밖에 정보통신부에서 구체화했다 고 하는 '불법통신'의 (→2면에서 계속)

##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얼마전 회사원 김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터넷 게시판에 "서해교전에서 남측이 선제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왜 상정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북한 관련 자료를 연결하거나 주체사상 연구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그의 활동이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 씨가 스스로 '나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주체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도 당당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김 씨의 '소신'을 향해 수사당국이 칼날을 갈고 있고, 김 씨는 심판대에 놓여질 것이다. 공안당국에 김 씨를 몰아다 준 국가보안법은 만족스런 사냥에 미소짓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 뜨거웠을 당시,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은 오남용이 문제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의 사건은 그 주장이 허구였음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국보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법이다. 본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을 처벌하려 들기에 도무지 봐줄 수가 없는 법인 것이다.

우리는 김 씨의 사상에 대해 지지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또는 목을 꺾거나 비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에게 재갈을 물리고 잡아 가두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김 씨의 생각에 관심조차 없고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탄압 받는다면 그와 한편이 돼 줄 의무가 있다.

주체사상을 지향하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향하던, 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이 위협받지 않고 표현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사회가 아니겠는가. 다양한 양심과 표현이 존중받는 사회여야만 그 구성원들은 자기검열의 악습에 물들지 않고 꿈꿀 수 있는 자유인일 수 있다.

구속되기 전 김 씨는 한 게시 글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편협한 접근을 버리고 이 사회에서 좀 더 공개적인 담론으로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공개적인' 담론의 요구에 '철창'으로 답하는 철없는 시대는 가야 한다.

#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2일, 이마리오(지문날인반대연대 회원) 씨는 열 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및 폐기를 거부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정법원에 개인정보 정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날인한 열 손가락의 지문 원지는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에 보관되고 전산정보로 저장, 활용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단지 주민등록 발급을 위해 날인한 지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며 17세 이상의 성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정보수집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열 손가락 지문원지 반환운동을 벌여 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경찰청장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및 폐기를 요청하는 '개인정보 정정청구'를 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열 손가락 지문 정보 정정 거부'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이를 각하 했다.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정정'이 '잘못된 개인정보를 바로잡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정보의 폐기·반환·삭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마리오 씨는 소장에서 "지문 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한 것으로 이런 민감한 신체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해 수집하고 임의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 목적에 비춰볼 때 경찰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나치게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씨는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수정이라면 이는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박탈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이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제한은 법률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 온 지문날인 반대

연대의 열 손가락 지문원지 반환·폐기 청구는 국가기관의 개인 정보보유에 정보의 주체인 국민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제 법정이 응답할 차례다. [고근예]

(1면에서 이어짐) 범위도 여전히 그 악용이 우려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이미 불온통신 개념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동성애, 통일문제 등이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해, 이같은 우려를 더욱 뒷받침했다. 이에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는 1일 성명을 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예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중단하고, 제53조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6일까지다. [이주영]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제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와 다국적제약회사의 압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압에 의해 왜곡된 의약품정책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2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행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11시 30분 여의도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아래 노바티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외국압력의 실체와 그로 인한 의약품정책의 결과를 명백히 밝히고 외압으로 이루어진 신약 약가 산정 기준 제도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9년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선진7개국의 평균 약값을 신약의 약가산정 기준으로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한국에서 파는 약값을 무조건 국민소득이 3-4배나 차이나는 나라들의 약값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은 의약품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국민소득이 낮은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약을 구입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대위는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가를 근거로 삼으며 대한민국정부의 보험고시약값을 7개월 동안 거부해온 노바티스사를 규탄하고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를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이 남용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글리벡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사는 선진 7개국을 기준으로 1캡슐당 2만4050원을 약가로 제시하며 정부측이 제시한 1만7862원을 거부하고 있다. 환자들이 1년이 넘게 글리벡 약가 인하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최근 선진 7개국에서의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약가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3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제출한 글리벡의 강제실시권 청구와 관련, 특허청은 지난 7월 31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고 2차, 3차 회의를 계획 중이다. 이에 공대위는 31일 특허청 앞에서 글리벡강제실시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이공은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6일(화)

제 21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사회단체들이 사용자 측의 대화 거부로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 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경희의료원은 5일과 6일 75일째. <본지 6월 13일자 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동당, 민주화위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77개 사회단체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의 가톨릭 중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탄압 중단 ▲사용자측의 폭력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병원 사용자와 정부에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파업 중인 병원에서는 사용자 측에 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번 파업과 관련, 출두요구서 발부 및 체포영장 발부자 총 180명, 손해배상청구액 19억 6천만원, 가압류액 총 50억원, 징계해고자 34명, 기타 징계자 122명, 징계위원회 회부자 293명 등 사측이 가하는 압박의 정도는 노조 파괴 공작을 방불케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경희의료원에서는 사용자 측이 총장을 만나겠다고 본관 안으로 들어가려는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1m가 넘는 표지판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조합원 중 12명 가량이 다치는 일도 발생했다. 그 중 한 명인 경희의료원 지부 강명숙 씨는 5일 현재까지도 양쪽 팔이 깨명게 멎어 있었다. 또한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는 사측이 집단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는 징황증거가 발견되기도 했다. 7월 중순 경 20명, 13명 등 잇따라 노조 탈퇴자가 등기우

편으로 노조에 배달됐는데, 우체국에서 찍은 등기번호가 연달아 있으며 모두 요금후납 방식이다 탈퇴 사유도 유사해 이들의 노조 탈퇴가 조직적으로 처리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 당국이 병원 사용자들의 폭력행위나 노조파괴 공작, 부당노동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일부 병원 사용자들은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 간부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파업을 파

괴하는 수단으로 직권중재조항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불성실교섭과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철도·시내버스·수도·전기·가스·정유·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때 파업을 벌이면 곧 '불법'으로 규정된다. 기자회견문에 연명한 77개 단체들은 이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10일 병원 장기파업 사태 해결과 직권 중재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한편 정부 책임자 면담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태해결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 “살아서 일하고 싶다”

### 철도노동자 한대권 씨, 열차에 치어 사망

또 한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작업 중 사망한 철도 노동자는 모두 39명에 이른다.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9시50분 경 서정리역에서 발생했다. 서정리역(경기도 평택인근) 기점에 설치된 신호중계기 램프를 보수하고 복귀하던 한대권(수원 신호제어분소 서정리 주재 전기원)씨가 상행 무궁화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것. 철도노조는 5일 사고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고지점이 곡선인데다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기관사와 작업자 모두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취약 지점이고 본래 2인이 근무해야하나 사고 당일 같은 당부 소속 노동자가 기술결전대회 준비를 위해 현장에 없었던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상사고와 같은 맥락에 있다"며 그 원인으로 ▲무리한 현장인원 감축 ▲이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안전시설 미비 ▲철도청 책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다음주 내로 철도청장, 전기본부장, 서울지역 사무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34명의 동료가 작업 중 사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5번째 직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현장 분위기는 불안감에 젖어 있다. 동료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목숨을 담보로 한 작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은 또 누구차례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성근 노조 교섭실장은 "계속된 사상사고로 인해 이제는 누가 죽었다는 소리에조차 노동자들이 둔감해지고 있는 지경"이라며 노동현장의 참혹함을 토로했다. [유혜정]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지난 7월 9일 성북구 안암동 재개발 지역에 용역철거반을 사칭하는 3백명의 건장한 어깨들이 등장했다. 쇠파이프와 몽둥이는 물론이러니와 낫과 화염병까지 들고 나타난 이들에게 불과 10여명 안팎의 지역주민은 무참한 폭력에 피를 흘려야 했다. 둘레 머리를 찍히는가 하면 낮에 발등을 찍히고 몸에 화염병을 직접 맞아 큰 화상을 입는 등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이들을 실어 나른 것은 경찰보고차와 호송버스였다. 또한 이 폭력배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 경찰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해왔으며, 폭력배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상당한 주민들을 유치장으로 압송했다.

7월 13일 가리봉동의 천지태광 공장에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용역강패들이 들이닥쳤다. 놀랍게도 천지태광에 진입한 용역강패들 중의 일부는 7월 9일 안암동에 들이닥쳤던 철거용역강패들이었다. 이들은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집단 구타하고 공장 밖으로 쫓아내는 등 폭행을 자행하였다. 그러던 중 7월 15일에는 전경들이 들이닥쳤는데 엉뚱하게도 용역강패들과 합세하여 농성중이던 노조원들과 대치하는 한편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하였다.

7월 18일 새벽 대전 용두동 재개발 지역은 안암동 사태의 완벽한 재탕이었다. 해도 뜨기 전부터 진입을 시도한 철거 용역들은 거의 광분한 상태에서 주민들을 폭행하였다. 노인들을 무릎 꿇리고 견어차는가 하면 침탈을 막기 위해 들어섰던 학생들을 집단 구타하고 보기에도 흉측한 무기들을 휘둘러댔다. 이 용역강패들이 사람이 아직 살고 있는 집마저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고 해머로 두들겨 부수는 와중에 2개 중대나 되는 경찰들은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기자들의 취재까지도 방해하는 작태를 보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의 사례들에서 경찰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강패들의 행위가 주민·노동자들에게 신체의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연약한 경찰들이 건장한 폭력배들에게 폭행이라도 당할까봐 무서워서 피한 것일까?

2002년 7월 한달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힘없고 가난해 어디 한군데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이 땅의 민중들이 자본에게 매수된 강패들에게 속절없이 얻어맞아야 했다. 강패들이야 원래 속성이 그렇기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해야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강패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어김없이 수행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권도 없는 모양이다.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1. **국정원의 어두운 창고문 열어제끼라!**  
 의문사진상규명위, 국정원 첫 실지 조사 방침 밝혀 (8.2) / 일본 법의학자, 지난 91년 안기부에 의해 전노협 탈퇴 종용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타살가능성 제기 (8.1)

2. **정보통신부 왈, '헌법이 대수냐?'**  
 정통부,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 입법예고...정통부 장관, 통신 내용의 불법여부 판단 권한 여전 (7.27) => '인터넷국가 검열반대공동대위', 현재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중단과 제53조 폐지를 요구 (8.1)

3. **회사가 당신을 엿보고 있어요**  
 '노동자감시 근절 연대모임', 감시카메라를 통한 사측의 노동자 감시 폭로·대응지침 발표 (8.1)

4. **'재판권 이양' 요구 국민의 함성 메아리쳐**  
 궤도차량 운전병 등 미군 병사 2명, 검찰에 출두했으나 사실상 진술 거부 (7.29) / 신효순·심미순 양의 '49재 추모제', 전국 곳곳에서 열려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과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요구 (7.31)

5. **감옥에 갇힌 '사상의 자유'**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이고 주체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회사원 김강필 씨,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 (7.25) => 구속영장 발부,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 중 (7.27)

6. **서울시는 죽은 사람 놓고 흥정 중**  
 장애인이동권연대,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망에 대해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7.29) => 시정 교통관리실장, 시정신문 통해 하겠다는 농성중단 요구 (7.30) => 이동권연대, 농성 계속=> 교통관리실장, 농성 이유 사과 없던 일로 (7.31)

7. **기타 : 국가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넘긴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 장관에게 권고 (7.30) => 경찰, 국가인권위 결정에 반발 (7.31) / 철도노동자 한대권 씨,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직무 중 사망 (8.1)**

◎ **중요 판결 및 통계**  
 대법원 2부, 구제금융 사태 시 경영 위기를 이유로 회사가 사내 부부 중 한 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 판결 (7.30) / 부산지법 민사6부, 부산시교육청에 학내 집단 괴롭힘 때문에 숨진 학생의 부모에게 배상판결 (8.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7일(수)

제 21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의정부지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미군 봐주기' 식이란 비판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6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희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청은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 뿐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지휘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의정부 지청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도 같은 날 의견서를 내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을 비롯해 작전수립실행·사고차량 대열 인솔·통신장비 정비·작전수립 지휘 각각의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은 "이번 사고의 주 원인은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장비 불량으로 인한 통신장애 때문"이며 "부수적으로 관제병이 여중생들을 뒤늦게 발견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유족 등이 고소한 지휘관 등 나머지 5명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이번 사고의 시작은 도로 폭보다 30cm 가량이나 폭이 넓은 사고차량이 무단으로 사고 지점을 운행했다는 점에 있다"라며 "그러나 검찰은 사고차량이 어떻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고 지점을 운행하게 된 것인지, 누가 이렇게 위험한 훈

련작전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인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사고 차량과 같이 위험한 미군 차량이 계속 일반 도로를 운행하고 위험한 작전을 감행할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려했다. 범대위는 "사건의 주된 원인을 장비 불량으로 인한 통신장애로 내세우는 것은 조작된 구실에 불과하다"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통신장비정비병과 중대장·대대장 등 지휘책임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변은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10~15m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미군의 발표와도 모순되고, 30m전방에서는 피해자들을 보기 곤란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현장 상황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9일 미군 당국은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은 사고 지점 약 30m 전방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차량의 시야 제한 범위 △차량속도 △사고차량 대열 인솔자의 책임 등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미진한 점으로 드러났다. 한편, 범대위는 7일 아침 10시엔 형사재판관할권 포기과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노상 농성에 돌입하며 저녁 6시엔 서울 종로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노동자 의문사' 진실 철저히 밝혀져야**  
 민주노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 비난

6일 아침 11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등 노동관련 의문사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박창수 씨가 투신자살했다는 당시 정부 발표와 달리 '타살됐다'는 법의학 감정이 최근 나와 의문의 실마리가 잡혔지만,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정원이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조사기간 종료시한(9월 16일)을 코앞에 두고 있어 자칫 죽음에 얽힌 진실은 영원히 묻힐 위험에 처하게 됐다"라며 안타까움을 밝혔다. 91년 박 씨는 서울구치소 내 운동장에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안양병원에서 치료 중 병원 뒤편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안기부는 한진중공업노조를 전노협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박 씨를 상대로 치밀한 공작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민주노총은 "대우중공업 노동자 정경식 씨 사건 역시 자살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확보됐으나 국가기관의 비협조로 사인 규명 및 국군기무사의 개입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안가스 신희순, 후지카 대원전기 오범근, 광무택시 문용섭, 수영기계 박태순, 광주대광고통 임태남, 인천협신사 이재호 사건 등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들 사건이 결정되서는 안된다"며 "위원회는 어려움을 국민과 정치권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를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국정원, 검찰, 국군기무사, 경찰청 등 피진정기관들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0시 국정원 앞 항의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5)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

1951년 1월 4일 남한·유엔군은 북한·중공군에 밀려 서울에서 퇴각했다. 이후 남한·유엔군이 3월 14일 서울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서울을 둘러싼 남한·유엔군과 북한·중공군 간의 쟁탈전은 치열했다. 때를 같이 해 한반도 남쪽 곳곳의 야산에는 빨치산 활동이 계속되며 작은 전쟁이 이어졌다. 전남 나주 봉황면 철천리의 덕룡산도 그 중 한 곳. 밤에는 빨치산들이 마을을 통제하고 낮에는 군경이 지배하는 일이 반복되던 어느날, 주민 80여명이 '공비'로 몰려 경찰에 의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는 시끄러웠죠. 전쟁통이라... 새벽에 (경찰들이) 호당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합하라고 해서,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을 저쪽 논에 집결시켰죠. 이중 노약자들은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기 '동박굴재'로 데려가 두 패로 갈라서 두차례에 걸쳐 발포했어요.”

철천리 입구에서 봉황 유족회 양성일 회장은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당시를 증언했다. 때는 51년 2월 26일, 그날 경찰에 학살된 사람은 70~80명이었다. 양 회장의 아버지도 이때 희생됐다.

“무서워서 (근처에) 가질 못했어요. 사흘만에 집안 형님 두 분이 (학살터로) 아침 일찍 갔는데, 피로 난장판이 돼 버려서 (아버지 시신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걸려 석양에서야 옷을 보고 찾았죠. 그래서 야밤을 타 지게로 지고 마을로 왔어요.” 양 회장은 당시 6살이었지만, 머리 한 칸에 총구멍이 뚫린 채 죽어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만큼은 또렷이 기억난다고 했다.

“당시 경찰들은 이들을 왜 죽였을까?” 문득 든 궁금증에 대해 양 회장은 “공비 색출 의미에서 그런 거죠”라고 짧막하게 답했다. 그리고 “당시 안학봉이라는 빨치산 대장이 우리 동네 출신이었거든...”이라고 덧붙이곤,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죄의식에 대한 자기검열을 하고 있었다.

철천리는 행정구역상 3개의 구로 되어 있는데, 안학봉 씨는 철천3구 출신이다. 뒤늦게 확인된 사실이지만 철천3구는 당시 좌익활동이 꽤 활발했다고

한다. 철천1구와 2구에 살던 주민들 중 당시 학살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없었다. 결국 경찰들은 좌익 활동이 활발했던 철천3구를 표적으로 삼아 집단학살을 자행한 셈이었다.

하지만 학살된 영혼들은, 지난해 8월 봉황 유족회가 결성되기까지, 50년 동안 역사의 뒷안길에서 소리 없이 느껴야 했다. 봉황 유족회는 결성 직후 동박굴재 학살현장의 생존자인 김영태 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검증·기록하고, 같은 해 12월 동박굴재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어 올 3월에는 유족들과 나주시민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봉황 양민학살 희생자 위령비'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애초 봉황 유족회는 동박굴재 학살 희생자로만 구성하려다, 인근 보도연맹 희생자와 빨치산에 의한 희생자를 모두 포함시켰다. 좌익 희생자와 우익 희생자들이 하나의 유족회를 결성한 것은 '빨갱이 콤플렉스'가 지배하던 시절을 살아온 유족들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양 회장은 “과거에는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했지만, 이 기회에 화합하는 의미로 같이 하게 됐지요”라며, “어차피 전쟁통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 아니겠어요?”라고 함께 하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령비에는 철천리 희생자 뿐만 아니라 보도연맹원 희생자, 빨치산에 의한 희생자 명단까지 새겨져 있었다.

나주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은 경찰 뿐만 아니라 군인에 의해서도 자행됐

다. 51년 1월 20일 나주 세지면 동창교에서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이 있었다. 당시 5중대는 장성 고성산 갈재 작전 후 이곳에 들러 동창 마을과 섬말 주민들을 소집했다. 세지면에 빨치산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5중대는 주민들 중 군인가족과 경찰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90여 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했다. 그 와중에 주위에서 농사준비를 하던 농민 40여명에게도 무단발포를 했다고 한다.

한편, 동창교 학살 직후에는 군경 합동으로 나주 다도면 소개작전이 벌어졌다. 군경은 빨치산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니는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쏘아 죽이고 마을을 불질렀다. 이렇게 해서 죽은 수가 28명. 이 또한 공비 토벌이 명분이었다. 그 외 소규모로 죽임을 당한 예들이나 보도연맹 사건 또는 빨치산에 의한 학살사건도 나주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완욱 사무국장은 “사건에 대한 진실확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사적 진실의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그 짧은 시기에 왜 집단적 대학살이 일어났는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또 “학살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학살행위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진정한 명예회복은 좌익이건 우익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철천3구의 좌익활동에 대해 증언을 멈췄던 양 회장의 모습에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당시는 시끄러웠죠. 전쟁통이라...” 하지만 학살은 전쟁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8일(목) 제 21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국정원, 의문사위 실시조사 거부 “국정원 환골탈태 기회 스스로 포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장 한상범)는 7일 아침 10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첫 실시조사에 나섰으나, 이날 역시 국정원의 비협조에 부딪혔다. 이날 실시조사에는 김준곤 상임위원, 박은정·이윤성·백승현 위원, 황인성 사무국장과 조남관 조사1과장 등 모두 10명의 위원과 조사관이 참가했다.

김준곤 상임위원은 “국정원 자료실에 들어가서 관련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하자 그쪽에선 “없으니까 안 보여준다”고 했다. 우리는 실제로 없는 걸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끝내 실시조사를 거부했다”라고 이날 상황을 전했다. 국가정보원 측에서는 이날 수사국장, 단장, 과장, 팀장, 법률자문검사가 나와 ‘국가정보원은 있는 자료는 다 협조했고, 자료보존실 확인은 정보기관의 성격상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껏 국정원은 자료가 없거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준하 사건 관련 ‘3국 존안자료’, 이내창 사건 관련 ‘임수경 방북 내사자료’ 등 의문사위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당시 기관의 성격과 활동,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관계자의 진술 등을 봤을 때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관련성이 없거나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이번 실시조사에 나서게 됐다.

김 상임위원은 “국정원이 중정이나 안기부와 같은 과거 기관의 잘못에 대해 분명히 진실을 밝힐 때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관으로 바뀌었음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며 “그러나 (오늘 사태로) 국정원이 과거 기관과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은 환골탈태해서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사건지휘자 입장에서 국정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고, 과태료 부과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미군, 재판권 이양 거부 통보 “한국민의 최소 요구 무시”

7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여중생 사망 사고와 관련 재판관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공무수행 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며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할권이 양의 전례를 만들기에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곧바로 ‘미2사단 케도차량 사고 관련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여 미군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희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는 10시부터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촉구 농성을 벌였다. 또한 저녁 6시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미군이 어디에서나 치외법권을 누리려는 오만한 작태를 보였으며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의 사죄를 받고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전화 766-9101) / 2002년 / 77쪽 1년 전 오이도 역에서 6개월도 되지 않은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장애인 이동권 확보운동의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지하철선로 점거투쟁, 정부 종합청사 1인 시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시청역 천막투쟁 등을 담고 있다. 자료집에서 연대회의는 1987년 제정되어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편의증진법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수도권 지하철 366개 역사 중 21%인 78곳에 불과하고, 휠체어 리프트조차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168곳이나 된다. 자료집은 연대회의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우리 사회에서의 실현 경로도 제시하고 있다. [최은아]

특별기고 — 오태양(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지난 7월 30일 임치윤씨가 병역거부 선언을 하던 날, 부산병무청에 함께 다녀온 뒤 우리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서 가까운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막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수평선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문득 '기분이 어때요?' 하고 물었더니 '후련해요!'라고 치윤 씨는 짧막하게 대답합니다. 나오는 달리 임영연이가 가능했던 그였지만, 더 이상 그리고 싶지 않다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1년 전 병역거부를 결심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신변과 미래 때문에 짐짓 괴로웠었노라는 고백과 함께 말이지요. 피의자의 신분으로 어느새 8개월이 지나 이제는 익숙해진 내 처지에선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그가 한편으론 열려스럼기도 한지라 이것저것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밀도 끝도 없이 펼쳐진 눈앞의 망망대해처럼 몇 년이 걸려 어떻게 끝날지 모를 막연한 여정에 스스로 뜻을 올린 길벗에게 슬그머니 어깨 걸고 웃어 보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저 너머를 함께 바라보면서 말이지요.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여론화 된 지 1년 반, 그동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괄목할 만한 것은 사법계의 변화인데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량이 1년 6개월까지 경감되고, 병역법의 위헌소지에 대한 심의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는 것이겠지요.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주최의 토론회가 수차례 진행되었고, 지난 7월 4일에는 몇몇 국회의원과 사회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대체복무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 논란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현실적 가능성과 대안 모색'으로 한 걸음 나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더욱 적극적이어서 지난 4월 58차 유엔인권위에서는 병역거부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특별결의문

이 채택된 바 있고, 오는 2003년 봄에는 한국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국제회의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심장한 것은 지금까지 특정 종교인들의 특별한 행위로 여겨지던 병역거부의 행렬이 유호근 씨나 임치윤 씨와 같은 비종교인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병역거부의 보편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살아가며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권리, 그것은 종교와 비종교, 정치와 비정치, 시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본원적 속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돌아해보건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병역거부 문제가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사회여론화 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지난 시절 병역거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가 첩첩이 쌓여있었기 때문이란 생각에 한편으론 가슴 아픕니다. 어쩌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집단안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권리 정도야 불가피하게 희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명분도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희생당한 이들이 통계로 파악되는 것만으로 1만여 명이었던 데 당혹감이 있습니다. 인권의 본질적 의미가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권리의 옹호'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여전히 16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행위의 대가로 감옥에 갇혀 있는 한국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란 박물관 교서의 빛바랜 사어(死語)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의 권리의 옹호'가 우리 모두의 자유와 해방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지난 시절 인권신장을 향한 인류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빗방울 하나, 눈송이 하나, 흙 한줌의 무게란 보잘것없지만, 결국 가지를 꺾고 강 물줄기를 만들고 태산을 쌓는 것은 그 '작은 하나의 쌓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의 목소리가 언젠가는 우

리 사회의 뿌리깊은 국가주의, 획일주의, 군사주의의 장벽을 허물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날 선 비판과 매도 앞에 직면할 때면 순간순간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사회고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지면 병역거부자들의 행위는 '이기주의의 발로'라 하여 싸잡아 매도당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군부독재의 철권통치에 의해 반세기 넘게 주입되어온 반공·안보이데올로기의 환영에 우리가 휩싸여있는 탓도 크겠으나, 비자발적인 징병제도의 억압성과 반인권적인 열악한 군복무 경험에 의한 피해의식과 보상심리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병역거부자들뿐만 아니라 징병의 당사자인 대다수 한국사회 남성들과 만연한 군사문화 아래의 여성들 역시 크고 작은 피해자임을 알기에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싸움을 할 생각은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의 연대의식을 공유하며 징병제의 모순을 타파해 가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며, 군사주의의 무엇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인지 남성과 여성의 어깨걸이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럴진대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비난한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듯 합니다. 하물며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마음에는 폭력의 독을 가득 품은 채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헤치는 일에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병역거부 이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참회가 더욱 절실했던 것은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200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예정된 항해입니다. 물론 풍량이 거세어 두려움은 있었으나 더욱 많은 젊은이들이 반세기의 낡은 배를 스스로 버리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으로 험난한 바다로 뛰어들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배가 돛을 올리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9일(금)  
제 21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의문사위, 명동성 검사에 동행명령

### '문용섭 사건' 축소·은폐 여부 조사 목적

의문사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장 한상범)는 8일 문용섭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명동성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가 사건 담당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김준배 사건 담당이었던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문용섭 사건은 지난 88년 6월 9일 광무택시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 항의하는 문 씨가 구사대인 신모 씨에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다. 당시 단순 폭행치사로 구속돼 3년을 복역한 신 씨는 지난해 11월 위원회의 조사에서 회사측이 교사해 문 씨를 폭행했다고 양심선언했다. 또 신 씨는 이미 재판 당시 이 사실을 명 검사에게 말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했다.

이에 위원회는 "명 검사가 회사측 교사사실을 알고도 단순폭행치사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대해 조사가 필요하나, 명 검사가 지난 6월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명 검사는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자료를 통해 "문용섭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현직 검사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은 "어떤 사건을 조사할지는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명 검사가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위원장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문용섭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설치돼 있던 관

계기관 대책회의가 개별 사업장들이 구사대를 운용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등이 더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주영)

## 인권체험하며 생각도 쏙쏙

### 장대비 속, 어린이인권캠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경기도 양평의 한 수련원에서 어린이인권캠프가 열렸다.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32명과 선생님 10여명이 함께 했다. 인권체험마음은 구체적인 문제와 활동방식으로 재구성돼 기대가 컸다. 앞모듬의 아이가 외로웠던 경험을 종이 에 적고 다음 모듬의 아이가 해결책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외로워 마을'. 왕따 당하면 다른 친구를 사귀라

거나, 아이들이 수가 맞지 않는다고 놀이에 끼워주지 않으면, 심판을 보다가 반칙하는 친구대신 들어가라는 등 나름의 묘책들이 등장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초정보를 주기 위한 '무서워 마을'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체벌과 욕설, 술 주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 등에 대해 성토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무책임하거나 폭력적인 어른들의 모습에 많이 노출돼 있음을 보여줬다. '튼튼해 마을'에서는 백혈병에 걸린 또래 아이의 상황을 놓고 한달 동안의 약값만도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을 하게 된 아이들은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왜 무료로 주면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해 약값을 내리려 한다거나 정방방이 없다면 약을 훔쳐서라도 환자에게 줘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아이들이 직접 인권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 중 '놀 권리'를 그린 포스터는 쓸 수 없는 마을에서 본 축구공을 꿰매야 하는 인도 어린이와 밖에 나가 (→2면에서 계속)



만화사랑방

이동수

###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모 변호사는 훗날 시사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무장간첩도 아니었고, 독침이나 권총 같은 증거물도 없었다”며 “설령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범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가족을 만나러, 혹은 사업차 일본에 다녀온 일이 조총련과의 회합 및 지령수수 혐의로 투감하고, 조업 중 납북되었던 어부가 귀환 10여 년 뒤에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는 등, 70·80년대에는 의혹투성이의 ‘간첩사건’이 줄을 이었다. 적게는 수십일, 길게는 1백여 일이 넘는 장기 불법구금과 가혹한 고문 끝에 발아낸 ‘자백’이 공통적인 증거였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은 통칭 ‘조작간첩 사건’이라 불린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70·80년대 조작간첩 사건의 연루자들은 모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의혹까지 풀린 것은 아니다. 이에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한 조작간첩 사건 관련자의 진실 찾기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배척한 신귀영 씨의 사례는 조작간첩 사건의 단면과 현행 재심제도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1980년 ‘가족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5년을 복역한 신귀영 씨도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다. 신 씨의 주요한 혐의는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것. 그러나 신귀영 씨는 “조총련 간부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지령을 내릴만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신수영 씨의 진술서를 확보해 94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70일 간 불법구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95년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새로 제출된 신수영 씨의 진술서만으로는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신 씨 등이 주장한 관련 경찰관들의 고문, 감금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였다.

1차 재심청구에 실패한 신귀영 씨와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다시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목격자로 등장한 인물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밝혀낸 것이다. 목격자 박모 씨는 “피고인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당시엔 관련 장소에 도로조차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박 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세하게 보지 못했다”며

증언을 반복했다.

그러나 박 씨의 새로운 증언만으로는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형사소송법 상 ‘위증 혐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있어야 재심청구사유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박 씨의 위증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돼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신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박 씨는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을 당한 끝에 거짓증언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게 됐다. 신 씨와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재심청구의 근거로 다시 제출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2001년 8월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가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뒤집어졌다. 지난 7월 19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것이 아니고, 고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위증 혹은 고문 혐의에 대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법원은 형식논리만을 앞세웠다.

신귀영 씨의 소송대리인 문재인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조차 의심스럽다”라며 “(목격자

가) 본인 스스로 위증이라고 자복함에 따라 증거의 객관적 토대가 무너졌는데도, 거기에 위증 확정판결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서 확정판결에 의해 고문을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나”며, “재판부의 이런 논지는 재심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마저 신 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면, 공식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고문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형(84년 57일간의 구금조사 끝에 간첩혐의 인정. 14년 복역) 씨 사건을 비롯해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변호사는 “간첩조작사건들에 대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폭넓게 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재심을 청구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됐고, 따라서 재심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5·18특별법의 제정 이후 줄줄이 재심이 받아들여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전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문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과거 간첩사건의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심이 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창조)

(→1면에서 이어짐) 놀고싶은 참가자들을 같이 그려 눈길을 끌었다.

매년 여름 인권캠프를 통해 벌써 2~3년째 만나는 아이들이 있다. 쉬지 않고 장난거리를 찾고있는 아이들의 마음 한편 자리잡은 어른 못지 않은 진지함이 드러날 땐, 그간의 수고로움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방학이면 쏟아지는 각종 캠프 속에서 인권캠프 역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교양과목이 돼 입으로만 정답을 외계될 위험도 무시 못할 것 같다. (김보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10일(토)

제 21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복직투쟁 2년, 고공농성 끝 결심

### 중앙일보 인쇄 해고노동자 순차적 복직 합의

폭우와 바람에 맞서며 지상 50미터 높이의 고공전광판 위에서 농성을 벌였던 중앙신문인쇄체재부 조남영 전 위원이 복직투쟁 2년 만에 다시 자신과 동료들의 복직을 약속받았다.

지난 6일 낮 조 씨는 언론노조와 A프린팅 박무원 사장간의 원직복직에 관한 합의를 전달받고 21시간만에 농성을 풀었다. 합의 내용은 해고자 7명 중 6명을 2개월마다 A프린팅에 복직시킨다는 것. A프린팅은 중앙일보의 인쇄업무를 맡은 중앙일보의 자회사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나머지 한 명의 복직 여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중앙신문인쇄체재부는 2000년 6월 5일 중앙일보를 인쇄하는 중앙기획과 동양기획의 노동자들에 의해 결성됐다. “동료들이 대량해고를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병어리 신세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조 씨는 노조 결성의 이유를 말한다. 그러나 회사측은 ‘민주노총과 연계하지 말라, 조합원을 확대하지 말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를 폐업한 뒤 이름만 J프린팅으로 바꿨다(다시 A프린팅으로 개명).

회사의 위장폐업으로 132명의 조합원 모두가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을 복직시키는 대신 노조 집행부 13명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회사측의 제안을 수용하게 된다. 당시 중앙일보 부사장과 A프린팅 박무원 사장은 6개월 내에 13명도 복직시키겠다고 구두 약속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해고자들의 복직투쟁도 다시 시작됐다. 얼마 후 집

행부 6명의 복직을 받아들인 박무원 사장은 올 2월 ‘더 이상의 복직은 없다’고 통고했다. 남은 해고자들은 박 사장의 집과 중앙일보사 앞에서 시위를 전개했지만, 7월 이후론 중앙일보

사의 위장집회신고로 인해 더 이상의 시위도 불가능했다. 그것이 고공전광판 농성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었다. 두번째 ‘복직’ 약속을 받아들였지만, 조남영 씨는 결과가 흔쾌하지는 않다. 동료 한 명의 복직 문제가 남아 있고, ‘순차 복직’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두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조 씨는 “회사가 처음부터 약속을 지켰다면 목숨을 걸면서까지 싸움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씩씩했다. (이주영)

### <논평> 사면의 역설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정호용, 장세동, 권노갑... 한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양심수 사면에 끼어 들어 간단히 사면과 복권을 쟁겨왔다. 어디 12·12와 5·18, 한보사건 연루자뿐이겠는가. 권력형 비리의 공범자들에게 대한 정권의 너그러움은 사면에 대한 회의를 부추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최근 현직법관들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세심스러운 지적이 아니다. 99년,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를 끼워 넣는데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연루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2000년에도 정부가 비리사건과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려는데 대해 ‘원칙 없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면은 정권의 선심 배풀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하여 빛은 잘못을 돌이키고 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과연 ‘사면불감증’에 걸릴 만큼 대규모의 술한 사면을 겪어온 우리가 진정한 관용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제2의 사상전향제도로 날을 세운 ‘준법서약제도’를 유독 양심수에게만 강요하고, 풀려난 양심수가 출소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을 할 경우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미리 엄포를 놓고, 출소 양심수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을 강화할 테니 우의들이여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미결수와 정치수배자는 아예 제쳐놓는 것이 현 정권의 사면이었다. 양심수에게는 이런저런 족쇄를 채우고 권력형 범죄자들에게는 헐값으로 자유를 선사하는 사면은 그 본질적 의미를 잃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돼버렸다.

올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정치권이 잔재주로 “국민대화합”을 노래하는 사면을 연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양심수를 틀러리로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시대 사면의 역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상·양심의 자유를 유린하고 노동자의 결사와 행동을 범죄시하는 법제도가 맘껏 활개치고 있는 한 사면은 양심수의 물갈이에 불과하다. 인권과 양심을 가두는 감옥은 변함없이 거기에 있고, 언제나 먹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

###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김병수(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 ■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인간도 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제는 그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제인간이 태어날 장소가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개체복제 금지에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이다. 인간개체복제는 인간배아복제 논쟁과 달리 의학적 효용성과도 관련이 없으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 세계가 합의한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인 '라엘리언무브먼트'는 지난 1997년 이후 캐나다에 '클로나이드'라는 자회사 설립하고 인간개체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회사는 세계 곳곳에서 인간개체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다. 특히 작년부터는 인간복제를 실현할 구체적 장소를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미 사법당국의 조사 이후 한국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에는 복제인간 탄생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을뿐더러 신청한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여럿 포함돼 있고 국내 복제기술 수준도 상당하다는 것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근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클로나이드의 자회사인 바이오퓨전 테크놀로지사가 대구에 설립됐고 외국 기술진에 의해 복제배아를 착상한 대리모 1명이 이미 국내에 입국해 있다는 것이다. 인간개체복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클로나이드사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처럼 복제 시도가 잘 진척되고 있다면 복제인간이 태어날 유력한 장소는 바로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이번 시도도 복제아가 태어난다 해도 그간의 동물실험에서 드러났듯이 현재의 기술 수준

에서는 건강한 아기보다 유산이나 기형아로 태어나 짧고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 ■ 논란이 많았던 인간배아복제

인간개체복제와 달리 인간배아복제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배아복제가 주목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의학적 가능성을 지닌 배아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배아줄기세포는 파킨슨씨병, 척수손상, 화상,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치료에 이용되는 대체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선 인간배아의 배양과 파괴가 필수적이고 이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문제가 심각히 제기된다.

인간배아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인간배아는 그 창출 순간(난자와 정자가 만나는)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가 부여된다'는 입장이다. 주로 종교계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간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특별한 도덕적 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입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입장으로 '인간배아는 잠재적 인간 존재로서 특수한 지위를 지닌다'는 것이다. 즉 배아가 성장해감에 따라 점차 도덕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제한적인 배아연구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입장을 취하더라도 어떤 배아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불임시술을 하고 남아 폐기처분될 잔여배아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목적으로 체외에서 만들 것인지 더 나아가 핵치환 기술을 이용해 복제를 해서 사용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 ■ 사회적 합의, 제대로 이행해야

논란이 많았던 배아복제의 허용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활동했던 과학기술부 산하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배아복제는 금지되 의학적 가능성을 고려해 불임시술을 하고 남은 잔여배아에 대한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종간 교잡은(예컨대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핵을 이식하는)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과학계, 종교계, 시민단체들을 대표하는 20명의 위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 결정된 것이고 그 과정 또한 오랜 토론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런 결정은 외국에 비해서도 결코 강력한 규제가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 금지' 등이 포함된 생명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런 사회적 합의 사항을 슬쩍 빼버린 채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과기부는 산하에 구성되어 활동했던 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빼버린 채 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고 관련법안에 대한 주도권 문제로 경쟁관계에 있던 복지부도 인간배아복제 금지 사항을 빼버린 채 제출했다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과기부는 지난 5월에 제출하고도 이제까지 이런 사실을 숨겨왔고,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속이고 배아복제는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우선 인간개체복제는 막고 봐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합의를 빼버린 채 졸속 입법을 추진한다면 그간의 정부활동은 시간 끌기 또는 윤리적 방패막, 부처간의 이해타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마련된 사회적 합의물을 법제화 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제화 과정에서 의 여론 수렴은 과학계, 산업계, 여성계, 시민 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13일(화)

제 21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출입국관리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인을 추방해 온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가 제동을 걸었다.

9일 국가인권위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중동포 김모 씨 등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일 만취한 상태에서 수원의 한 정육점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다음날 이들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고, 곧바로 출입국관리소장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출입국관리소장은 김씨 등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같은 항 4호)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김씨 등이) 단지 단순히 목숨을 잡고 밀친다거나 욕설을 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출입국관리소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경종을 울린 것.

국가인권위는 또 "이의신청 및 행정

소송 등 필요한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에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가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목사는 "(출입국관리소도 강제퇴거 전에) 일단 법원의 판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인노동자, 중국동포의 인권을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동북아신문 우성영 편집장은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 법을 어겨 출국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출입국관리소의 관행을 비판했다. 이어 "추방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악몽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퇴거를 당한 외국인은 5년 동안 재입국할 수 없으며, 김씨 등의 경우는 강제퇴거와 입국금지의 사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이 날 때까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은 보류될 것"이라고 간단히 답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하며, 김씨 등이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용]

### 이동권보장 요구, 장애인들 단식 시작

국가인권위원장실 점거, 발산역 추락 참사 대책 촉구

장애인이동권 관련, 국가기관들의 책임 회피에 대해 장애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2일 아침 11시 30분,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20여명은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휠체어 중증장애인 8명이 포함된 이들 단식 농성단은 같은 날 낮 2시 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사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진본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인권 문제이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차별받는 사람들이 찾아갈 곳이 여기 아니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단식농성 장소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국가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결성된 이동권연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서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또 지난 5월 중증장애인 윤재봉 씨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추락사망한 사건 이후에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7월 말 서울시로부터 '공개사과 불가' 입장만을 확인한 바 있다. [고근예]

###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

## 세상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세상에서 똑 같은 것을 찾아보려면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아니, 똑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철쭉과 진달래가 서로 다르고, 같은 진달래도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르다. 봄에 다르고 여름에 다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무심히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다르다. 사람은 더욱 더 같지 않다.

사람은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말이 사람이 똑 같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어떻게 미국사람과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같을 수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같을 수 있는가? 또 쿠바 사람과 미국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생긴 모양도 다르고 처한 사정도 너무 다르다. 또 같은 나라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차이가 난다. 같은 미국 땅에서도 백인과 흑인이 언제 같아 본 적이 있는가? 사회적인 처지가 같아 본 적이 역사적으로 한번도 없었다. 같아 본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혼자서만 살면, 서로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사람은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다. 모여 사니까, 어떤 놈은 패고,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놈은 활개를 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숨어 다니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놈은 너무 잘 살고, 어떤 놈은 너무 못살고, 어떤 놈은 잘난 체하고 어떤 사람은 기죽어 사는 것이다. 서로 모여 살지 않으면 얻어터질 일도, 숨어 다닐 일도 기죽어 살 일도 없는 것이다. 또 서로 모여 사니까 어떤 놈은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잘난 체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서로 모여 사는 처지에서 최소한은 같아지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똑 같은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데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 차이를 줄여 보려고 서로 같으니, 법 앞에 평등하니 하면서 같아 질 수 있는 범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원래 같다고 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 밖에 없게 된다. 원래 같은데 게으르고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얻어터지고, 숨어 다니게 되었다는 말 밖에 더 되겠는가. 결국은 자기 잘 낫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원래 잘 난 놈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말이다. 원래 잘 나고 못난 사람이 없는데 모여 사니까 못난 사람 덕분에 잘난 놈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짝대로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은 차이가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생겨난 차이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 양, 또 그것을 무시하고 모두가 같다고 말한다면 이익을 보는 놈들은 몇 안되고, 그 놈들만 좋아할 것이다.

(진영종, 성공회대 영문과 교수)

## 주간인권호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1. 재판권 못 준다는 미국이나 감싸고도는 정부나 의정부지청,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 '통신장애가 사고원인' (8.5) →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건 범대위', 현장검증도 거치지 않은 의정부지청 수사발표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의 재수사 촉구 의견서 내 (8.6) /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법무부에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거부 통보 → 국방부, '재판권 이양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군 두둔 → 범대위, '한국민의 최소한의 요구 무시' 비난 (8.7)

2. 질렸다. 미국... 팽배가 따로 없네!  
이라크 국회의원,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여부 진상조사단 파견을 미 의회에 제안 →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이라크 제의 수용할 수 있다'... 이라크 공격 반대 입장 → 미 정부, 이라크 제안 일축 (8.5) → 사우디, '미 이라크 공격 시 사우디 영토 이용 불허' 입장 (8.7) / 미 국무부, 미 석유회사 역손모빌 상대 인도네시아 아체주민들의 인권침해 소송이 테러와의 전쟁 방해한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 요구했음이 알려져 (8.5) / 미 행정부, 아프간 포로에 관한 심문 정보 달라는 법원 요청 거부 (8.6) / 미 행정부, 군사 지원 중단 협박하며 각국에 미군 면책 보장하는 양자협정 강요... ICC 무력화 기도 (8.10)

3. 국정원, 자료 확인 거부... 검사, 출석 거부  
민주노총, 전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등 노동관련 의문사 사건 철저히 진상규명 촉구 (8.6) / 의문사진상규명위, 92년 변사체로 발견된 탁은주 씨 사망사건에 대해 첫 '진상규명 불능' 결정 내려 (8.6) / 의문사규명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첫 실지조사... 국정원 자료보존실 확인 거부 (8.7) / 의문사규명위, 문용섭 사건과 관련 출석요구에 불응한 명동성 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8.8)

4. 노동자에게 장기파업, 고공농성 강요하는 사회?!  
77개 사회단체, 노조탄압 중단·지권중재제도 철폐 등 장기파업 해결 촉구 (8.5) / 중앙일보 인세 노동자 조남영 전 위원장, 원직복직 약속 이행 요구 전관판 위 농성 (8.5) → 회사측과 순차적 복직 합의... 농성 풀어 (8.6)

5. 국민 통제 못해 안달 났네  
일본, 모든 국민에게 주민표코드 부여하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시스템' 시작... '주민 통제장치' 비난 (8.5) / 프 정부, '범죄와의 전쟁' 추진... 경찰병력 증원·청소년 범죄자 형벌 강화 등 '경찰국가 강화' 논란 (8.7)

◎ 주요 판결 및 통계 : 행정법원, 보훈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라는 판결 내려 (8.9) / 94년 이래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 최대 수입국은 이스라엘 (8.9)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14일(수)

제 21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국회의원 소유 사업장, '용역깡패' 동원

### 서울온천, 노동자 고용승계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현지 국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한 사업장에 용역경비들이 난입, 농성 중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새벽 4시께 서울온천 (대표이사 박중후)에 대호건설 소속 용역경비 40여명이 유리문을 깨고 들어와 농성 중 이던 참가임대인과 노동자 이상호 씨 등 7명을 밖으로 끌어냈다. 노조와 참가임대인들은 지난 5월 15일 이후 서울온천 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보상 없는 퇴거 통보에 반발해 서울온천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

올해 1월 민국당 감속자 의원이 설립한 (주)청석모정은 3월 14일 서울온천을 인수한 후 5월 14일 모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참가임대인들에게도 일방적으로 건물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후 회사측은 가스·수도·전기 공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했고 용역경비를 수시로 투입할 것임을 언저시 내비치며 농성자들을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노동자 김영수 씨는 "새벽에 용역들이 들어와 어깨와 허리를 양 옆에서 잡고 밖으로 밀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아침 10시께 박성일 씨 등 노동자와 임대상인 3명이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다 유리 파편에 맞아 손과 발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오후 2시께 상인 이원자 씨는 사진을 찍다 경찰에 연행되던 용역 한 명에 얼굴을 주먹으로 맞기도 했다.

더욱이 한 캡스 노동자는 이날 동원된 용역경비들 몇몇이 지난 7월 천지태광 공장에 투입됐던 이들과 일치한다고 말해, 용역경비가 노동탄압에 수시로 동원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덕일 서울온천 노조위원장은 "노동

자들이 용역에 밀리고 다쳤는데도 노원경찰서 측은 용역경비들의 위법행위는 수수방관하면서 도리어 의경을 동원해 노동자들과 임대상인들을 막았다"라며 경찰에 대한 불만을 토론했다. 또한 백남길 상가보상대책위원장은 "일반인도 아닌 국회의원이 어떻게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경찰은 오후가 되어서 용역경비 중 3명을 경찰서로 연행한 것으로

(알림)

15~17일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수련회' 관례로, 이번주 금요일·토요일 인권하루소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알려졌다. 노원경찰서 강력5반 관계자는 이날 저녁 무렵 "이들을 폭력행위로 형사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노조위원장은 "서울온천 측은 노조를 탈퇴하고 계약직으로 들어오라는 말뿐, 고용승계, 참가임대인 보호 등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라며, "빨리 문제가 해결돼 사람들이 온천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산정도 필요

환자들이 부작용없는 백혈병 치료제를 부담없는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민중의료연합 공공의학센터 권미란 씨는 "인도의 제약회사인 시플라사가 글리벡의 복제약을 1캡슐당 4백40원에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라고 밝혔다. 이는 노바티스가 주장하는 가격 2만4천원의 1/57. 글리벡 복제약은 성분과 함량이 글리벡과 동일하며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약이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아래 공대위)는 이날 26일 대표단을 인도에 파견, 시플라사와 복제약 수입 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해야, 이를 수입·판매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31일 제1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연 데 이어 다음달 초에 제2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글리벡 강제실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노바티스는 백혈병 환자 6백여 명을 위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조건 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하며, 한 캡슐당 2만 4천원의 약가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현행 제도는 혁신적 신약의 경우 선진 7개국 기준으로 약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노바티스 주장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날 공대위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에 의해 왜곡된 신약약가 산정 제도의 즉각적인 개정과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정부에 다시금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의 약값을 국민소득이 3~4배가 차이 나는 부국 7개 나라의 약값 평균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3~4배의 약값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공은나)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6)

##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나흘만에 인민군은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이후 경기도 일대는, 같은 해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해 28일 서울에 진주할 때까지, 인민군에 의해 통치됐다. 서울수복 후 유엔군과 한국군은 계속해서 북진을 했고, 중앙권력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가운데 경찰과 우익청년단체들은 경기도 일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인민군에 적극 협력했던 좌익들은 인민군을 따라 이미 북으로 올라갔지만, 지역에 남은 민간인들에 대한 경찰과 우익단체들의 학살은 부역자 처벌을 명분으로 잔인하게 진행됐다.

두개골 70여점, 잠뎀 7백80여점, 손을 묶었던 P.P선 1백50여점, 어린이 이 신발을 비롯한 1백여 개의 신발, 가지런한 채 그대로인 비너 꽃은 머리, 어느 소녀의 것으로 추측되는 굵은 땀기머리, 문양도 선명한 허리띠의 바클, 지금도 선명하게 찍히는 도장 등... 95년 9월 경기도 고양시 고봉산 자락에서 수직으로 15미터를 파고 내려가자, 45년 동안이나 땅 속에 묻혀있던 유골과 유품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이곳에서 유골들이 발굴되리라 익히 예상했던 유족들도 막상 그 광경이 펼쳐지자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당시 유골 발굴은 17미터까지 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붕괴의 위험과 발굴 비용의 문제 때문. 하지만 불과 2미터 깊이에서 나온 유골만 하더라도 발굴현장 주위를 둘러싸기에 충분했다.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소 1백53명이다. 이 중 여성이 10% 이상을 차지하며, 10대 후반의 뼈도 발견됐다고 한다.

이곳은 일제강점시기 금을 캐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수직으로 파 내려간 곳으로, '금정굴'이라 불려졌다. 50년 9·28 서울 수복 후 경찰과 우익단체들은 이곳에서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해 묻어버렸다. 빨갱이의 씨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였다. 고양 금정굴 유족회 서병규 회장은 금정굴의 깊이가 50미터나 된다고 하니, 금정굴에서 학살된 수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오늘날 추정되고 있다.

13일 아침 11시경 10여 명의 재미동포 청년들이 금정굴을 찾았다. 이들 재미동포 청년을 맞은 서병규 회장은 62 <인권하루소식> 합본 19호

자신이 겪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인민군 점령 당시 둘째 형이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들은 서 회장의 아버지와 첫째 형, 셋째 형을 금정굴에서 학살했다.

"삶이라는 게 말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입 뺨 못하고, 죽어서 살아야 했어요. 제를 울리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목격할까 봐 40년 동안 오지도 못했어요. 한번은 어머니가 날 붙들고 '같이 죽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시는 걸 제가 말렸습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나가요. 또 한번은 낡은 애기를 얹어놓고 저보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그대서는 안 된다'고 하고 얘기를 바로 뉘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그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했죠. 농사고 노동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시다."

당시 학살의 충격으로 서 회장은 청각 장애자가 되어 지금까지 보청기를 하고 있다. 또 가해자들이 부역자 가족이니 빨갱이 가족이니 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 고향을 떠나 살아야만 했다.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난다는 서 회장은 끝으로 재미동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유족들의 억울함을 선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했다.

고양 금정굴 유족회 마임순 총무의 사연도 기구했다. 마 총무는 금정굴 학살로 인해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삼촌과 시숙 2명을 잃었다. 이유는 시아버지의 동생되는 분이 한국전쟁 당시 좌익활동을 하다가 월북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치안부대원들은 당시 16살, 13살 밖에 안된 시숙들을 금정

굴 인근 '새벽구덩이'로 데려와 학살했다. '부역자 가족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촌 당숙의 양자로 입양돼 있던 마 총무의 남편도 치안부대원에 잡힐 뻔했으나, 큰 함아리에 숨어 간신히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 마 총무의 남편은 겨우 5살이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 총무의 남편은 3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임용되지 못했고, 미국에서 일하려 측량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했다. 시누이의 아들 또한 육사시험에 합격했지만 입학하지 못했다. 모두 연좌제 때문이었다. 그리고 원래 마 총무 시대 소유의 집과 토지(2백50평)를 가해자 쪽에 빼앗겨 끝내 소유권이 넘어가고 말았다. 빨갱이로 몰릴까봐 20년이 넘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탓이었다.

억울함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의 유족들은 93년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바로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다. 그 덕에 금정굴 학살사건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고, 99년에는 경기도의회가 '금정굴 양민 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간 진상조사를 하기도 했다. 또 다음달에는 제10회 희생자 위령제를 올릴 예정이다.

「고양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춘열 집행위원장은 "현재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에,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에 이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으로 △현장정비 △유골안치 △유령탑 건립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으로 △통합특별법 제정 △공식적인 진상조사 △명예회복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정굴을 학살위령 공간으로 만들어 교육의 장으로 삼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15일(목)  
제 21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정 웹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금하도록 한 차별적인 행정처분에 법원도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zone.com>)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소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8월 엑스존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엑스존을 이를 고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엑스존 운영자는 지난 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엑스존 운영자는 이번 소송에서 "동성애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를 심의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평등권과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되고 모법이 정한 심의기준의 한계도 벗어난 것"이라며 "이 시행령에 따라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채 "(시행령의 관련 규정) 무효라 하더라도, 행정처분 당시에 그 무효를 선언한바가 없었으므로 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엑스존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 받는 동성애자들이 삶을 공유하는 공간 역할을 하는 엑스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가 아무 생각없이 올린 게시물 몇 개로서 음란성 여부를 평가해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엑스존의 게시물이 음란한지 여부에 관해 "보는 사람에게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 경우 음란성을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하지는 행정처분을 당연무효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다"라고 기

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엑스존 측 소송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했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킹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엑스존에 대한 유해매체 결정 처분을 무효할 수는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재윤 씨는 "이번 결정이 다른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내의 동성애자 차별 조항의 폐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주영)



이동수

##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 양심수 1천5백여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대통령의 재량권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사면이 이번 광복절엔 행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권시절 마지막 '8·15 대사면'을 기대했던 노동·인권단체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들은 노동자 40여 명, 한총련 소속 학생 20여 명, 집시법·국보법 등 위반자 30여 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4백 정도 등 모두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현 정부 들어 생긴 시국사건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나 서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저항한 노동자,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학생과 민주인사들"이라며, 대통령이 사면을 행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 학생 등 양심수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손 실장은 "사면복권은 실정법이나 공안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야말로 대통령의 의중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라며, "현 정권은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숭배하지 실제로는 가증스런 노동탄압 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98년 이후 4년 7개월 동안 노동쟁의 등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7백88명이다. 일주일에 세 명 꼴로 구속된 것.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달 30일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수배 노동자 1백12명을 포함 모두 1천8백32명에 대해 정부에 사면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사면 대신 '광복절 경축가식방'이란 형태로 8·15를 맞았다. 정부는 이번 경축가식방을 통해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를 포함해 모두 1천3백7명이 가식방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민혁명 사건으로 구속된 심재춘 씨나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된 전철연의 운보준 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가협 송소연 간사는 "이는 특별사면이 아니고 매월 있는 가식방에 숫자만 조금 늘어난 것"이라며,

"심재춘 씨나 운보준 씨 모두 자기 형기의 75% 이상을 수감 생활했다"라고 지적했다. 송 간사는 이어 "우리는 '8·15를 맞아서 국민의 정부 마지막으로 사면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문제해결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오히려 허탈해했다.

한편,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양심수"라며, "앞으로는 이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인권단체들을 만나 '병역거부자들도 양심수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인권단체들도 여기에 동의

하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범용)

#### <용어설명>

○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에 대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공소권이 상실되는 것이며,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며, 대통령이 행한다.

○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하는 것이고, 복권은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령이나 대통령이 행한다.

○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수용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석방하는 것이며, 형집행정지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집행 중인 형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 책읽기

### 『서준식 옥중서한 1971-1988』

서준식 / 출판사 야간비행(Tel 333-3075) 펴냄 / 2002년 / 831쪽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17년간 감옥살이를 하며 세상을 향해 소통한 편지들이 『서준식 옥중서한 1971-1988』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절판 10년 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72년 5월 12일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부터 1988년 5월 2일까지 서 씨가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글을 담고 있으나, 그 내용은 출소를 기약할 수 없는 수인의 내밀하고 치열한 자기고백을 담은 '일기'와 같다.

이 책은 '옥중서한'이라는 기록을 통해, 독자들이 1970·80년대 한국 감옥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감옥에 있는 자식을 면회하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 전국의 교도소를 순례하는 노모의 안타까운 여행과 만날 수 있으며, 내면을 개조하려는 살인적인 정권 앞에 한 젊은이가 어떻게 저항하며 싸웠는지를 고통스럽게 맞닥뜨리게 된다. 7년을 살고도 전향하지 않아 10년의 세월을 견디 우직스럽다 못해 '어리석은 자'의 고집과 만날 수 있다.

옥중서한은 저자 자신이 "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옥중의 정신경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할 만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서준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즉 그가 머리글에서 "봉합염서 위에 한 치 한 치 고 통스럽게 정신적인 지평을 열며 전진하는 짧은 날의 자화상"이라고 평한 그대로.

비전향 장기수 1호로 출소하지 14년, 그는 인권운동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시대 그가 자신의 옛 글 통해 200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체제내화 되지 않고, 금옥의 아픔을 묵묵히 견디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의 편지글은 우리의 나약한 면을 비추는 거울이고, 힘내라는 격려이며,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이다.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20일(화)

제 21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의문사법' 3차개정 여론 대두

###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민주노총, 추모단체 등이 의문사위의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연장 등 '의문사법' 3차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문사위의 조사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중도하차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 남상현 등, 아래 계승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현재 사건 태반이 종결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도 허덕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사건종결 시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며, "이렇게 되면 (조사가 진행 중인 의문사 사건에 대해) 졸속적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18일 성명에서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 살인자들이 버젓이 활보하는 가운데 구천을 떠도는 억울한 노동자들의 영혼은 영원히 잠들지 못할 것"이라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크게 강화하며 ...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노동자 관련 의문사는 박창수 사건 등 10건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의문사위는 모두 83건의 의문사 중 24건을 종료하고, 나머지 59건에 대해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들과 국가정보원 등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59

건 중 절반 이상이 '진상조사 불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상자글 참조】

이러한 사태는 애초부터 예견되어 왔다. 피진정인과 가해기관의 비협조를 극복할 수 있는 권한이 의문사위에 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2차례 '의문사법'이 개정됐지만, 조사기간만 연장되어 왔을 뿐 조사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번번이 무산됐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속에서 조사기간도 연장시켜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과 계승연대 등의 입장이다.

####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삭제

이에 계승연대가 마련한 3차 개정안에 따르면, 의문사위가 통화내역·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기관 등에 요구할 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피진정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 감청,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한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구인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기간 조항은 아예 삭제돼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케 했고, 진정인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나 추가진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했고, 국가배상이 있을 시 우선 피진정인의 재산을 몰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계승연대 등은 20일 아침 10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의문사법' 3차개정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연다. 이후 30일 '의문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31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 비협조적이었던 전두환 전대통령, 최광태 검사, 국가정보원 등을 상대로 항의방문을 전개하기도 했다. (고근에·범용)

80년대 초 강제징집·녹화사업과 관련,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는 10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정형근·최연희·유홍수 등 국회의원 3명이 의문사위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정의원과 최 의원은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으며, 유 의원은 치안본부장이었다.

97년 김준배 의문사 사건의 담당 검사 정윤기 현 영월지정장은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모두 거부해, 지난달 의문사위로부터 과태료 7백만원을 부과받았다. 97년 정경식의 의문사 사건의 담당검사인 최광태 현 대구고검 검사는 12일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88년 문용섭 의문사 사건 담당검사였던 명동성 현 인천지검 차장검사도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해, 현재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상태다.

가해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은 7일 단지 '관련자료의 목록만 확인하겠다'는 의문사위의 실지조사요구를 거부했다. 또 다른 가해기관 기무사에 대한 실지조사 방침도 정해졌지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의문사위는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요구를 했고,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출석요구를 발부한 상태다.

①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①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남북대치와 휴전상황 등으로 인한 전쟁발발의 위협은 지난 반세기의 역사동안 너무나 많은 상처를 이 땅에 남겼다. 징병제는 이 고통의 상처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총을 들고 전선에 서서 상대방(그것도 동족)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다.

지난 7월 30일 부산의 한 대학생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특기할 만한 일은 이 병역거부자는 특정종교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평화와 양심이라는 내면의 의식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결국 7월 30일의 이 ‘사건’은 상시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당위론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를 촉발했다.

국가단위가 존속하는 이상 국민이라면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당연’히 총을 들고 살인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혹시 우리의 착각이 아니었을까?

한동안 잠잠했던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30년이라는 세월동안 ‘당연’하게 국가에 지문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다. “국민의 도리로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지문을 기꺼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존재한다. 왜 기꺼이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의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문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당연’할 것 같은 지문날인제도가 전혀 ‘당연’하지 않은 제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채취된 지문의 활용도도 극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지문날인을 옹호해왔던 사람들을 오히려 황당하게 만든다.

국가 징병제를 고수하는 이유의 근거에는 언제나 국가의 마음대로 국민을 다루고자 하는 음험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실효성도 없는 지문날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간단한 제도적 관리기술로 국민의 인식체계까지 조작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징병제나 지문날인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는 그 ‘당연함’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제도들이다. 애초부터 ‘당연’하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져 왔던 것이다.

‘당연’하니까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는 동어반복일 뿐이다. ‘당연’하면 안 되는 일이 ‘당연’하게 벌어지는 사회에서는 마땅히 ‘당연’해야 할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일로 전락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이러한 현상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1. 목숨을 걸어야 돌아다닐 수 있나요?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 돌입...중증장애인 8명이 포함된 이들 농성단은 지난 5월 서울지하철 발산역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의 공개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8.12)

2. 충분한 구제절차 없는 추방에 제동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출국을 앞둔 재중동포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 등의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라며 출입국관리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의 단계적 폐지를 정부에 권고. 또한 2002년 3월까지 외국인불법체류자 전원 추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건의(8.13)

4. 배째라고? 그럼 못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980년 초 녹화사업 관련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 발송하겠다고 밝혀(8.13) / 민주화운동통신계승국민연대, ‘출석해 진상을 밝히라’며 전 전대통령 집 부근에서 시위(8.16) / 한상범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한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8.12)

5. 국민정서법(?)에 금지 당한 인공기 응원

대검찰청 공안부, 북한응원단 등이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8.12)

6. 감속 문은 열리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 양심수에 대한 차디찬 외면 속에 사면 대신 ‘광복절 경축가석방’에 그쳐(8.14)

◎ 주요 판결

서울지법, 선천성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체벌로 초등학교생에게 뇌출혈이 일어났다면 해당기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려(8.12) / 서울행정법원, 회사 내 집단 따돌림과 퇴직 중용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8.14) / 서울행정법원,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8.14)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21일(수)

제 21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쏘”

“84년 4월 1일 밤 당시 강원도 화천 휴전선 방어를 담당하던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에서는 ‘죽음의 술자리’가 벌어졌다.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던 술자리에서 하사관 1명이 중대장과의 말다툼 끝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 주위 사병들에게 화폭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중대장 전영이던 허원근 일병을 발견, 탄창이 삽입된 총으로 행패를 부리다 허 일병의 오른쪽 가슴에 총을 발사했다. 우발적인 총격으로 허 일병은 그 날 새벽 2~4시경 사망했다.

같은 날 아침 대대 간부가 현장을 확인한 후 중대장 등과 대책을 논의해 본격적인 사건조작에 들어갔다. 내부만 불청소가 진행됐고, 허 일병의 사체는 폐유유고 울타리 주변으로 옮겨졌다. 이후 중대장은 아침 9~10시경 중대본부 요원 1명과 철책 순찰을 나갔고, 10~11시경에는 누군가가 이미 죽은 허 일병의 왼쪽 가슴과 머리에 각각 1발씩을 쏘았다. 그리고 낮 1시20분경 정식 식사를 위해 이동 중이던 중대본부 요원들에 의해 허 일병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신고됐다.”

2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진정 제32호 허원근 사건 관련, 당시 허원근 씨의 타살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에 착수했던 7사단 헌병대의 자살결론을 18년만에 뒤집는 것이다. 당시 7사단 헌병대는 ‘중대장의 이상성격에 의한 흑사로 비판, 중대장이 철책 근무 순찰 나가는 시간을 틈타 탄창과 M16을 휴대하고 내무반을 빠져나가 남방 약 50m 떨어진 폐

유류고에 도착한 후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을 발사해 자살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의문사위는 그 동안 소속 부대 간부와 사병 및 헌병대·보안대 관련자 등 2백여 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의문사위의 초기 조사과정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한 간부와 사병들은 한사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당시 허원근 사건이 상급부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간부의 이야기를 옆에서 전해들은 사병의 진술을 근거로 타살의 단서를 잡았다. 이를 근거로 외곽에서부터 사건현장으로 접근해 들어갔고, 결국 사건현장에 있던 장교와 사병들은 하나하나 입을 열었다. 그 중 일부가 결정적 진술을 해, 의문사위는 허원근 사건이 타살임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허원근 사건의 경우, △자살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유서도 남기지 않

은 점 △자살을 하기 위해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 총을 쏘았다든 점 △당시 총성은 2발 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사병의 귀뜸 등 처음부터 무수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84년 7사단 헌병대 수사결과 자살로 내려진 결론은 같은 해 2군단 헌병대 수사과 육군 범죄수사단 재조사에서도 번복되지 않았다. 또 96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방부에 재조사를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다.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허원근 사건은 군 내부 의문사 사건의 전형”이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된 의문의 죽음을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대군 조사3과장은 “현장에 있던 사병들은 은폐과정에서 공범관계를 형성했다”라며, “이후 헌병대의 수사와 재조사 과정은 이들이 말을 못하게 막는 과정으로 작용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문사위는 허원근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지 않고 중간 발표 형식을 취했다. 허원근 씨가 타살임을 확인했으나, 타살이 자살로 은폐된 경위를 계속 (→2면으로 이어짐)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발간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인권하루소식’이 보도한 인권소식이 한 권의 책으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호는 ‘색인체계’를 대폭 정비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복잡한 인권소식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소수자>의 범주로 분류했고, 국외 인권소식은 <국제>란에 모았습니다. 또 감옥인권, 국가인권위, 과거청산/불처벌, 테러방지법 등은 <특별주제>라는 범주로 묶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2002년 상반기의 인권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 구입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 ◇ 가격 : 1권당 1만원 (우송료 별도)

## 장애인 이동권, 팔짱 풀고 일을 하라

###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질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 정거 단식농성이 아흐레를 넘겼다. 최근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극에 달한 장애인들이 극한적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각계의 지지와 격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일 인권단체들도 서울시청의 공개사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11시 장애인들의 농성장인 국가인권위 건물 11층에서는 인권 실천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 등 13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회견을 열어 장애인들의 농성에 지지를 보냈다.

기자회견에서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정계천을 뜯어고치지 않는 사람이 이동이 제일 필요한 장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난했다. 서울시

는 '농성 중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한편 '책임질 일 없기 때문에 사과할 일 없다'는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를 향한 유감도 가감 없이 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한편 농성중인 장애인들에게 퇴거를 종용하고,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에서 직원휴게실로 농성장소를 옮기게 해 비난을 사 왔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주무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한 바 없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하라"라고 질타했다.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박경석 장애인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마지막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에 들어 왔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치장물, 화장품이 아니라면 기본적 요구를 받아 안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권단체 대표단과 장애인 농성자들은 서울시청으로 향했다. 전경들이 가로막은 입구에서 한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5명의 대표단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휠체어에 탄 중증장애인들은 "인권, 흥! 그만둬! 장애인은 방구석의 폐기물이 되었다"라는 피켓을 들고,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서울시청 민원실 간판을 뒤로 한 채 다시 단식농성장으로 향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 이동할 수 있어야 인간으로서 살 수 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20년, 30년 집구석에 박혀서 자신을 잊어버리거나 가족에게 부담주지 않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 첫출발이 이동이다"라고 외친 박경석 공동대표는 "굶어 죽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농성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류은숙)

##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범' 즉각 개정하라!!

20일 아침 10시 서울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민주노총, 의문사유가 족대책위, 추모연대의문사공대위 주관 아래 '의문사범 3차 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3차 개정을 반드시 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9월 16일 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마감되는데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이래서는 역사바로잡기, 과거청산, 새로운 정의세우기 등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이덕우 변호사는 "도저히 이 상태로 활동을 종결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의문사범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개된 개정안은 특별검사제안과 계류법안 수정안 등 두 가지였다. '특별검사제안'은 위원장을 특별검사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등에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및 수사활동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의 요청에 관계 기관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특별검사제안은 이부영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현재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 중인 의문사범 개정안을 수정한 '계류법안 수정안'은 의문사위가 통화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관계 기관이 이에 지체없이 응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제안이나 계류법안 수정안 모두 조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와 추가진정을 가능케 했다. 또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22일(목)

제 21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정부가 '경제특별지구'라는 이름 아래 노동착취를 강화하고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경제특구법)을 입법에 고쳤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 법안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경제특구 내 노동자의 월차·생리휴가 폐지, 파견근로의 무제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특구법과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매월 1회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보장하며, 파견근로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파견대상에서 제외하고 파견기간은 최장 2년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권의 후퇴와 고용불안, 착취구조의 강화가 불 보듯 해, 노동계는 '법제정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월차 및 생리휴가의 폐지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기간은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월차휴가까지 포함할 때야 겨우 국제기준을 넘는다"며 경제특구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건은 더욱 더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급생리

휴가를 배제하는 것은 부족하나마 지탱해주던 모성보호 조항마저 없애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경제특구법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파견근로의 전면 확대. 현행 파견근로법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을 합법화하기 때문에 2중고용에 따른 중간착취를 구조화하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저임금노동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로 인해 노동계에선 줄기차게 파견근로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반면 경제특구법은 오히려 경제특구 내 모든 생산공정과 업무에서 파견노동자를 맘껏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결국 '기업주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하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누구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노동자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불안정한 신분에서 노동권마저 제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로부터 시작되는 노동권의 후퇴와 파견근로의 확대는 다른 지역과 업종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특혜의 대상이 외국인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외국인 합작법인에게도 부여되는 데다, '경제특구'의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경제특구법안은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창조]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유엔과 인권 꾸러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www.sarangbang.or.kr

최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 싶거나,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청원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유엔과 인권 꾸러미>를 소개한다.

<유엔과 인권 꾸러미>는 유엔과 관련된 인권용어를 쉽게 해설해 놓은 것으로 인권과 유엔에 대해 처음 배우고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유엔 인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엔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광범위한 인권보장 체계에 관한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도 유용하다.

내용은 크게 △유엔 주요 인권조약과 이행감시기구 △유엔 청원 절차 △유엔 인권기구 △유엔 전문기구 △유엔 주요 인권회의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해설/조약전문/연락처)가 나온다. 특히, 유엔 인권관련 용어 인덱스는 까다롭고 전문적인 유엔인권용어의 한글 번역어를 수록하고 있어 유엔 문서를 읽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최은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7)

산청 학살, "지리산 자락에 산 게 죄였다"

"1949년 7월 18일 국군이 공비토벌을 위하여 출동하던 중 공비의 습격으로 출동군인이 전사한 사실이 있고, 공비의 군인습격은 주민과 공비간에 일련의 내통자가 있다는 심증을 가진 군인들이 시천면 신천리, 원리, 삼장면 평촌리 등에서 주민을 살해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공비는 여수·순천반란사건과 연계된다고 볼 때 어떤 면에서 군인간의 싸움에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으나 현재 유족회가 접수하여 조사반에 제출한 인원은 202명에 이릅니다." (2000년 6월 산청군의회 산청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실태보고서 중에서)

학살 현장을 안내한 서봉석 산청군의회 의원과 정맹근 유족대표가 맨 처음 이끈 곳은 '지리산 빨치산 토벌 전 시관'이었다. 서 의원은 '지리산 평화의 집'으로 부르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전시관이 철저히 한쪽(토벌대)의 의견으로 편향된 서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진압 명분 하에 저질러진 군의 잘못, 통비분자로 몰아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부분이 생략돼 있고, 자기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시관에는 국군 및 유엔군 피해상황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지역에서 학살된 민간인에 대한 예기는 한마디도 없다. 아니 있기는 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은 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전쟁 사진 밑에 '인민군의 만행에 의해 죽었다'는 설명을 붙여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랬는가.

누구나 한번쯤 오르고 싶어하는 지리산, 시원한 산세와 거짐없는 맑은 물을 끼고 있는 지리산 계곡은 50여년 전에는 좌우이념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전장이었고, 산사람과 토벌대 사이에 낀 민간인들이 낮과 밤으로 고통 당해야 했던 곳이다.

49년 7월 18일, 산청군 신천면 내대리에 공비가 출현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토벌부대가 3개 트럭에 타고 출동했다. 신천리 철통바위 모퉁이를 도는 순간에 매복 중이던 당시 여순사건 반란군의 사격을 받아 토벌부대 1소대가 전멸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토벌대는 "지역주민들이 공비와 내통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을 학교 운동장에 모

은 후 뒷동산에 끌고 가 한 구덩이에 집단 학살했다. 그 뒤에도 열 명, 스무 명 씩 사살과 방화를 통해 학살한 것이 2백여 명에 이르렀다고 정맹근 유족 대표는 말한다. 이것이 덕산·신천초등학교 민간인학살 사건이다.

"남로당, 북로당 나오라"는 말에 그 게 뭐냐고 물어보니가 '남쪽에 살면 남로당이지 뭐냐고 하더라. 그 말 듣고 나간 사람은 다 죽었다'는 증언은 주민들의 죽음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음을 드러낸다. "그 당시로서는 그 지역에 산다는 것이 죄여서 빨치산이 먹을 것 달라면 줄 수밖에 없었고 짐져달라하면 안 저줄 수 없었다. 지서에서 시키면 그것도 그대로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처지였다. 그야말로 지리산 자락에 산 게 죄라면 죄였다.

시린 물을 내려다보고 서있는 산청군 내대리의 '남물주민주령비'는 "아! 아! 꿈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순간의 비명소리! 저 하늘이 울고 저 신령이 통곡하던 그 날! 시냇물이 오열하고 산새가 울부짖던 그 날!"이라 울부짖고 있었다.

산청 주민들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끌려와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1951년 설을 지낸 후(2월 하순으로 추정된다) 군용트럭을 앞세운 버스 행렬이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로 들어왔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족단위로 사람들을 실어 온 버스는 최소 11대에서 14대였고, 신흥·경북·서울 등의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이들 행렬은 도로에서 5백미터 쯤 올라간 골짜기(소정골)로 끌려갔다. 증언

에 따르면, 이때 죽음의 위협을 느낀 민간인들이 "아저씨 좋은 곳으로 살러 간다더니 이리 가면 우리 죽는 거지요"라며 울부짖었다 한다. 서봉석 의원은 이미 사망한 당시의 목격자의 말을 빌어, "구덩이 앞에 한사람씩 세워 놓고 총을 쏘았다"고 전했다. 다른 학살지역과 달리 생존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처형방식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 의원은 희생자의 규모가 최소 4백 명에서 최대 7-8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00년 5월 발굴추진위 모임이 총 6개의 구덩이 중 1개만을 발굴했다. 1미터도 파지 않아 유골이 무더기로 나왔다. 약 150여 구의 뒤엉킨 유골들 속에는 어린아이의 것도 포함돼 있었다. 나머지 5개의 구덩이는 하얀 나무판으로 만들어진 무명비만으로 그 존재를 알리고 있을 뿐이다. 폭우로 물컹물컹한 흙을 밟고 서니 그저 포근하고 따뜻한 흙일뿐이다. 그 흙 밑에 그토록 많은 원혼이 묻혀있으리라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는다. 많은 수의 사체에서 발생하는 인 성분이 성장을 방해한 탓에 나무조차 자라지 못한다는 학살현상은 아무 말이 없다.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진상규명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식조사단이 발굴하러 올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날을 기다리며 민간대책위는 사유지에 있는 학살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늘도 지리산의 원혼들은 산 자들의 의무이행을 기다리며 위령비의 위로를 빚아 누워있다. "산 사람 밤마다 옛 넘 그리워 울다가 지쳐서, 오네간장 녹였네. 이제는 밝은 광명 천지 비추니. 바람티끌 가셔지고 화려한 고장. ... 비노니 그 음어리 깨끗이 풀고 극락세계 훨훨 날아 이제는 안정하소."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23일(금)

제 21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을 위해 전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이 나선다. 20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등 26개 단체들은 오는 29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아래 협의회)를 발족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월 19일 4개 단체로 첫 모임을 가진 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준비회의를 한 결과다. 준비회의의 '조정책임자'였던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은 "(참가단체들은) 초기에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의식이 부재했"지만 "8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것이 남한사회 인권운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특히 "수도권과 지역단체들이 동시에 민간인학살 문제에

주체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에서 민간인학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92년 지역의 유족들이 유족회를 결성하고 사회적으로 발언하면서부터다. 그러다가 2000년 2월 제주인권학술회의에서 몇몇 학자들이 민간인학살 문제를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같은 해 6월과 9월 '전국 민간인학살 유족협의회'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해동 등, 아래 범국민위)가 각각 결성된다. 그리고 2001년 9월 6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아래 통합특별법)이 발의돼,

진상규명 운동은 활기를 띄게 된다. 사실 그 전까지는 거창 신원리 학살 사건, 제주 4·3사건 등 개별적인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이런 개별입법의 형태로는 한국전쟁전후 전국에 걸쳐 일어난 민간인학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범국민위는 모든 사건들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기 위해 통합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통합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소관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29일 발족을 기점으로 매주 목요일 서명전 및 선전전을 진행하며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을 전개한다. 9월 정기국회 때 통합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다. 또한 민간인학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피해실지 역사순례' 및 '2003 유족증언대회'를 지금부터 기획하기로 했다. 이영일 소장은 "유족들은 사회적인 냉대와 사회단체의 무관심 속에 (진상이 규명되길) 50년 동안 기다려 오면서 지쳐있"지만, "협의회 발족에 크게 고무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제시대 친일세력들이 미군정 시기 친미세력이 되어 미국의 반공 주장을 등에 업고 애국자가 되는 한국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민간인학살은 일어났다. 이들은 그 후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으로 자리잡으며, 70년대 베트남 민간인학살, 80년 광주학살 등을 반복한다. 따라서 '친미-반공-애국'이라는 등식의 논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은 언제나 재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 "남한사회의 인권운동의 본질은 민간인학살에서 비롯된다"라는 이 소장의 주장은 협의회 발족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범용)

만화사랑방

이동수



공정한 게임을 위하여 '의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기~한연장! 짹짹~ 짹 짹 권~한강화! 짹짹~ 짹짹!!

###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할당제’에 대해 심도깊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 총장은 지역할당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전국의 각 군에서 1~2명씩 입학시켜 전체 신입생의 10% 정도를 지역에 할당하는 정도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결과, 서울·수도권·광역시 출신은 전체 신입생의 74%, 특히 서울 출신은 38.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2000년 시도별 학생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일반계 고교생은 전체 학생의 25.3%였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14일 성명에서 “최근 몇 년간 서울대 입학생들이 대도시 출신과 부유층 등 특정지역과 계층 출신에 집중돼 왔던 것은 우리 교육의 왜곡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역할당제에 대해 “소의 계층에 대한 배려의 차원 뿐 아니라... 왜곡된 교육 구조를 탈피하는데 국립 서울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판단했다. 또 시험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일정한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아 “질 높은 대학교육을 통해 학문적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지역할당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은 전교조도 인정하고 있었다. 전교조 한민중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전 국가를 사회·문화적 자본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군 단위로 일률적으로 학생을 뽑는 지역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대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비판에 대한 보완책이다. 한 사무국장은 또 “이는 한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운동연구소 배경내 상임연구원은 “대학간 서열구조 자체를 해

결하지 않으면 교육불평등은 치유가 안 된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서울대가 여전히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인재들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할당제는 “서울대 중심론을 가지고 단지 서울대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대가 국가에 의한 차등적 지원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결국 배 상임연구원은 “서울집중 현상을 없애려면 지역

에도 동일한 수준의 교수진과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할당제가 아니라 ‘지역에도 서울대와 비슷한 대학들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 허영리 사무차장은 “지역할당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것조차 시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들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교육서열을 파괴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조치’로 담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허 사무차장의 논지다. 불평등이 심화되다 못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한 합의는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용)

### “녹화사업 자료, 대통령도 못 본다?”

기무사 역지추향...당시 보안사 담당자, “자료목록 영구보존”

80년대 초 강제징집·녹화사업과 관련, 가해기관 중 하나인 기무사는 21일 ‘관련 문서를 확인하겠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실지조사를 거부했다. 의문사위가 이날 확인하려 한 자료는 보안사(현 기무사) 및 보안사 예하부대와 관련된 사망사건 11건에 관한 것들로, △전체 문서 관리지침을 알 수 있는 ‘기무사 문서관리 기준표 및 규정집’ △녹화사업과 관련해 ‘당시 보안사가 생산한 자료’ △각 사건과 관련해 ‘사령부 또는 해당 보안대 예하부대에서 생산한 자료들’이다.

지난해 12월 기무사는 의문사위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녹화사업 관련 자료들은 사령관의 지시로 90년 소각하였고, 소각량도 라면박스 5~6개 분량이었다’며 ‘관련 자료들이 폐기되었음’을 공문으로 회신한 바 있다. 또한 문서규정집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기밀사항’이라며 자료 협조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당시 녹화사업을 주관했던 보안사 담당자는 최근 의문사위에 출두해, “녹화사업 심사자 1천여명, 전체 관련자 5천여명의 존안 자료를 생산했고, 이는 철제 캐비넷 17개 분량이었으며, 이를 인수인계 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인수인계 목록은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되어 기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해, 최소한 관련 자료목록은 보관되어 있음을 전했다.

이에 의문사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기무사의 답변에 대해 “문서고를 직접 열고 녹화사업 관련 자료 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공표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대통령이 봐도 보여 줄 수 없다”,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라고 역지를 부리며 의문사위의 협조 요청을 일축해 버린 것이다.

의문사위는 “기무사가 협조를 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실제로는 문서 열람은 커녕 목록조차 검색하지 못하게 한다”라며, “이를 어떻게 협조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젠 기무사가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음을 공표하고, 기무사령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9명의 자문위원들은 의문사위의 기간연장과 권한강화 및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시민단체에서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자문위원들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김영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24일(토)

제 21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삼성 노동탄압, 1인 시위까지 시비

휴유·협박 안 되자, 4백만원 벌금 청구

삼성이 현행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1인 시위까지 문제삼아 해고자의 원직 복직 투쟁을 탄압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제의 당사자는 삼성SDI(대표이사 김순택)의 해고노동자 박경렬 씨. 박씨는 삼성SDI에서 일하던 99년 12월 노조설립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의해 2주동안 납치·감금된 적이 있다. 이후 박씨는 회사의 ‘요주의 인물’로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되다가, 2001년 3월 결국 해고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박씨가 해고된 후에도 삼성 쪽의 감시는 끝나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과 박씨의 만남을 차단하기 위해 서였다. 이에 분노한 나머지 박씨는 지난 5월 24일부터 수원 삼성SDI정문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자 삼성SDI 유광형 인사과장은 4차례에 걸쳐 박씨를 찾아와 복직투쟁 중단 등을 요구하며 3천7백만원을 제시했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삼성SDI 신경덕 상황실 과장은 박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박씨가 1인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1인 시위 현장에서는 박씨의 차안에 있던 유인물을 가져가고, ‘원직복직’ 머리띠를 강제로 풀거나 허리띠를 잡아끄는 등 1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저지하기도 했다.

결국 박씨는 생계 문제로 인해 6월 27일 1인 시위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삼성은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박씨의 1인 시위를 문제삼아 지난 2일 수원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4백만원의 벌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 쪽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의 업무방해금지

등가처분 결정이다. 당시 수원지법은 박씨 등 삼성 해고자 1백2명에게 삼성 SDI 등의 출입문 및 주변지역에서 집회, 시위, 현수막 피켓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시 1회당 50만원을 벌금

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 해고자 김성환 씨는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의 자유마저 제재하고 금지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횡포”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형식적인 법 논리에 능통한 삼성의 교묘한 대응은 힘없는 해고자 박씨에게 4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원직복직 투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공은나)

###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수많은 인파와 차량이 오가는 서울시청 앞 광장. 그곳이 내려다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휠체어에 탄 중증 장애인들이 13일째 굶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 인파와 차량 속에 속하고 싶다는 것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언제 떨어져서 죽을지 모를 위험한 리프트를 방지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앞서,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은 장애인 앞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제발’ 사과 한마디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의 대응은 잔인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는 농성을 풀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며 이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그러던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장애인전용 콜택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자기 계획대로만 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 대로, 서울시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 1백대가 운행된다고 하자. 서울에 거주하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7천여 명이니, 이들은 하루 한 번 그 택시를 이용하는데 7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정부통계만으로도 장애인 실업률은 30%를 육박하고,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가 아무리 요금보조를 해준들, 이들에게 장애인전용 콜택시는 사치스런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은 ‘사회통합’을 원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딱지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요구하는 것은 노인·아동·임산부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 다시 말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일이다.

서울시의 냉담함에 치진 장애인들이 ‘마지막 심정’으로 찾아간 국가인권위는 또 어떤가? 위원장실에서 시작된 농성을 직원휴게실로 내모는데 성공하더니, 금주 안으로 국가인권위 전자사무실에 ‘전자출입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지난 1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후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너무나 빠른 대응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속도와 성의를 장애인 이동권에 보여주시기를 기대할 뿐이다. 장애인에게 이동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가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오늘로 단식 13일째다.

#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에 청원

## 10기 한총련 3백여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한총련 학생들의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국내의 민주적 성숙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 등, 아래 범사회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진우 목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23일 아침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범사회인 대책위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유엔 ‘자유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에 청원할 사실을 밝혔다. 청원자인 이정은 씨는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제7조 1항·3항)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9월 2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올해 5월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이석태 변호사에 따르면, 3심에 이르는 법원판결의 핵심은 ‘한총련 강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한총련은 북한을 이렇게 한 이적단체다, 따라서 한총련에 가입한 이씨는 이적

단체 가입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이씨의 구체적인 활동을 문제삼지 않고 이씨가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합리화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국제인권법 중 하나인 자유권규약상 사상·양심의 자유(제18조 1항·2항), 결사의 자유(제22조 1항) 및 평등권(제26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상 위 권리가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됐음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의 폐지를 명하고 폐지 때까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재심을 통한 무죄의 선고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권고하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을 번역·공표하고 법원에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총련 관계자는 7월말까지 탈퇴서를 쓰지 않은 10기 한총련 대의원 3백50명 정도에 대해 현재 소환장 및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10기 한총련 대의원이 이번 달 들어서만 서울산업대 흥동희 총

학생회장 등 3명에 이른다.

한총련 이적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안당국은 이적규정의 서슬퍼런 칼날을 가차없이 휘두르고 있다. [범용]

### 〈용어설명〉 청원제도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청원’이란 인권침해 피해자가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구제조치를 모두 거친 후에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호소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자유권위원회에 청원을 하면, 자유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청원서와 침해당사국이 제출한 소견서, 그리고 추가적인 문서정보와 기타 조사 등을 통해 청원사건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한다.

이때 자유권위원회는 침해당사국에 적절한 구제방안을 권고하며, 침해당사국은 관행적으로 이에 대한 이행조치를 자유권위원회에 보고한다.

청원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구제조치는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에 불과하지만, 청원사건에 대한 인권적 잣대를 제시함으로써 침해당사국에게 도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청원제도는 이 밖에도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 ○ 토론회 광고 ○

◇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때 : 8월 24일(토) 낮 2시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정의행위와 형사책임  
때 : 8월 26일(월) 아침 10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관: 금숙연맹 법률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때 : 8월 26일(월) 낮 2시  
곳 : 세종문화회관 회의실  
주최: 정보통신부

◇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때 : 8월 26일(월) 낮 3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때 : 8월 27일(화) 낮 4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관: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4·3 ‘군법회의 수행인’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인권  
때 : 8월 30일(금) 낮 3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최: 제4·3연구소 등

##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발간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인권하루소식’이 보도한 인권소식이 한 권의 책으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호는 6개월 동안의 복잡한 인권소식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소수자〉의 범주로 분류하는 등 ‘색인체계’를 대폭 정비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2002년 상반기의 인권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 가격: 1권당 1만원(우송료 별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인권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단식농성이 26일로 보름을 맞았다. 다산인권센터·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 등 5개 인권단체는 단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26일 아침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측은 단식농성에 지쳐 가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장애인지용 콜택시 도입’이라는 허구적인 대책을 내놓는 등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구체적인 장애인 이동권 대책을 마련하라”고 서울시를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씨는 “지난 20일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한 후에도 서울시 측의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볼 수 없었다”며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인권의 한 영역으로서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동조 단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씨는 “다른 사회단체들도 이 문제에 보다 적극 나섰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인권단체들은 “마지막 기대를 품고 찾아온 장애인들을 천덕꾸러기로 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유감을 느낀다”라며 “장애인들의 농성을 계기로 국가인권위 전 건물에 ‘전자출입장치’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장기농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인권신장의 보루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 지난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주 내에 사고발생 원인과 사고처리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2년 8월 27일(화)  
제 21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국가인권위는 “최근 리프트 사고가 발생한 2호선 영등포구청역, 4호선 혜화역·오이도역, 5호선 군자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 등 다른 전철역의 리프트 실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사에 나서는 것이 다행”이라며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인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주영]

##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26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공소시효 배제입법은 법치주의적 방식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진정소급효 인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정소급효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에 대해 사후에 만들어진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공소시효의 취지 자체를 뒤집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 않았고 △범죄행위

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회복되지 않았고 △증거의 소멸에 의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찬운 변호사는 “오로지 공소시효 배제만으로 입법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보편적 관할, 민사상 손해배상, 불처벌 불가 원칙 등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도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도저히 드릴 수 없다”라며 공소시효 배제입법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했다.

이로써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에 대한 향후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기대된다. [범용]

○ 보편적 관할·범죄인인 전세계 어디에 있는 당사국은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불처벌 불가·범죄인을 조기 사면하는 등 처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① 어느 사형수 이야기

"사형선고를 받던 순간 나는 몸을 떨며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 이젠 내가 정말 죽는구나 생각하니 어머니 얼굴부터 떠오르더군요. ... 그러나 내가 죽는 것만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느끼며 마음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처자에게 필을 들 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인 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곤 합니다. ..."

이것은 지난 9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6년째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중국동포 사형수 전재천 씨가 보내온 편지의 일부다.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11명의 선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그는 죽어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살인한 자에 대해 살인으로 그 죄를 묻는 법의 심판은 구약성서를 비롯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고대 함무라비법전에 서부터 그 역사를 찾을 수 있다. 동시에 비록 살인의 죄를 엄히 다스리는 것은 필요하나, 결과가 인간을 또 살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오랜 역사가 있다. 한국, 미국과 달리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도 98개국에 이른다.

이들 나라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첫째 이유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효과가 없다는 점. 둘째 사형은 법적인 오류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수 있으며 그것이 오류인 경우 다시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는 사형제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사형제도의 폐지가 적극 논의되기 시작해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사형수 전재천 씨가 사형제도가 폐지돼 목숨을 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사형제도와 더불어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은 우리에게 진지한 반성을 촉구했다. 가난한 동포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빛은 비극이며 고질적인 선상폭력이 빛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91년 국정감사 때 선상폭력 관련 보고에 의하면 90년부터 불과 1년 반 새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백명을 넘어섰다. 당시 '현대판 노예선'이라 불리며 대두됐던 선상폭력문제가 한동안 잠잠해 선원들의 처지가 개선됐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페스카마호 사건은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확인시켰다. 변한 게 있다면 살인적 노동조건 때문에 한국인들은 꺼려하는 자리에 가난한 인도네시아인들이나 중국동포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 동포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전재천 씨는 군사문화가 곳곳에 스민 한국사회의 폭력을, 혹독한 선상폭력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며, 가난한 동포를 개처럼 대하는 멸시를 참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의 안타까운 삶을 잘 알고 있는 고향 중국 길림성 휘남현의 2천여 학생과 교사들이 지난 광복절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 앞으로도 가난한 이주노동자들과 동포들에 대한 멸시와 천대, 그리고 선상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2, 3의 페스카마호 사건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전재천씨를 만나러 부산구치소로 향한다.

(정귀순,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1. 죽여놓고 자살이라니...**  
의문사위, 84년 국방부가 자살로 발표한 허원근 사망사건이 타살임을 밝혀내...소속 중대 하사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으로 쏘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2발 더 쏘(8.20)/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권한강화·기간연장 의문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김대통령, 의문사법 개정 적극 검토 지시 알려져(8.20)/ 기무사, 의문사위 실지조사 거부...'녹화사업' 자료, 대통령이 와도 보여줄 수 없다(8.21)/ 의문사위, "허원근 타살 목격한 사병들이 헌병대서 '머리카락 뽑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밝혀(8.23)/ 의문사위, '녹화사업'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동행명령장 발부키로(8.25)
- 2. 며칠을 더 굶어야?**  
인권단체,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사건에 관계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청의 공개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8.20)/ 서울시, 장애인 전용 콜택시 100대를 도입, 시범운영키로→장애인단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시설"(8.21)/ 5개 인권단체, 장애인 이동권 투쟁 동조 단식농성 돌입(8.26)/ 국가인권위,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조사 착수키로(8.26)
- 3. 없는 사람에게겐 잔인한...**  
제주 한라병원, 계약직 고용안정 요구하며 5월 29일부터 파업 벌여온 노조원 108명 전원 해고(8.22)→한라병원, 경비용역업체 동원, 농성 중인 노조원 강제로 끌어내(8.25)/ 청계천 공구노점상 박봉규 씨, 거둬둔 노점상 단속에 항의, 중구청장실 앞에서 분신(8.23)
- 4. 경제특구='노동자 착취구역'**  
재경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파견근로자 무제한 고용,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면제→민주노총 입법저지활동 밝혀(8.19)
- 5. 놀부 심보, "하루라도 더 쉬는 것 못 봐!"**  
제계, 정부의 주5일제 반대의견 재천명..."법정공휴일을 17일에서 13일로 줄이고 월차·생리휴가 폐지해야"(8.22)/ 민주노총·한국노총, 주5일제 조속 도입 촉구..."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다면 파업 돌입" 경고(8.22)
- 6. 기막 : 미군부대, 기름유출 땅 오염 사실 40일 지나 통보...소과규정은 48시간 안에 통보토록 돼 있어(8.19)/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에 따른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소(8.2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28일(수)

제 21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주민등록제도는 국민통제 수단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주민의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낮 4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관으로 '국가신분증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지금까지 전개돼 온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넘어 국민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대안이 모색됐다.

먼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단일한 국가신분증제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연계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하고,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간적 존재로서 지방자치체나 시민사회 등을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국민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자신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치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회피하고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된다"라며 '초감시국가'의 출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국가감시 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해 온 헌법적 성과를 한번에 무너뜨린다"라며, 이를 '공화주의의 붕괴'라고까지 언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의 완충체로서 생활공동체인 지방자치체나 시민사회 등을 국가는 되도록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끝을 맺었다.

김기중 변호사는 "주민등록법을 지방

자치단체가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은 '신분증명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에 담겨져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민등록제도의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접근하기도 쉽고 따라서 국민이

통제하기도 훨씬 쉽다"라며,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평했다. 이어 "기존 지문날인반대 운동도 이러한 방향 속에 위치되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시라이시 타카시 씨는 지난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아래 주기네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기네트는 지금까지 일본에 없었던 국가신분증과 등록번호를 도입한 것으로, 그 이용을 93개 업무영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희망하는 자에 한해 IC카드를 발급한다. 그러나 주기네트는 중앙정부가 국민의 정보를 직접 관리한다는 면에서 (→ 2면으로 이어짐)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퍼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 / 2002년 8월/ 59쪽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지난 8개월 동안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캠페인 및 서명작업, 입법청원 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며, 시민·학생·활동가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대표적 사례와 신문자료, 참고법률 및 협약,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전문 등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시효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와 더불어 한국적 현실에서 발생해 온 '반인권적 국가범죄'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여기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작용 협약'과 '국제상실형사재판소 규정 29조 시효부작용의 원칙'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시효배제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공소시효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과 법을 용인하는 것은 미래에 그러한 범죄를 고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자료집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www.sarangbang.or.kr (최은아)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17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8)  
**창녕에서 사라진 민간인들, 아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한국전쟁 전 보도연맹에 가입해 잡혀간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른다.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돌아오지 않는 걸로 보아 죽은 건 맞는데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 어느 산에서 총살됐다, 어느 앞 바다에서 수장되었다, 어디 탄광에 매장됐다, 소문은 무성하는데 진실을 아는 이들은 침묵하고 있다.

경상남도 창녕군의 보도연맹 관련 희생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검거된 후 행방불명이 됐다. 본지 기자가 창녕군 소림, 용소, 귀동 마을 등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당시 경찰이 보도연맹이란 걸 만들어 죄 없는 민간인들을 '빨갱이'로 엮어 억울하게 죽였다고 하나같이 울분을 터뜨렸다.

권영준(76, 대지면 소림) 씨는 경찰이 48년 봄부터 마을사람들에게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고 가입을 안 하면 '빨갱이'라고 몰아부쳐 조그마한 일이라도 생기면 '개 패들'이었다고 했다. 실제 소림의 이석패 씨는 경찰이 지목한 보도연맹원이 도망가는 걸 그냥 보고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맞아 숨졌다. 그 결과 소림에서 만도 2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권씨는 "보도연맹원들에겐 도민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전쟁이 나자 경찰, 헌병들이 피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도민증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디로 끌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추측과 소문 뿐이다.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 보도연맹」(김기진, 역사비평사)은 50년 음력 6월 10일경 창녕경찰서에 잡혀온 약 1백50여 명이 마산형무소로 실려갔다는 한 유족의 증언을 실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과 보도연맹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희생자는 이 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도연맹 관련자들은 인민군이 창녕에 들어온 음력 7월 중순까지 계속 잡혀갔다. 대지면 용소의 하상근 씨는 창녕에 소개령이 내려 피난을 가려던 중

음력 7월 25일경에 잡혀갔다고 한다. 또한 보도연맹으로 창녕경찰서에 잡혀있던 중 가까스로 풀려난 김재섭(약 10년 전 부산에서 사망) 씨는 "경찰서 마당에 잡혀와 있던 사람들을 트럭 한 대 분이 되면 밤에 트럭에 태워 덮개를 씌워둔 어디론가 보내곤 했다"는 말을 했었다고 같은 마을에 살던 권영준 씨가 전했다.

유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들은 소문은 이들이 '화왕산(창녕 소재) 작골 안에서 총살됐다' '송현동에서 총살됐다' '마산 앞바다에 수장됐다' '울산 앞 바다에 수장됐다' '거제 앞바다에 수장됐다' 등 다양했다. 당시 잡혀간 사람들의 행방을 찾기 위한 시도는 4.19 혁명이 일어난 60년도에 있었지만 유족들의 노력은 결실을 볼 수 없었다.

☞(79, 현재 서울거주)씨에 따르면 60년 7월 25일에 창녕유족회가 결성됐는데, 이날 유족회는 창녕경찰서로 찾아가 한국전쟁 당시 잡혀간 사람들의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경찰서장은 8월 1일경에 답을 줄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의 기회를 잡았던 유족들의 희망은 며칠 뒤 있었던 '7.29 사건' 이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사건의 발단은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를 지냈고 48년부터 50년까지 경상남도 사찰국장을 지내면서 창녕의 보도연맹 조지를 총괄했던 신영주 씨의 국회의원 출마였다. 당시 떠돌았던 말로 '출마해선 안될 사람'이 출마해선 거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창녕군민 2만 여명이 이에 항의해 경찰서로 몰려간 것이 7.29 사건이다. 그러나 창녕군민이 신영주를 붙잡아 다시는 출마하지 않을 것' 등 5개항의

합의를 받아들인 사실이 동아일보 등 전국 신문에는 '빨갱이의 인민재판'으로 보도됐다. 이후 사랑장소와 사망일시를 알려주겠다고 했던 경찰서장은 도망쳤고, 유족회 대표였던 ☞씨는 7·29 사건과 관련 구속됐다. 또 ☞씨는 61년 5.16 쿠데타 후 유족회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 감옥에서 2년을 살아야 했다. 7.29 사건 이후 유족회 활동은 중단됐고, 이후에도 감히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씨는 정부 차원의 탄압 외에도 유족회가 다시 활동할 수 없던 이유가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는 신영주 계통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로 당선돼 창녕에서 86년까지 12년 동안 공직에 있었던 ☞씨는 그 때 잡혀간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아는 사람이 오랜 기간 권력을 누렸고, 그 중에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씨에 따르면 CIC(특무대), 경찰, 민간대표로 구성된 이들이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잡아 들여 처리했는데, 이중 CIC 대장, 경찰 2명, 민간대표 1명이 아직 살아있다고 했다. 더구나 당시 민간인 대표 성모(79, 현재 서울거주) 씨는 ☞씨의 동창이라고 한다. ☞씨는 창녕에 살 때부터 지금까지 형이 언제 어디서 죽었지만 알려 달라고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성씨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한 불이익과 탄압으로 또 혹시나 지식들에게 피해가 올라 염려하며 이름을 밝히지 말라던 ☞씨는 "이 사람들이 양심선언은 죽어도 안 하니 법이 통과되면 모를까 그전에는..."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공은나]

(☞ 1면 '주민등록' 기사에서 이어짐)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며, 일본 국민 모두는 '앞으로 주기네트의 이용이 확대될 것이며 IC카드도 의무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시라이시 씨는 전했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29일(목)  
제 21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청계천 노점 단속, '용역깡패' 동원 의혹 인근 가게 상인들, "단속이 심했다" 입모아

박봉규 씨의 분신과 관련, 서울 중구청의 노점상 단속이 지나치게 심했다는 것이 청계천 인근 상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23일의 단속은 그 이전 박 씨가 구청에 항의한 데 대한 보복적 성격이 짙고, 당시 용역깡패로 보이는 사람들이 단속반원으로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씨는 8월 한달 동안 세차례나 노점상 단속을 당한 후 지난 23일 '서민을 돕겠다던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가'라는 편지를 이명박 서울시장에 보낸 한편 중구청을 찾아가 '왜 없는 사람 괴롭히냐'며 분신을 시도했다.

박 씨가 노점을 해온 청계천3가에서 청소기용품 가게를 하는 고영석 씨는 28일 "당시 직접 단속에 나선 사람들은 구청 직원이 아니라 용역깡패로 보였다"라고 밝혔다. 전업사를 하는 김모 씨도 "박 씨 노점 물건을 갖고 가지 말라고 옆에서 말리니까, 그들이 우리까지 양옆에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상인 역시 "그 사람들 '주먹'이더라"라고 잘라 말하며 김 씨는 단속반원들을 말리다가 맞을 뻔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고 씨는 "23일 단속반원들은 리어카 위에 실린 모든 물건을 다 갖고 갔다"라며 "21일 단속을 당하고 난 후 아저씨가 구청에 가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더 심하게 한 것 같다"라고 풀이했다. 김 씨에 따르면, 평바닥에 물건을 내려놓으면 안된다고 해서 박 씨는 리어카 옆면에 걸이까지 새로 잠깐했는데 구청 단속반원들은 21일 걸이에 걸려있는 물품들을, 이어 23일에는 리어카 위의 물건

모두를 가지고 갔다. 당시 박 씨의 노점은 보행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푸른 선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을지로3가 파출소 정은일 경사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청이 심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임을 인근 상인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구청 건설관리과는 "단속반원은 구청에 고용된 일용

직 직원이며, 단속 시엔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는 보도상에 적지던 물건만 수거했다"라고 주위 목격자들과 상이한 주장을 폈다.

한편,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박 씨는 현재 의식이 희미하고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청계천 인근 노점상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목이 메서 말을 못하겠다"는 등 박 씨의 분신에 대해 다들 남의 일처럼 생각지 않는 분위기였다. 오늘날 1시 동대문운동장 앞에서는 대책없는 노점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이주영]

### 경제특구 '망상', 전국 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제정경제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인권·여성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아침 10시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의 경제특구 발상은 '망상'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특구법안은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파견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생리휴가·월차휴가의 보장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예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제특구의 문제가 '특구'에만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경제특구법안의 적용을 받는 외자기업이 IMF 이후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지난해 '사내하청 노동자 폭행사건'으로 잘 알려진 (주)캐리어를 거론하며, "국내 기업으로 알려진 상당수가 외자기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외자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특구법안의 적용대상이 '지역'인지 '기업'인지 명확치 않은 것도 문제다. 외자기업들이 지원과제이나 장기출장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 특구 외부에 있던 외자기업들이 본사를 특구 내에 설치해 경제특구법안의 적용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이, 노동착취가 정당화되는 경제특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완전히 말살된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며, "재경부는 경제특구 외국기업의 노동법 제외 망상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다음달 3일부터 비정규노동자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환경단체까지 망라하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범용]

17일째 '장애인이동권' 쟁취 단식 농성중인 최재호 씨를 만나...

### "성과 못 내더라도 후회없이 싸울 생각"

국가인권위 접거 단식농성 17일째, 최재호(38·지체장애 3급·장애인실업 자종합지원센터) 씨는 걷기가 힘들만큼 몸이 쇠약해졌다. 처음 9명의 동료들과 함께 단식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박경석 대표와 단둘이 남아 있다.

이번 농성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발산역 리프트추락사고'에 대해 서울시 측은 여전히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사고원인이 사망한 장애인의 부주의'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책임을 인정할 경우 뉘파를 문제'에 대한 고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 완강한 태도는 농성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앞이 안 보이는 게 답답하기도 해요.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니까요." 그러나 서울시의 무반응이 농성자들의 결의를 꺾지는 못하고 있다. "처음엔 좋은 결과를 내고 나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못 내더라도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추후 이 투쟁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하되, 지금은 단식 투쟁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최 씨의 결의에선 자못 '여유'가 느껴진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의 사과를 받아야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그날 최선을 다한다면 성과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당하다면 다 우리편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시 투쟁에 나설 때 그들은 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준비'로써 이번 투쟁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단식을 진행하는 동안, 최 씨에겐 개인적인 '사건'도 하나 벌어졌다. 단식 15일째였던 26일은 아버지의 생신이었다. 그는 하루 전에 미리 선물을 들고 집에 다녀왔다. "단식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죽을 먹으라'며 1시간 동안 저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부모님께, '나 자신과의 약속이니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괜히 어머니 가슴에 멍을 지운 것 같아 마음 아프지만 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나니까 누구보다 이 일에 대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단식농성까지 진행할 만큼, 이동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질문에 최 씨는 "장애인에게 이동권과 접근권은 교육, 노동, 사회통합 등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좋은 시설만 만들면 됩니까. 시설이나 공공기관까지 갈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사실 '배려'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면 어차피 돈이 드는데,

이왕이면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나 장애인들 모두 '장애인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답했다.

1년 사이 두 차례나 경찰서 신세를 질 정도로 최 씨는 빠짐없이 이동권투쟁에 참석해왔다고 한다. "당당한 장애인활동가로 서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는 이미 전투적인 장애인활동가였다. 이제 그가 서둘러 단식을 끝내고 편한 잠을 청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시가 '책임'만 인정한다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창조]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 사회권 운동의 국제 연대 한발짝 앞으로

다양한 사회권 관련 단체들의 국제 연대를 위한 조직이 올해 11월 멕시코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지난 2년 동안 두 번의 사전준비회의를 거쳐 현재 임시이사회와 사무국, 네 부문의 실무그룹을 구성한 상태. 전세계 사회권 관련 단체들이 운동 전략을 나누며 공동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것이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주요 목표다. 이에 따라 11월 5일-8일 동안 열릴 멕시코 회의에서는 현 시기 사회권 운동의 공동 과제를 확인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주제별로 인권적 관점에 기초한 운동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실무그룹은 '여성과 인권', '발전권', '에이즈와 건강권', '사회권의 법적 실현'에 관한 4개의 워크숍을 주최한다.

지난 8월 19일 방콕에서는 아시아 지역 단체들의 사전준비회의가 열렸다. 국제사회권네트워크의 아시아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포럼-아시아(Forum-Asia)가 주최한 이 회의에는 전통적인 인권단체를 비롯해, 빈곤·식량·여성 등 10여개 운동단체들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국제사회권네트워크에 대한 소개와 참석한 단체들의 사회권 운동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현재 포드재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할 방안을 멕시코 회의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오후에는 멕시코 회의, 특히 주제별 워크숍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설정과 향후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운동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을 가능케 할 '선택의정서' 채택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사회권의 법적 실현'에 관한 워크숍에서 다루는 데 합의했다. 또한 '발전권'에 관한 워크숍에서는 IMF나 WTO 등의 국제기구 혹은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사회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번 방콕 회의에서 현 시기 사회권 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주목한 것은 사회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이였다. 이를 위해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권운동의 시급한 과제를 확인했다.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가 진보적 인권이론과 실천을 창조해내는 장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사회권의 관점에서 다양한 운동의 전략과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허혜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국가권력이 장기수에게 행했던 사상 전향공작의 비인간적인 실체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활동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29일 1970년대 교도소에서 사망한 최석기, 박용서, 손윤규 씨가 당국의 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은 의문사위에 진정된 5건의 장기수 옥중 사망 사건 중 일부다. 61년 출범 이후 줄곧 좌익수를 관리해온 중앙정보부는 법무부와 공조, 73년 8월 6일 대전·대구·광주·전주

등 전국 4개 교도소에 전담반을 설치, 전향공작을 강화했다. 앞서 법무부는 73년 6월 5일 '전향공작 전담교회사'를 공개 채용했다. 이 때는 53~55년 사이 구속, 무기징역을 살던 좌익수의 상당수가 60년 4·19 혁명 이후 20년 형으로 감형을 받고 출소를 앞둔 시점이었다. 의문사위는 "최석기 씨는 74년 4월 4일 대전교도소의 좌익수형자 특별사동 내 격리사동 1방에서 폭력사범 조모 씨 등으로부터 전향을 강요받으면서 입에 수건이 물린 채 몸 전체를 구타 당하는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날 저녁 8시 5분에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당시 격리사동에서 순찰근무를 했던 교도관 전모 씨 등 교도관 2명과, 비슷한 시기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수형자 3명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다. 그러나 당시 교도소는 최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은폐했다. 의문사위규명위에 따르면, 대전교도소는 73년 8월 6일 전향공작반을 구성했고 격리사동 중 1방을 일반수형자로 하여금 좌익수형자를 폭행해 강제로 전향시키는 장소로 활용했다. 박용서 씨는 "74년 7월 19일 격리사동 1방에서 사망청소부 이모 씨와 교도관 김모 씨에 의해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고문을 당했고, 다음날인 20일 새벽 자신의 방에서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목과 허벅지의 동맥을 절단해 자살"했음이 의문사위규명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사체를 발견한 당시 벽에는 '전향 강요팔라'는 열서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대전교도소장 이모 씨 등과 중앙정보부 박모 씨는 전향 강요행위로 인한 자살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사후 합의했다"고 의문사위는 지적했다. 이밖에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손윤규 씨는 76년 3월 24일 전향을 강요하는 폭행에 항의해 단식투쟁을 시작, 4월 1일 교도소 측에 의해 강제급식을 당한 후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저녁 7시께 결국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위는 "대구교도소의 전향공작반 요원들은 좌익수를 폭행해 백지에 지장을 찍게 하고 내용은 임의로 기재해 전향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이들의 죽음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여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만화사랑방

이동수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19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돌 바랍니다.

# '학살규명 특별법' 촉구운동 본격화

##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서울역 목요 거점투쟁 전개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전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아래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아침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전국 26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에 돌입했다.

사회단체협의회 이영일 집행위원장은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된 지 일년에 다 돼 가는데 여전히 책상 속에 잠자고 있다"라며,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라고 밝혔다. 사회단체협의회가 소속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해동 상임대표는 "반세기가 넘도록 민간인학살의 진상은 땅 속에 묻혀 있다"라며, "진실을 묻어둔 채 역사가 바른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회단체협의회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 김은식 사무국장이 참석해 연대의 발언을 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가가 의지가 있다면 진상규명은 빠른 시일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며, "생존자가 1명이라도 살아있는 지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증언자도 이미 한계수명에 다다른 고 있다.

또한 강화·교양·여수·산청·문경·거창 등 전국 각지의 유족들 30여 명이 참석해, 사회단체협의회 출범을 축하했다. 유족들을 대표해 강화유

족회 서영선 회장은 "50년이 넘게 입도 열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했다"라며, "억울한 것은 우리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자"라고 힘을 북돋웠다.

끝으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출범선언문에서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와 언론, 지식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침묵한 한국전쟁의 민간인학살 문제를 사회 전면에 부각시키려 한다"라며 사회단체협의회 출범을 선언했다. 이후 사회단체협의회는 유족들과 함께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서울역 광장에서 목요 거점투쟁을 전개한다. (범용)

###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필요없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4명, 시의회 기습 시위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멈추지 못했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전날 서울시장 장애인들에게 호소한 보도자료에 대해 "자기변명과 ... 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발산역 리프트 사고로 사망한 윤재봉 씨의 장례식장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 삶'의 안타까운 실상을 분명히 보았으며 동정을 표시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 무료셔틀버스 및 심부름 센터 운영,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권연대는 "서울시장은 자신이 시장후보 때 시민의 자격으로 윤재봉 씨의 장례식장에서 행한 일반적인 조문과 공적인 위치인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구분 못하고 있다"라며, "값싼 동정은 필요 없다"라고 힐난했다.

또한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의 연차적인 확충은 지난 해 고건 전 서울시장이 발표한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고 무료셔틀버스·심부름센터 등은 수년 전부터 실시해 온 효과 없는 정책이라며, "기존의 미봉적인 정책을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인양 선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단식 18일째인 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 등 장애인들은 같은 날 오후 서울시의회를 방문하려 했다. 심재옥(민주노동당) 시의원이 질의한 '발산역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 여부에 대해 서울시장의 답변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소란의 우려'를 이유로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한편 시의회에 들어간 이동권연대 소속 비장애인 4명은 현수막을 펼치고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다 끌려나왔다.

이날 이 시장은 '소외된 계층과 장애인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나가겠다'며, 심 의원의 질문의 대해 핵심을 비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공은나)

###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수지김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 21명이 공소시효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웅(한나라당), 송종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작용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공소시효부작용 촉구 건의문을 통해 "수지김 사건이나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등은 우리 사법정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소시효' 조항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한다면, 진정한 법적 정의가 뿌리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범죄에 있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하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공은나)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8월 31일(토)

제 21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녹화사업 담당자 서익남씨 '공개수배'

### 자료제출 거부, 소각 후 잠적...의문사위 한계 여실히 드러나

3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전 보안사 3처5과장 서익남 씨 집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씨를 언론에 알려 '공개수배' 했다. 보안사 3처5과는 80년대 초 녹화사업 전담 부서. 서씨는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당시 개인 업무일지의 존재가 의문사위에 알려지자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침 10시 의문사위 앞에서 '스타렉스' 승합차 한 대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을 향해 황급히 떠났다. 의문사위 소속 조사관들이 서씨의 집을 실지 조사 해, 문제의 업무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서씨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의문사위 조사관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조사관들이 서씨의 업무일지를 본 것은 19일 밤이다. 그때 서씨는 83년 군에서 의문사한 김두황 씨와 관련해 조사를 받다가, '자신이 김두황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일지를 보여줬다고 한다. 업무일지에는 김두황 씨에 관한 내용이 없었지만, 83년 3월말부터 3개월간 당시 보안사령부 등이 진행한 녹화사업 과정이 개인별로 빼곡이 정리돼 있었다. 이에 의문사위는 20일 서씨에게 업무일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다음날 서씨로부터 받은 것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한과 업무일지를 소각하는 사진 3장이었다. 이후 서씨와의 모든 연락은 끊어졌다.

의문사위 박래군 조사과장은 "우리는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도, 자적을

조회할 수도 없고, 계좌추적도, 압수수색도 불가능하다"라며, "눈앞에서 역사적인 기록물을 확인해 놓고도 입수할 방법이 없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서씨가 잠적했으나 추적할 방법도 따로 없다"라며, "현재로서는

(서씨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했다.

의문사위가 서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서씨의 업무일지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진실을 캐기 위해 서익남 씨를 아는 분은 의문사위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박 과장의 애처로운 호소로 30분 정도 진행된 실지조사는 마무리됐다. 의문사위 전화 번호는 02-3703-5980. (범용)

##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된다

천신만고 끝에 시작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미완의 청산작업으로 끝나 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의문사위원회에 접수된 83건의 사건 가운데 고작 26건만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9월 중순이면 위원회 조사활동의 법적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제사건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 탓이 아니다.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완강한 저항과 그에 비해 보잘것없는 위원회의 권한 때문에 애초부터 온전한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꿈이었다.

군·검찰·국정원 등 핵심권력기관들은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는 필사적인 자세로 위원회의 조사에 저항했고, 현직 국회의원 정영근·최연희·유홍수, 현직 검사 정윤기·최광태·명동성 등 관련 인물들 역시 위원회의 소환이나 동행명령장에 쿡방귀를 뀌 뿐이었다. 어둠 속에 자라나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세력들의 저항을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고작 '과태료'나 부과할 수밖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위원회가 어찌 소임을 다할 수 있었겠는가? 80년대 녹화사업과 그 희생자들의 진실을 담아둔 자료들을 소각하고 잠적한 전 보안사 과장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자진출두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제라도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의 권한을 갖는 특별검사를 위원회에 두고,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조사기간만 연장할 경우, 100년을 조사해 본들 감춰진 'X파일'은 찾아낼 수 없다. 범죄 관련자들에게 대한 공소시효 배제도 명문화해야 한다. 그들이 진실 앞에 입을 막는 까닭은 '처벌'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 '기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단지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제도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의 출발이다. 이제 남은 시한은 보름. 어렵게 시작한 정의로운 작업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다.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20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 이달의 인권 (2002년 8월)

## 흐름과 쟁점

**1. 의문사 조사, 마감 초읽기...가해기관, '배째라' 노골화**  
 의문사위가 다음달 16일 조사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부족한 조사권한과 시간에 허덕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4년 자살로 발표됐던 허원근 씨는 중대하사관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밝혀졌고(8. 20),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은 70년대 전향공작 중 폭행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8. 30) 그러나 가해기관들의 '배째라'식 태도는 진상규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기무사도 의문사위의 실질조사를 거부했다. (8. 7, 8. 21) 노동자 문용섭 사건 담당 검사였던 명동성 씨는 두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8. 8), 80년대 초 강제집진·녹화사업 당시 최고통수권자인 전두환 씨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8. 10) 한편, 녹화사업 담당 보안사 과장이었던 서의남 씨는 '관련 자료를 소각했다'고 통보한 후 아예 잠적해 버렸다. (8. 26)

**2. 듣고 있는가? 과거청산의 절절한 요구를...**  
 계승연대 등은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조항 삭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촉구하고(8. 20), 의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8. 30) 의문사위 자문위원들 역시 같은 취지의 법개정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8. 21) 이러한 흐름을 타고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가인권위는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를 열었고,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8. 26) 한편, 전국 26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를 결성,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역 목요 거점 투쟁에 돌입했다. (8. 29)

**3. 이명박 서울시장 사전에 '사과'란 없는가?**  
 발산역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장애인들의 목숨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발산역 참사에 대해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를 거부했다. (7. 29) 이에 이동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접거, 서울시에 발산역 참사에 대한 공개 사과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8. 12) 13개 인권단체들은 이동권연대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8. 20), 그 중 5개 인권단체들이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8. 26) 이 시장은 △발산역 사고 사망자의 장례식장을 방문했고 △'휠체어콜택시' 도입 등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8. 28) 하지만 이동권연대는 '시장후보로서 행한 조문과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들어가 발산역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8. 29)

**4. 노동자·서민 죽이기 용병, 용역깡패**  
 용역깡패(사설경비)들이 공권력과 기업의 묵인 하에 노동자와 서민을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민국당 강숙자 의원)이 소유한 서울온천에 용역경비들이 난입, 농성 중인 노동자를 폭행했다. (7. 13) 제주 한라병원 역시 경비용역업체를 동원, 파업을 벌여온 노조원을 폭행하며 강제로 끌어냈다. (8. 25) 청계천에서 공구를 파는 노점상 박봉규 씨는 8월 한달 동안 3차례나 단속을 당하자, 서울 중구청에서 분신으로 항의했다. (8. 23) 인근 상인들은 중구청의 노점상 단속 때도 용역깡패가 동원됐다고 말했다. (8. 28)

**논평**  
 ·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8. 3)  
 · 사면의 역설(8. 10)  
 ·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8. 24)  
 · 의문사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된다(8. 31)

**인권이야기**  
 ·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8. 6/윤현식)  
 · 세상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8. 13/진영중)  
 ·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8. 20/윤현식)  
 · 어느 사형수 이야기(8. 27/정귀순)

**인권정보자료**  
 ·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8. 8)  
 · 「서준식 옥중서한 1971-1988」(8. 15)  
 · 「유엔과 인권 꾸러미」(8. 22)  
 ·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8. 28)

**기획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5)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8. 7)  
 (6)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8. 14)  
 (7) 산청 학살, "지리산 자락에 산 게 죄였다"(8. 22)  
 (8) 창녕에서 사라진 민간인들, 아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다(8. 28)

**기고**  
 ·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8. 8/오태양)  
 ·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8. 10/김병수)

**중요 판결 및 결정**  
 · 부산지법 민사6부, 학내 집단 괴롭힘 때문에 숨진 학생의 부모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의 배상책임 인정 판결(8. 1)/· 국가인권위, 외국인 추방 시 구제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출입국관리소에 권고(8. 13)/· 행정법원, 보험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라는 판결(8. 9)/· 서울지법, 선천성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체벌로 초등학생에게 뇌출혈이 일어났다면 해당기관에 배상책임 있다는 판결(8. 12)/· 행정법원, '회사 내 집단 따돌림과 퇴직 중용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 판결(8. 14)/· 행정법원,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 기각(8. 14)

# 인권하루소식

## 2002년 9월

## (제2167호 ~ 제2184호)